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생존’에 밀리는 기후·환경

-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의 기후·환경 인식 및 가치관에 대한 질적 연구 -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 전공

신 혜 정

‘생존’에 밀리는 기후·환경

-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의 기후·환경 인식 및 가치관에 대한 질적 연구 -

지도교수 윤 순 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 전공

신 혜 정

신혜정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위 원 장 한 숭 희 (인)

부위원장 윤 순 진 (인)

위 원 김 남 수 (인)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데 비해 대응과 실천은 약한 한국의 기후대응 여론 및 행동 양상을 기후회의론의 일종인 대응회의론으로 바라보고, 참여자 4인에 대한 주제중심 생애사의 질적 접근을 통해 대응회의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를 탐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다는 공통점을 가지는데, 이 연구에서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을 박정희 체제기인 1970년대를 시간 고향으로 삼아 강한 성장·국가주의와 반공의식을 공유하는 하나의 정치 세대단위로 바라보고 접근했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대응회의론 중심에 생존주의에 기반한 국가·성장주의가 자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위태로운 분단 상황과 세계 속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단히 발전해야 한다는 생존주의에 기반한 성장주의 세계관은 국가와 인간 중심의 위계적 존재론과 사회진화론의 선형적 역사관에 기반한다. 여기에서 기후변화는 문제화되지 않고, 환경은 주변화되고 타자화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일차적으로 국가 중심의 문제해결 담론으로 기후·환경 문제에 접근한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풀 수 없는 기후변화 범주에서 결국 한계에 부딪치고, 동시에 이를 정당화하는 수사(“이 쬐끄만 나라에서 뭘하겠어”, “중국을 봐”)가 나타나며, 참여자들은 지구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한다. 이 연구는 장기적인 지구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당장의 생존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는 참여자들의 생존주의를 ‘체념적 생존주의’라 이름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생존주의 가치관은 전쟁·전후의 혼란과 빈곤이라는 삶의 경험에서, 국가의 생존지향적 발전주의 통치와 제도

의 내재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생존주의 가치관은 참여자들과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태극기 집회, 보수 유튜브 등의 해석·학습공동체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생성되고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사건들을 기존의 해석 도식에 맞추는 '동화' 차원에서 학습을 지속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후·환경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은 이러한 한국 사회·집단·개인의 요철을 고려하여 계획될 필요가 있다. '알면 행동할 것'이라는 계몽적 교육은 유효할 확률이 낮다. 한국전쟁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흐려지고 있으나, 분단 체제와 생존주의의 작동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동화' 차원에서 성장주의 학습을 지속하는 것이 비단 참여자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교육의 모습은 아닌지를 물을 수 있다.

기후·환경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대응회의론 인식과 내러티브는 참여자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곳곳에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관찰된다. 다른 집단과 다른 세대에서는 어떻게 대응회의가 형성되며 어떤 논리로 뒷받침되는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추후에도 대응회의와 생존주의의 다양한 결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주요어: 대응회의론, 기후회의론, 생존주의, 성장주의, 태극기 집회
학 번: 2021-23691

목 차

Ⅰ. 서 론 ····· 1

Ⅱ. 이론적 배경 ····· 3

1. 대응회의론 ····· 3

2. 생존주의 ····· 8

3. 태극기집회 ····· 9

Ⅲ. 연구 방법 ····· 16

1. 주제 중심 생애사 ····· 16

2. 연구 절차 ····· 17

가. 참여관찰 ····· 17

나. 참여자 모집 ····· 17

다. 자료수집과 분석 ····· 19

Ⅳ. 연구 결과 ····· 22

1. 생존의 시대 ····· 25

가. 어린 시절 - 생존주의의 기층 경험 ····· 25

나. 청장년기 - 생존주의의 형성 ····· 31

다. 현재 - 생존주의의 학습 ····· 43

2. 생존에 밀리는 기후·환경 ····· 51

가. 문제화되지 않는 기후변화 ····· 51

1) “기후변화 심각하지” ····· 51

2) “근데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위기가 있어” ····· 55

3) “성장은 계속해야되는거야” ····· 57

나. 주변화·타자화되는 환경 ····· 63

1) “환경은 사소한거야” ····· 63

2) “환경은 좌파야” ····· 68
다. 생존주의의 환경담론: ‘생존’ 할 수 없는 생존주의 73
1) 국가차원의 문제해결 담론: “뭘 하긴 해야돼” ···· 75
2) 국가차원 문제해결의 한계:
“중국을 봐” / “이 쬐끄만 나라에서 뭘하겠어” 81
3) 생존주의 또는 프로메테우스주의:
“이러다간 다 죽어” / “발전은 영원할거야” · 85
3. 체념적 생존주의 ····· 91

Ⅴ. 결론 ····· 98
1. 연구의 요약 ····· 98
2. 연구의 시사점 ····· 99
3. 향후 과제 ····· 101

참고문헌 ····· 103
Abstract ····· 114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 기본 사항 ····· 18
표 2. 인터뷰 기본 질문 ····· 19
표 3. 드라이젝의 환경담론 분류 ····· 74

Ⅰ. 서 론

“기후 위기요? 음…. 180위쯤 될 것 같은데요.“
- 지난 3월 한 언론에 인터뷰한 시민, ‘기후위기가 자신의 의식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에 답하며

한국인의 기후위기 인식은 세계 선두 수준이다. 2021년 한국갤럽, WIN의 기후변화 인식에 관한 34개국 설문 결과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다’에 동의하는 한국인은 94%로, 34개국 평균(85%)을 웃돌았다. 최근 몇 년간 긴 장마, 태풍과 폭염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한국에서도 체감할 수 있게 되면서 언론의 기후변화 보도도 급증했다. ‘기후변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 건수(빅카인즈 54개 언론사)는 2020년 15,330건으로 녹색성장 붐이 일었던 2009년의 역대 최고치(15,455건)에 근접하더니, 2021년에는 26,946건으로 최고치를 훌쩍 경신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범주에서 벗어나 다른 사회 문제들과 경합할 때, 기후변화는 순식간에 뒤로 밀려난다. 세계일보의 2022년 설문에서 “1년 안에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경제성장이 압도적으로 1순위였고, 실업과 저출산, 고령화와 빈부격차가 뒤를 이었다. 8가지 문항 중 기후변화는 뒤에서 두 번째였다. 2022년 대선 후보 선택에 있어 기후변화·환경 공약을 1순위로 고려했다는 응답자는 2.9%에 불과했다. 2020년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이 국정 과제로 대두되었지만, 여전히 기후대응을 위한 전환은 요원해 보인다.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가 2022년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한국은 63개국 중 6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왜 알면서 행동하지 않는가? 울리히 벡(Beck, 1992)이 근대화와 성장으로 말미암은 위험사회의 극복을 이야기한 지 3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위험사회를 예증하는 풍경들은 더 늘어가는가? 이 연구에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데 비해 대응과 실천은 약한 한국의 기후대응 여론을 기후회의론의 일종인 대응회의론(response skepticism;

Capstick & Pidgeon, 2014)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해 질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거대한 대응회의라는 철의 장벽, 다른 말로 하면 다양한 '보통'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 또 그와 상호작용하는 사회 문화 및 구조에 대한 이해가, 기후대응을 위한 참여적 전환의 과정에서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에 선행 또는 동기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초점은 60대 이상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에 두어진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출현한 태극기 집회는 이념적으로나 세대적으로 극단에 있다고 여겨진다. 출현 초기 일각에서는 '비상식적'인 집합으로 인지되었던 이들 집회는 분화와 생성을 거쳐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태극기집회는 특히 강한 국가주의, 권위주의, 반공주의를 드러내고 가치 지향이 박정희 시대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보수 일반에서 차별적으로 분화된다(양웅석 외, 2018). 이 연구에서는 전상진(2018)의 정의를 빌어, 한국 국가·성장주의의 모태가 형성된 박정희 체제기, 1970년대를 시간 고향으로 삼는 하나의 '정치 세대 단위'로 태극기 집회를 바라본다. 한국 대응회의론의 배경의 중심축에 성장주의가 있음을 가정할 때,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에서 한국 대응회의의 연원과 흐름의 한 축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에서 고찰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참여자들의 기후·환경 인식과 그 기반 가치관은 어떠한가?
2. 참여자들의 인식 및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어 유지되고 있는가?
3. 1번과 2번은 기후대응과 환경교육에 있어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

이 연구는 첫째, 국내에서 아직은 희소한 기후·환경 인식의 심층 가치관에 대한 질적 연구로서, 둘째, 환경교육의 사회생태학적 접근을 택해 학습자의 가치관을 질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평생학습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를 통해 기후대응에 있어서 포괄적 소통 및 참여적 전환을 위한 가능성을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응회의론

2021년 9월 탄소중립위원회가 주최한 탄소중립 시민회의의 시민토론단에서 현재 삶의 질이 낮아지더라도 탄소중립 비용을 감수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15.4%였다. 다른 이들 가운데 45.8%는 '현재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 수준에서는 감수할 수 있다', 35.8%는 '나와 내 가족이 혜택을 받는 만큼 감수할 수 있다'로 응답했다.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거나 기후변화 원인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기후변화 회의론이 한국 공론장에서는 크게 대두된 바 없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실천에 대해서는 대부분 침묵하거나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양상을 일종의 기후회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희제, 허주영(2012)은 설문 분석을 통해 한국 응답자의 약 25%만을 기후변화 옹호론자, 13%를 회의론자, 절대다수를 중도 입장으로 분류한 바 있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데는 대다수가 동의하지만, 적극적인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2011)에서 응답자의 약 80%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기후는 늘 변해왔고 인간은 이에 적응할 것이다'는 문항에 60%, '기후변화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산업활동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데에 52.8%가 동의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낙관하고, 과학기술과 정책으로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에 여론의 절반 이상이 동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남수(2013)는 기후변화 회의론과 옹호론 사이에는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해법, 개인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의 요소로 세분화했을 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며, 한국인들은 대체로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지만 대응에는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해법' 면에서는 회의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순진(2016)은 국내에서 적극적 기후변화 회의론이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기후변화 대응이 본

격화될 경우 사회적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바 있다.

일찍이 람슈토르프(Rahmstorf, 2004)는 다양한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을 세 분류로 나누었다. 지구온난화 자체를 부정하는 현상 회의론자(trend sceptics), 지구 온난화 현상은 인정하되 그것이 인간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원인 회의론자(attribution sceptics),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그다지 해롭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영향 회의론자(impact sceptics)가 그것이다. 이 회의론의 도식을 넓히기 위한 논의들이 있어왔는데, 예를 들면 노르웨이 한 지역사회에서 46명의 참여자들과 인터뷰한 노가드(Norgaard, 2006)는 참여자들이 기후변화를 믿고 걱정하지만 현실에서의 삶은 마치 그에 대해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는 듯 사는 것도 기후변화 부인(denial)의 일종으로 보았다. 이는 스탠리 코헨(2001)의 부인의 구분 - 직접적 부인, 해석적 부인, 함축적 부인 - 중 함축적 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관행적으로 따라야 할 심리적, 정치적 혹은 윤리적 함축이 무시된다는 것이다. 캡스틱과 피젼(Capstick & Pidgeon, 2014)은 람슈토르프(Rahmstor, 2004)의 회의론 분류가 기후변화의 과학적인 측면에 한정된 것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대응을 포괄할 수 있도록 회의론의 범위를 확장하기를 제안했다. 그들은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회의론을 크게 두 가지로,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기후변화 현상 혹은 근거에 대한 의심과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인식회의론(epistemic scepticism), 기후변화에 관한 대응의 효율성과 개인 혹은 사회의 대응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대응회의론(response scepticism)으로 구분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데 비해 대응과 실천은 약한 한국의 기후대응 여론을 대응회의론으로 규정하고 접근하고자 한다.

그간 기후회의론 연구의 흐름을 간략히 짚어보면, 회의론의 범위는 점차 확장되며 그 초점도 이동해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초기 10년간은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회의론이 주였다면 온난화 추세가 뚜렷해진 후반 10년은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회의론이 득세했다. 2010년대부터는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인간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는 기후변화 무대응(Climate Change Inaction)에 주목하는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

케니스와 마티스(Kenis & Mathijs, 2012)는 기후변화 관련 개인적인 실천을 하는 참여자군, 사회적인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군과 인터뷰하면서 참여자들이 기후변화의 본질과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 및 대응 전략과 비전에 대해서는 잘 대답하지 못하며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전략 회의론(strategy scepticism)이라고 이름한다. 혼지 외(Hornsey et al., 2016)은 기후변화 믿음에 대한 선행연구의 메타분석에서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는데, 기후변화를 믿는가의 여부는 사람들이 기후 행동에 나서는 데에 미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경제보다 환경을 우선해야 한다고 답하는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지만, 탄소 가격을 책정한다든지의 구체적인 정책실행에 대한 답변에서는 그 차이가 줄어든다.

기포드(Gifford, 2011)는 기후 무대응(Climate Inaction)의 심리학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연구 중 하나에서 불확실성, 낙관 편향 등의 제한적 인지, 세계관, 기술 구원, 시스템 정당화 등의 이데올로기, 사회규범과 네트워크 등 타인과의 비교 등 기후대응에의 다양한 심리적 장벽을 제시했다. 마셜(Marshall 2018) 또한 대중서를 통해 기후변화를 믿지만 행동하지 않는 인간 심리를 다각도로 분석한 바 있다. 혼지와 필딩(Hornsey & Fielding, 2020)는 기후변화를 믿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과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회의론자 각각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안한다. 한편 램 등(Lamb et al., 2020)은 기후 무대응을 정당화하는 담론들을 '기후 지체 담론(discourses of climate delay)'이라 칭하며 다른 누군가가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책임 전가 담론, 기후변화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항복 담론, 변화가 지장을 줄 것이라는 부작용 강조 담론, 혁신적이지 않은 변화를 주장하는 담론의 크게 네 분류로 정리했다.

환경적 행동을 장려하는 것은 환경교육 개념이 국제적으로 처음 합의

되었던 1977년의 트빌리시 선언 때부터 환경교육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다. 초기 환경교육 학계 논의는 지식이 인식・태도로, 인식・태도가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선형적인 '결핍'(deficit) 모델을 기반으로 했고(Ramsey & Rickson, 1977, Burgess et al., 1998). 이후 하인스 외(Hines et al, 1987)와 헝거포드와 볼크(Hungerford & Volk, 1990)는 행동 의도가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전제에 기반하여 책임 있는 환경 행동(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을 이끌어내는 요소들을 종합해 모델을 정리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지식과 인식, 태도와 의도가 있음에도 행동을 하지 않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여 이러한 태도와 행동의 간극(gap between attitude and behavior) 또는 의도와 행동간 간극(intention-behavior gap)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어왔다(Blake, 1999; Kollmuss & Agyeman, 2002; Ickes et al., 1982; WBGU, 2011; Signori & Forno, 2016). 많은 연구자들은 기존의 모델들이 개인 단위를 전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환경교육을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환경교육 연구에 있어 사회생태학적 접근(Socio-ecological Approach)을 취하는 연구들이 2000년대 초반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환경 문제와 그 해법은 사람들의 상황, 관점과 경험, 가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개인과 사회 또는 정치 집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해석 및 재해석된다는 것이 사회생태학적 접근의 기본 가정이다(Kyburz-Graber, R., 2019).

이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무대응 또는 태도・의도와 행동의 간극 현상의 배경에 대응회의론이 존재한다는 전제에 기반하여(Doan, 2016), 캡스틱과 피젼(Capstick & Pidgeon, 2014)이 제안한 대응회의론을 주요 개념으로 활용한다. 이 연구에서 대응회의론은 김남수(2013)의 해법 회의론, 실천 회의론을 종합하며 램 등(Lamb et al., 2020)의 기후 지체 담론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본다. 인식회의론도 자연스럽게 대응회의론에 포괄될 수 있다. 일례로 혼지와 필딩(Hornsey & Fielding, 2020)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이성적으로는 우려하지만 실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영향 회의론을 꼽는다. 기후변화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인간과

환경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현상과 위해성과 그것이 인간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회의하는 대응회의론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환경교육에서의 사회생태학적 접근의 문제의식과 같이 기후회의론의 연구에 있어서도 개인의 인식이나 지식뿐 아니라 가치관과 신념을, 또한 사회와 문화의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이어져왔다. 노가드(Norgaard, 2006)는 개인 단위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기존의 지각 연구가 개인이 존재하는 사회 및 개인과 사회 간 관계를 배제할 수 있음을 고려해 개인과 사회적 맥락에 동시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한다. 울프와 모제르(Wolf & Moser, 2011)는 기후변화 인식에 대한 그간의 선행 질적 연구들이 개인의 기후 인식이 기존의 문화적 세계관과 사회정치적인 맥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왔다고 정리하며, 기후변화 완화 실행에 있어서는 지식뿐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실천적(practical), 제도적 장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할티너와 사라스찬드라(Haltinner & Sarathchandra, 2021)는 기후회의론자 33명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회의론이 획일적이지 않고 각 개인의 경험과 문화적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회의론의 복잡성과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이 기후·환경 정책 결정에 대중의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 핵심적이라 주장했다. 캐롤란(Carolan, 2010)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경험적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살아있는 경험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응회의론에 접근함에 있어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식하면서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질적 연구 방식을 택한다. 또한 소규모 연구가 저비용으로 대안 커뮤니케이션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식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에서의 참여에 효과적인 요소를 밝히는데 특히 적절할 것(Wolf & Moser, 2011)이라는 논의를 수용하여 소집단 단위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2. 생존주의

김홍중(2014, 2015a, 2015b, 2016, 2017)은 생존주의를 한국사회 근대 심층에 자리한 마음의 레짐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생존주의를 "다양한 생존단위(개인, 가족, 조직, 민족, 국가)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과제로 인지하고 있는, 각종 경쟁/투쟁 상황에서의 승리를 위해 요청되는 실천들을 고무하고, 지도하고, 정당화하는 집합적 심리시스템(마음의 레짐)" (2015a: 57)으로 정의한다. 생존주의자들에게 세계는 하나의 '정글'이며, 생존에의 기여 가능성이 모든 것의 판단기준이 된다.

김홍중은 근대 한국 생존주의를 크게 세 분기로 분류하여 제국주의 질서 하 1894년 체제, 냉전 질서 하 1950년 체제, 신자유주의 질서 하의 1997년 체제로 제시하였다. 구한말 외세 침략의 충격으로 '세계는 약육강식의 정글'이라 생존을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는 '우승열패'의 세계관과 서구 사회진화론의 역사 인식이 한국 사회에 폭넓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 한국 사회 생존주의 집합심리의 기원으로, 청일전쟁, 갑오경장,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1894년을 기점으로 하여 1894년 체제라 불린다. 1950년 체제는 "한국전쟁이라는 재앙적 트라우마가 형성한 마음의 레짐"으로서 "공산권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한다는 소위 '냉전적 생존주의'의 의미론 위에 구축" (김홍중, 2015a: 61)되어 있다. 1997년 체제는 외환위기를 타개해나가기 위한 전방위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형성되는 신자유주의적 생존주의로 특징된다. 기존 레짐에 비교할 때 이 때의 생존은 국가/민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나타난다. 생존주의의 세 체제는 중첩되어 항존하며 현재로 이어진다.

그 중 1950년 체제는 전쟁이라는 심리적·물리적 초토화 과정과 이념 갈등의 혼란 속에서 "기초적인 존재론적 안전을 향한 구난(救難) 심리" (김홍중, 2016a: 61)가 형성된 것으로, 1960년대 이래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한국식 성장주의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 전쟁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명분과 예의를 중시하던 종전의 가치관을 버리고, 생존을 위해 실용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했

다. 살아남기 위한 막바지 몸부림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한국인들에게 있어 체면이나 염치, 예의 등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굴레로 인식되게 되었고 오직 생존해야겠다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관행만이 정착되어갔다" (정성호, 1999: 34). 국가와 사회 지도자들은 개인들의 생존 욕구를 산업화의 동력으로 활용했다(김홍중, 2015a). "근대로의 진입 과정에서 집합적 생존의 큰 실패와 시련을 체험한 한국인들에게 '발전'은 '생존'이 보장되어있지 않은 삶(국망, 식민지적 수탈, 한국전쟁, 절대빈곤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부강한 삶으로의 도약을 함축했다. 한국적 발전주의는 국가적/민족적 생존 불안과 결합되어 있었다." (김홍중, 2015b: 273)

이 연구에서는 연구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대응회의가 이러한 생존주의 마음의 레짐 – 1950년 체제의 냉전식 생존주의를 중심으로 1894년과 1997년 체제도 항존하는 – 이 작용한 결과로 보면서, 이 이론을 주요 자원으로 삼아 연구 해석을 진행한다.

한편 이 연구 결과의 후반부에는 드라이젝(Dryzek, 1997)의 환경담론 분류 상의 생존주의가 등장한다. 이때 생존은 자원고갈과 환경파괴 등 지구적 한계로부터의 구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맥락보다는 환경적인 맥락이 두드러진다. 이 연구에서는 드라이젝의 생존주의를 김홍중의 그것과 구분하여 생존주의*로 표기한다.

3. 태극기집회

태극기집회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정국에서 태동하여, 2016년 11월 19일(4차 촛불집회가 있던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던 2017년 3월까지 총 19차례 개최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간 태극기집회는 자유통일당, 일파만파 애국자총연합(이하 '일파만파'),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 등 5개

그룹 내외로 분화되었다. 각 그룹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며 유튜브나 밴드, 카톡 등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하고 결집하고 있다. 탄핵 정국 시 경찰이 추산한 태극기집회 참여 최대 인원은 4만 명에 달하고, 2020년 광복절 집회에는 코로나19 시국에도 불구하고 약 1만 명이 결집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2022년 광복절 집회에는 경찰 추산 2만 명, 개천절 집회에는 경찰 추산 3만 4천 명이 운집했다. 이들의 주요 정보원인 보수 유튜브 채널들의 구독자 수는 많게는 147만 명(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2023. 1월 기준)에 이른다.

'박사모'를 주축으로 한 '탄핵 무효 국민 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기존 명칭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처음으로 분화한 것은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서다(이동훈, 2019). 정당으로 대선 참여를 하자는 측(이후 우리공화당)과 시민단체로 남아 저항하자는 측이 나뉘었다. 후자는 다시 국본과 일파만파, 자유통일당, 오이박사 등으로 분화된다. 2022년 기준 가장 동원력이 큰 그룹은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개신교 기반의 자유통일당이다. 이어 군 출신이 주축이 되는 일파만파와, 탄기국 등 초기 태극기집회의 주축을 잇는다고 주장하는 국본이 엇비슷하고, 그 뒤로 30명 남짓의 오이박사(오직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만을 사랑하는 시민단체)가 있다. 2019년경에는 가장 큰 동원력을 자랑했던 우리공화당은 2022년 현재 광복절이나 개천절 등에 간헐적인 집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각개 그룹은 뚜렷한 주축(군 기반의 일파만파), 종교성(개신교 기반의 자유통일당)과 정당성(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혹은 강한 친박성향(국본, 오이박사)으로 구분되지만, 집회 후 행진 또는 광복절·개천절의 대규모 집회 시에는 서로 연합하기도 한다. 태극기집회를 초기에서부터 분화된 지금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는 '애국',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로, 저항대상은 '종북좌파', 북한'으로 나타난다(김왕배, 2017).

태극기집회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태극기집회 초기인 2017-2018년에 집중되어있다. 이들은 당시로서 새롭게 출현한 집합행동의 특성을 밝히고 다각적으로 이해해보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김왕

배, 2017; 김진욱, 허재영, 2018; 문성훈, 2018; 양웅석 외, 2018; 전상진, 2018; 장우영, 2018; 최현숙, 2017; 황선영, 2018). 선행연구들에서 태극기집회를 다룸에 있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특징은 보수라는 이념성과 고연령대라는 세대성이다.

장우영(2018)은 태극기집회 참가자 810명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문조사를 통해 참가자들의 보수로서의 강한 정치적 이념적 동질성을 확인한다. 응답자의 82.8%가 자신의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답했으며, 81.2%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태극기를 통해 '대한민국'(58.5%)과 '애국시민'(24.4%)을, 촛불을 통해서는 '종북세력(66.9%)'과 '북한(14.3)'를 연상했다. 박근혜 정부를 민주화 이후 가장 민주적인 정부(79.9%), 유능한 정부(75.2%)로 꼽았으며, 대체로 '분배정의(경제민주화)보다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전통적 경제 관념과, '집단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양보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과 안보 의식을 드러냈다.

한국 보수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반공주의, 발전주의와 국가주의, 권위주의 등으로 제시된다. 김병곤(2011)은 서구의 보수가 전통과 공동체를 중시하며 근대화에 비판적이었던 데 반해, 한국의 보수는 전후 냉전과 빈곤 속 생존을 위한 탈이념적 세계에서 발전주의와 국가주의를 앞세워 서구 근대화를 뒤쫓는 국가에 동조해왔다고 설명한다. 강원택(2005)은 보수-진보를 구분하는 데 있어 분배와 관련된 좌우의 개념, 권위와 자유주의, 근대적 가치와 탈근대적 가치, 그리고 한국의 특수한 이념 특성으로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갈등 등 4가지 범주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의 분석 결과 특히 반공 이데올로기의 거부 대 수용, 권위 대 자유주의가 한국 보수와 진보를 뚜렷하게 가르는 기준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는 이러한 한국의 이념 갈등이 박정희 체제의 유산에 대한 평가와 직결된다고 해석한다.

채장수(2018)은 보수연대가 2016년 이래 탄핵사태를 맞아 분열하면서 수구적인 반공 및 애국세력이 날것으로 노출된 것이 태극기집회로서, 태극기집회가 보수 진영 일반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양웅석 외

(2018)는 태극기집회를 특히 ‘박정희 보수’라는 한국 보수의 한 분화형의 대표적인 정치 집단이라 규정한다. 그들은 설문 분석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보수는 진보에 비해 국가주의, 성장주의, 물질주의, 반공주의적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박정희 보수는 보수 내에서도 특히 강한 국가주의, 권위주의, 반공주의, 그리고 진보 진영에 대한 강한 적대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치 지향이 박정희 시대의 유산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보수층과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장우영(2018)은 이 태극기 집단의 뿌리가 1998년 김대중 정권이 최초 진보 정부로 출현하며 그간 권력을 잃어본 적이 없던 보수층에게 패배를 안겨준 시점에 있다고 말한다. 그 이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규탄 촛불집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 진보 집권을 통해 증폭되었던 이념 갈등의 역사를 배경으로, 사회운동 조직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보수층에서 자발성 높은 태극기집회가 탄생한다고 설명한다.

태극기집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높은 연령대다. 2018년 조선일보 설문 결과 태극기 집회 참가자의 62.2%가 6-70대 이상, 33.2%가 4-50대였다. 장우영(2018)의 태극기 집회 참가자 현장 설문에서도 50대 이상이 76.5%, 특히 70대 이상이 20.8%로 나타나 태극기집회는 초고령 집회로 설명된다. 김진욱, 허재영(2018)은 태극기 집회의 원동력이 그간 노년층에 축적된 사회적 모멸감에 있다고 본다. 젊은 세대의 촛불집회가 노년층의 자부심이 되었던 시대와 가치 질서를 위협함으로 말미암아 보수적인 노년층 사이에 광범위한 모멸감이 공유되어 인정투쟁을 위한 태극기집회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김왕배(2017) 또한 태극기집회의 주체를 냉전과 산업화의 시대에 “강렬한 생존의 열망과 순종의 태도로 살아온 노인세대”(김왕배, 2017; 36p)로 설명한다.

전상진(2018)은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을 노년 연령 단계로서의 고충과 세대 코호트적 경험이 결합된 특성을 가진 정치 세대로 설명하며, 이들을 ‘1970년대를 시간 고향으로 하는 향우회’라고 표현한다. 이때 1970년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정치 이념과 가치관의 기원으로, 이 시기는

발전과 성장주의, 국가주의 등 현재에도 한국 사회에 영향력 있게 작용하는 담론과 제도의 모태가 형성된 시기로 설명된다(김원, 2011; 전상진, 2018). 황선영(2018) 또한 태극기집회를 역사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정치적 정체성 집단으로 바라본다. 참여자들의 주요 이념은 반공과 경제성장 등 박정희 통치기의 국시와 일치한다.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켜내자며 "'힘없는 자신들'을 국가의 역군으로 호명"했던 박정희에 응답하여 노동하고 복무했고, 그러면서 실제로 찢어지게 못살던 나라가 잘살게 되는 변화를 자신의 인생으로 체험한다. 그런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로 인지했으며, 박정희 시대의 업적을 자신의 젊은 날의 성취와 동기화했고, 그 동기화는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게까지 이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전상진(2018) 등의 선행 논의를 참조하여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을, 한국 성장주의와 국가주의의 모태가 형성된 1970년대를 시간 고향으로 삼으며 강한 성장·국가주의와 반공의식을 공유하는 하나의 정치 세대[1] 단위 내 집단으로 바라본다. 호덴베르크(Hodenberg, 2005)는 하나의 정치적 세대의 요체는 동년배 집단 자체가 아니라,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통 경험에 대해 헤게모니를 가지게 된 해석에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경험을 교환하며 해석 모델을 만들고, 해석 모델은 행동 모델로 이어진다. 이때 행동 준칙들의 차별화에 따라 서로 다른 세대 단위들이 생산된다. 사람은 중요한 경험을 성장기에 겪기에 특정 정치세대는 구성원들의 연령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반드시 수량화되지는 않는다(Hodenberg, 2005; 372-373).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모집에 있어서 개인 삶의 전반에서 특히 성년 전후(17세~25세)라는 '민감한 시기'의 체험이 이후 평생 지속될 의식 및 가치관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논의(Mannheim, 1952, 허석재, 2014에서 재인용)를 참고하여 연구 참가자들의 기본 출생연대를

1) 구성원 다수가 연령집단을 의식·자각하고 정치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행동할 때 코호트는 정치세대가 된다(Braungart & Braungart, 오세제, 2016에서 재인용)

1945-1964년(2022년 현재 시점 59세~78세)으로 설정하나, 세대 경험의 초세대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이 연령대에 한정 짓지는 않는다. 이 연령대는 기존 한국의 정치적 세대 분류에서는 정치적 산업화 세대(1940년대 출생)와 유신세대(1950년대 출생)를 포괄한다(노환희 외, 2013; 박명호, 2009; 허석재, 2014).

60대 이상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의 기후·환경 인식 및 가치관 연구는 먼저는 한국의 보수층의 기후 인식 및 대응에 있어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영국 등 기후변화 회의론이 강하게 대두되었던 몇몇 국가에서 기후변화 회의론의 강력한 변인으로 지목되었던 것이 정치적 보수성이며, 기후회의론과 정치적 보수주의의 상관성을 밝힌 연구도 상당수다(Carrus et al., 2018; Zhou, 2015).다. 한편 혼지 등(Hornsey, et al., 2018)의 25개국 조사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브라질에서도 보수와 회의론 간 상관성이 관측되었으나,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4분의 3 국가들에서 보수와 회의론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혼지 등(Hornsey, et al., 2018)은 보수와 회의론의 상관성이 높은 나라에서는 화석 연료 의존도와 1인당 탄소 배출량도 높다는 점을 제시하며, 기득권이 화석연료 산업에 얽혀 변화에 저항하는 힘이 클수록 보수와 회의론의 상관성이 클 것이라 추론한다.

한국에서 현재까지는 기후변화에 관련하여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크게 관측되지 않는다. 브레난과 사드(Brenan & Sadd, 2018)의 25개국 조사에서 한국은 기후회의론과 이념적 변수간 상관관계가 없거나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시사인의 2022년 설문에서 기후위기 후보 지지층(38.8%)에는 중도(42.3%), 진보(41.2%), 보수(34.5%)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있었다. 다만 해당 설문에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도에는 정치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 ‘재생에너지 비율 50% 수준으로 확대’의 공약에는 진보층의 88.2%가, 보수층의 61.5%가 지지한 것이다. 이 차이는 지난 19대 정부의 탈원전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었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기후대응 관

련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기후변화가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이전 연구(박희제, 허주영, 2012; 윤순진, 2016)의 예측과 일치한다. 이러한 갈등 확대의 예방에 있어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령 또한 기후회의 또는 환경회의와의 상관요인으로 지목된 바 있으나(Corner et al., 2011; Poortinga, W., 2011; Zhou, M., 2015), 이 경향은 연구 결과마다 일관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박희제, 허주영(2012)은 고령과 기후회의의 상관성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관찰했고, 김서용과 김선희(2016)의 연구에서 60세 이상의 기후변화 의식 및 대응행동 의도는 평균보다 약간 높다. 2021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기후변화를 꼽은 60대는 35.8%로, 평균 39.8%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령 자체보다는 참가자들이 공유하는 세대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주요한 경험들이 한국형 성장주의의 연원이 되었던 1970년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란 점을 염두하고, 한국 대응회의론의 배경의 중심축에는 생존주의에 기반한 국가·성장주의가 있음을 가정할 때,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에서 한국 대응회의론의 연원과 흐름의 한 축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연구방법

1. 주제 중심 생애사

이 연구는 한 사람 및 한 집단의 의식, 나아가 한 사회의 구조 안에서의 기후변화 및 환경의 위상과 그 위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배치된 것인지를 파악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연구 참여자들의 기후·환경 인식과 가치관, 그 인식과 가치관의 형성 과정 및 그와 상호작용하는 사회 문화 및 구조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기에 생애사 연구 방법을 채택한다.

생애사 연구는 한 개인의 삶에서 성장 과정과 신념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더불어 그 시대의 역사적·사회적인 맥락도 읽을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제시된다(김영순 외, 2018). 티어니는 생애사 연구에 대해 “경험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다양한 차원의 맥락과 병치시켜 우리의 삶이 단순히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개인의 정체성 또한 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사회의 구성원들과 사회적 맥락과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것을 이해하는 방법”(Tierney, 1999, 김영천과 정정훈, 2021;235에서 재인용)이라고 설명한다. 개인 경험에 초점을 두는 내러티브 탐구와 비교할 때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경험에서 맥락적인 의미를 끌어내는 시도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김영천, 정정훈, 2021).

이 연구에서는 기후·환경 인식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주제 중심적 생애사(topical life history) 접근법을 택한다. 참여자 삶의 전반을 다루는 일반적 생애사에 비해, 주제중심적 생애사는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춰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한경혜, 2004).

2. 연구 절차

가. 참여관찰

본격적인 참여자 모집 전인 2022년 5월 7일(토)부터 8월 20일(토)까지의 약 4개월간 총 13회, 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태극기집회를 참여 관찰했다. 참여관찰의 주안점은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데에, 둘째 분화된 태극기집회 그룹 간 차이를 파악하는 데에 두었다. 2016년부터 햇수로 7년차를 맞는 태극기집회에 대한 기초 분석자료가 적었고, 특히 현시점의 자료가 없었기에 이 과정은 태극기집회 및 참여자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국본과 일파만파, 오이박사,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으로 분화된 태극기집회 단체 중 간헐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우리공화당을 제외한 4개 단체는 매주 토요일 오후 시간대에 집회를 갖는다. 동화면세점 앞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전국 교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평시 소규모 집회에도 적을 때는 100-200명, 많을 때는 수천 명이 모이는데, 광복절이나 개천절의 태극기 연합 집회의 수만 명(2022년 개천절 집회 경찰 추산 3만 명) 참가 인원의 동원력의 주축은 이 단체다. 동화면세점에서 덕수궁으로 가는 중간에는 일파만파,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국본이 자리잡고 있는데, 양 단체의 평시 규모는 100명 내외로 엇비슷하다. 은퇴 군인 출신이 많은 일파만파의 경우 2022년 6.25 집회에는 약 500명이 모이기도 했다. 동아일보 건물 앞에는 평시 규모 30명 이내의 오이박사가 있다. 참여 관찰 시 연구자는 이 4개 집회를 천천히 돌며 집회 연설자들의 발언을 듣고, 집회 형태와 참여자의 반응과 집회가 열리는 주변을 관찰했다.

나. 참여자 모집

모든 개인의 생애사는 개인적 생애사이자 사회를 드러내는 잠재태로서

’구체적인 일반성’을 담지하고 있고(박선영, 2020), 질적 연구에서 사례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제를 집중력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연구의 깊이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조용환, 1999)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수는 최대 4인으로 설정했다. 참여자의 모집 기준은 첫째 태극기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참여할 의지가 있는 60대 이상의 사람, 둘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 셋째 자신의 삶과 의견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으로 두었다. 참여자 모집과정에서 가급적 성별과 출신지역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주제 중심 생애사 연구에는 연구 참여자당 최소 3회 이상의 밀도 높은 만남이 필요하여 연구 참여를 위해 최소한의 신뢰가 전제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인을 통한 눈덩이 표집을 1차적으로 실시하여 4인을 섭외하여 사전 면접을 가졌다, 사전 면접에서는 연구 목적과 과정 등 연구 전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소통한 후 참여자 후보가 원하면 연구 동의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4인 중 2인이 면담에 동의했다.

눈덩이 표집만으로는 참여자 모집 인원에 한계가 있어, 2차적으로는 태극기집회 현장에 나가 참여자를 섭외했다. 8월 후반 섭외할 당시 연구자는 그간 참여관찰을 통해 태극기집회 지형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로, 한 집회 부스의 안내자에게 문의하여 그의 소개로 그 자리에서 면담 참여 후보자를 만났다. 후보자는 연구 목적과 과정에 대해 안내를 들은 뒤 면담을 응낙했고, 향후 이 참여자의 소개를 통해 총 4인의 참여자가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기본 사항

이름	연령	성별	거주지	출신지	전직업	현직업
A	71세	남성	서울	경북	출판업	건물관리
B	71세	남성	서울	경남	회사원	은퇴
C	71세	여성	경기	경북	간호사	요양병원
D	82세	남성	서울	서울	건설기업	건설기업

다. 자료수집과 분석, 해석

연구 참여에 응낙하여 연구 동의서에 서명한 참여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장소 및 시간은 참여자들의 동선과 일정을 우선으로 협의했다. 스터디카페, 카페 회의실, 참여자 사무실 등에서 각 참여자당 3-4회 면담을 진행했고, 각 면담별 1~2시간가량 소요되었다. 1차 면담에서는 주로 참여자의 생애와 관련한 기본 질문을, 2차 이후부터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관한 기본 질문을 준비했다(<표 2> 참조). 사전 면접 등 준비 과정에서 파악한바, 기후변화라는 한 의제만으로는 이야깃거리가 풍성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되어 환경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함께 준비했다. 면담은 비구조화 형식으로, 면담 흐름에 따라 그때그때 질문을 추가했고 중간중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꺼내는 이야기들도 가급적 그대로 따라가며 들었다. 면담이 끝난 후에는 기록을 전사하고 분석하며 다음 면담을 준비했다.

표 2. 인터뷰 기본 질문

[생애사 및 가치관 관련]
- 태극기집회 참여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 어릴 적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인생의 좌우명, 중요하게 여겨오신 가치는 무엇입니까?
-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역사적 사건은 무엇입니까?
-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까요?
- 성장과 발전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후・환경 관련]
-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까?
-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현재 지구가 심각한 환경위기에 있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 평소에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 가장 체감하는 환경문제는 무엇입니까?
- 환경문제에 대해 처음 인지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 예전 환경과 지금 환경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 평소 기후·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앞으로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 해결에 참여할 의지가 있습니까?
- 참여할 의지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자 하십니까?
-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해결에 있어서 어떤 주체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후대응과 환경회복을 위해 경제성장을 늦출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지금까지의 환경정책 중 괜찮다고 느꼈던 정책이 있습니까?
- 탈원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태양광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대강 보 개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탄소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천, 정정훈, 2021; 문화체육관광부, 2020; 이승한, 2014; 이정석 외, 2018; 환경부, 2008/2018; KEI, 2020의 질문 참고하여 재작성

면담과 분석과 해석은 동시적이고 순환적으로 진행했다. 전사본을 읽으며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굵은 표시하여 옆에 발언의 의미를 표시하는 1차 코딩을 진행했고, 모든 면담자의 1차 코딩 결과들을 함께 보며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는 2차 코딩을 했다. 면담 과정 중 이러한 잠정적 2차 코딩을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 이를 통해 후속 면담 준비뿐만 아니라 전체 연구의 의미를 정리하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었다. 잠정적 2차 코딩의 결과들을 기반으로 전체 면담 완료 후 2차 코딩을 다시금 진행하여 약 20여 개의 키워드를 도출했다. 도출된 키워드를 한 장 한 장 메모지에 기록하여 늘어놓고, 의미와 영역에 따라 분류하고 조합하며 배

치하며 연구 결과의 짜임을 구성했다. 연구 결과는 크게 참여자들의 삶의 경험과 기후·환경 인식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기후·환경 인식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참여자들 간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내러티브를 발견했다. 그간 기후회의론 및 무대응에 대한 연구 중에도 담론과 행위 기저의 내러티브에 주목한 결과물들이 있었다(Adams, 2013; Haltinner & Sarathchandra, 2021; Lejano, 2019; Lejano & Nero, 2020; Norgaard, 2006). 노가드(Norgaard, 2006)는 노르웨이 지역사회에서의 민족지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노르웨이는 작은 나라야", "가스가 석탄보다는 낫지" 등의 내러티브를 활용하며 사회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부정(denial)을 조직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할티너와 사라스찬드라(Haltinner & Sarathchandra, 2021)는 미국 한 지역사회의 회의론자 33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들 각각이 고유한 기후회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음을 관찰하고, 그 중 상당수가 공통의 내러티브(음모 기반/종교 기반)를 공유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리자노와 네로(Lejano & Nero, 2020)는 내러티브는 집단을 생성하고 집단은 내러티브를 생성하는 쌍방향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선행 연구자들에 받은 영감으로,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발화하는 내러티브가 태극기 집회는 물론이고 어쩌면 그 이상의 범위에서도 통용되는 인식을 드러내어 줄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이 연구의 결과 중 기후·환경 인식과 관련된 "2. 생존에 밀리는 기후·환경" 부문의 소제목은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Ⅳ. 연구결과

토요일 오후 광화문 사거리는 쩌렁쩌렁한 스피커 소리로 채워진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버스를 내려 동화면세점 쪽으로 길을 건너면 자유통일당(전 자유대연합)의 집회 무대와 객석이 깔려있다. 집회 무대 양옆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걸려있다. 위쪽에는 스크린이 설치된 무대 아랫쪽에는 '주사파 척결 천만국민대회' 현수막이 달려있다. 자리를 채운 일이천여 참석자들 군데군데 〈광주〉, 〈부산 8〉 등 지역 깃발이 보인다. 무대 앞에는 집회를 중계하는 유튜버들이 있다. 집회의 시간은 대부분은 다양한 연사의 연설, 중간중간 찬가나 군가 등의 노래로 이루어진다. 자유통일당 대표 전광훈 목사의 오늘 연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부다. "당신을 찍은 1640만명"이 바라는 것은 첫째로 "주사파들을 다 척결하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성장이다.

> 한덕수를 비롯하여 경제부총리, 경제팀에게 명령하십시오. 나는 경제 잘 몰라. 전두환같이 말하십시오. 내가 경제를 어떻게 아나. 나는 결과만 가지고 말할거야. 빨리 5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밀어제껴라 그러십시오. 5프로 성장을 강요하기를 바랍니다. 5프로 성장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 나한테 전화 한번 하시면 내가 전화로 설명해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모든 병은 5% 성장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제팀에게 그 매일같이 수석들 데리고 농담 따먹기 하지 말고, 대통령은 좀 어른스럽게 결과만 가지고 강요하면 되는 것입니다! (...) 경제팀에게 빨리 5프로 성장시켜, 5프로 성장 못 시키면 니들 내 가만 안둘거야, 북한으로 다 쫓아버릴거야, 강~력하게 압박하기를 바랍니다! (2022.5.14. 전광훈 목사)

연설의 강조점마다 북이 둥둥둥둥 울리고 사람 틈에서 "맞습니다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 등의 맞장구가 흘러나온다. 객석의 빈자리를 찾아 앉아있으려니 한 아주머니가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 용지를 가지고 다가온다. 이미 서명을 했다 하니 행진을 권한다.

“이거 행진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처음 와보셨죠?”
“네. 아빠가 계셔가지고요.”
“아빠 잘 두셨네. 요새 부모들도 좌파가 많아가지고..”

아주머니는 커피를 마실거냐 물으며 커피를 가져다준다. 집회 옆의 ‘애국 시위 우파에게 냉커피 무료!’ 천막에서 받아온 것이다. 집회 옆에는 태극기 손수건이나 브로치 등 태극기 용품을 파는 노점, 전광훈 목사 추천 도서 판매대 천막도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 덕수궁 쪽으로 걷다보면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의 집회무대가 있다. 무대 양옆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각각 배치되어있고, 무대 전면에는 “AGAIN KOREA 희망의나라로”, “자유민주 시장경제 바로세워 국가번영” 글씨가 아로새겨져있다. 무대 앞 깔린 백여 객석 양옆으로는 ‘고대 교우 Truth Forum’, ‘한미동맹강화위원회’, ‘신중국연방’ 등 참가단체 깃발이 줄지어있다. 집회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전곡 제창과 함께 시작되어 다양한 연설자들의 연설과 중간중간 군가 등의 노래로 한두 시간 이어지고, 마지막은 행진으로 끝난다.

> 북한 주민들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 척박한 나라에 민주주의를 심었고 자유와 인권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 1945년의 대한민국을 생각해보십시오. 보릿고개에서 살았습니다. 자유를 몰랐습니다. (...)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은 바닥이었습니다. 생활 수준은 5천 년 동안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나라에 하늘이 선택해주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대한민국을 맨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심었고 조선 백성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깨우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공산주의를 0.1%도 허락하지 않는 애국자들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이 반군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 인권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됩니다. (2022.8.6. 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 김두천 회장)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국본이 자리잡고 있다. 역시 무대 양옆에는 태

극기와 성조기가 위치하고, 무대 전면에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자유대한민국 전사가 되자” 현수막이 붙어있다. 집회 무대 및 백여 객석 주변에는 “불법 탄핵 무효. 불법 대선 무효 박근혜 대통령은 복귀한다”, “국민이여 일어나자! 현재 공산 독재 체제로 바꾸는 혼돈기!!” 등등 현수막이 많다. 국본의 집회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경례 후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미국 국가 1절을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기술과 무역을 통해서 국민의 의식수준을 해결하고 국가 안보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 우리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의 존립을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기에 강대국과 관련된 국제 정세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에너지, 무기, 식량, 기축통화 등 패권과 관련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통적인 한미동맹 속에서 지혜로운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022.8.6. 국본 김광진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동아일보 건물 앞 스무 명 남짓 모인 오이박사도 마찬가지다. 작은 무대 중앙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현수막이, 양옆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 계승하자! 탄핵무효!! 복귀!”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완성하자!!” 현수막이 붙었다. 연설자는 “사기 탄핵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진정한 우파”의 결집을 주장한다.

이는 연구자가 2022년 5월부터 8월간 참석한 태극기집회의 현장 경험을 재구성한 모습이다.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태극기집회 단체들은 종교성이나 친박 성향 등으로 차별화되어있으나, 애국 우파를 표방하며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성장, 반공의 가치를 핵심 삼는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번 연구의 참여자들도 태극기집회 참여 시기나 단체는 다르나 이러한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은 어떻게 이 가치들을 상식 삼게 되었는가, 이러한 가치관의 형성이 참여자들의 기후・환경 인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궁구했다. 연구 결과는 크게 참여자들의 경험과 기후・환경 인식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1. 생존의 시대

가. 어린 시절 - 생존주의의 기층 경험

4-50년대에 태어난 참여자들의 어린 시절을 관통하는 단어는 '가난'이다. 자신의 집안이 가난하든 넉넉했든 그 시절의 한국은 가난으로 표상된다. 시골 소작농 부모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참여자 A는 당시 아무나 못 가던 중학교를 다닐 수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는 않았다.

중학교 다닐 때도, 도시락을 보리밥을 싸가거든. 보리밥을 싸가면 점심 때 먹을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커머. 거기에다가 반찬은 뭘 주냐면 고추장을 줘. 고추장을 넣어놨다고. 그라면 시커먼 밥에, 창피해서 못 먹어. 그렇다고 그래서 그 보리밥을 그대로 안 먹고 가져오면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딱 닫아놓고 먹는 척하는 거야. 먹는 척하고 이제 딱 닫고 이제, 오다가, 중학교 나오면 이제 우리 동네 거, 못이 있어. 거기서 목욕을 해. 애들이 다 목욕하는 사이에 이제 보리밥을 모래밭에 파묻어버리는거야. 집에 가지고 와 먹으면은 어머니도 걱정하니까. 파묻어버리는거야. (...) 그 집에 가보면 집에 가면 또 항상 보리밥 있잖아. 그 이제 또 먹고 일하러 가는거지. (A_1차)

참여자 중 유일하게 도시가 고향인 41년생 D는 11살에 한국전쟁을 겪었다. 전쟁에 참전했던 큰 형은 부상 당하고 작은형은 부상 끝에 사망했다. 몇 안되던 친척은 전쟁을 거치며 연락이 끊겼다.

고모가 내 두 분은 계셨던 걸 내가 기억해. 그러고 육춘 형이 고 계셨는데, 그게 6.25 전쟁 나면서 헤져버렸어. 그러니까 또 우리 어머니는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야 원래. 그래서 어머니가 박마리아야. 우리 큰형이 베드로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나는 영세를 받질 않았어. 몰라. 그거에 대해. 전쟁통에 그 열 살 때서부터 전쟁을 겪어서 나오니까 뭐 교회라는 거 그 종교라는 그 개념이 없어. (...) 우리 외가 쪽으로 삼촌이 계셨어. 그리고 나보다 한 살 위인 형이 있었어. 전쟁남으로써 뿔뿔이 헤져가지고 행방불명이야.

그냥 집안이 외가 쪽이 한~~ 사람 없고, 아버지 쪽에 한~~ 사람이 없어. (D_3차)

먹고 살기 어려운 것은 한국전쟁 전이나 후나 똑같았다고 D는 회고한다.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시절, 학교에서는 수업을 듣고 일을 했다.

그때는 학생이 보통 육십 명서부터 칠십 명이야. 반에 칠십 명이 넘어.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데는 더군다나 폭격 맞아 가지고 그냥, 저 교실이 없어. (..) 그래가지고 강당을 이렇게 네 개로 나눠가지고 반을 네 개 만들어 놓고 학교가 폭격 맞으니까 그 벽돌을 갖다가, 네 시간 수업하고서 그다음에 점심시간 하면 그 사이로 벽돌 나르는 거야. (D_3차)

시골에서 자라난 B는 밥을 굶지는 않았지만 그 시절은 너 나 없이 “다 어려웠”던 시절이었고, 개 중 “농사가 좀 많은 사람”은 “우리는 보리밥 먹을 때 그 사람은 보리밥에다가 쌀 좀 섞어서 먹었다든지” 정도의 차이였다고 회고한다. 당시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농촌 인구(1955년 79%, 1960년 73%)의 대다수는, 해방 이후 농지 개혁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 사후 조치의 부재와 국가의 반농민적인 정책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생활수준을 영위해오고 있었다(김보현, 2006). 여기에 한국전쟁으로 농지와 그나마 미미했던 공업 생산기반이 파괴되고 생활기반까지 초토화된 후, 한국 사회 기층에 빈곤은 일반적인 양상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육십년대 칠십 년대까지도, (...)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왜 모~든 중공업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북한에 다 있었다고. 북한에 하여튼 뭐 소위 말해서 군수 공업 비슷한 그런 것도 다 북쪽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전기 전력기도 전력도 북한의 그 압록강에 수풍댐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수력댐이 (...) 옛날에 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남았거든. 우리나라 남한이 그때는 이 전기 발전이 모자라 쩔쩔 맸다고 그러니까 70년대 중반 그때까지도, 후반, 70년대 중반 이후까지도 북한이 엄청 잘, 국민 소득이라든지 경제적으로 훨씬 잘 살

았을 거야. (B_2차)

일제는 자원이 풍부하고 대륙진출에 유리했던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시설을 건설했고, 그 유산은 전쟁 후에도 남아있었다. 산업 등 경제력의 우위는 곧 군사력의 우위를 의미했다.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뭐 해군 뭐 이렇게 이것도 형편 없었어.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지금이야 이제 뭐 (...) F35, F15 사 오니까 비행기가 많아지는데, 옛날만 해도 안 그랬거든. 그래 굉장히 형편없었어. 그 당시 북한만 하더라도 탱크라든지 각종 화학무기라든지 뭐뭐 미사일이라든지 뭐 곡사포 대포라든 쉽게 말하자 대포랄까. 그런 게 우리보다 훨씬 월등히 많았어. (...) 또 (...) 그 군인들도 많았고. (...) 보통 의무 복무기간이 한 십 년이나 될걸. 의무 복무가 그래 길잖아요. 그리고 군사들도 군사력도 엄청 많고, (...) 그때는 북한이 얼마나 그때 군사력이 셌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B_2차)

한국의 "전쟁에 가 써먹을"(B) 수 있는 고등학교 교련 교육도, 예비군도 그런 긴장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들이었다. 반공은 국시이자 상식이자 현실이었다.

우리가 자랄 때는 이제 반공 교육이라는 게 많았지. 반공이 우리나라 국시였지. 국가 시책. 반공 멸공, (...)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멸공, 공산주의를 때려 잡는 거잖아. 그때는 우리가 그냥 북한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삘갱이라 그러지 삘갱이, (...) 또 북한이 하는 짓이 그랬고. (...) 전두환할 때 저 뭐야, 버마 아웅산 사건 났지. 또 88 올림픽 방해 하느라고, 대한항공 김현희 그런 사건 났지. 그러게 모든 국민이 좋게 봐줄 수 없는 거야. 각종 테러는 테러를 다 하고. (B_2차)

참여자들은 교육뿐 아니라 경험과 문화를 통해 반공을 체화했다.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D의 경험은 지금 현재에도 D의 정체성을 규정지을 정도로 생생하다.

우리 작은 형은 바로 저 옹진 전투에서 다쳐가지고 돌아가셨고, 형은 저 육군 저, 625 참전용사고, 저 상이용사 다쳐가지고, 지금 저기 이천에 호국원에 계셔. 그러니깐 우리 집안이 빨갱이가 될 수가 없어. 되라 그래도 되지 않아.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걸 봤는데, 그럼 내가 빨갱이가 될 수가 있나. (D_2차)

A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전쟁 틈에 북한으로 갔다. A는 전쟁을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동네 지서에서 “걸핏하면” A의 아버지를 불러 “빨개이 집안 새끼들”을 “파묻어”버리겠다며 고초를 겪게 하는 것을 보고 들으며 자랐다. C도 비슷했다. “불행하게도” “빨치산”이었던, “너덜너덜 다 찢어진” 옷을 입은 “거지꼴로” 새벽에 찾아온 고모부에게 새 옷과 여비를 챙겨줬던 C의 아버지도 이후 곤욕을 치렀다.

가난과 분단의 엄혹한 현실에서도 살아있는 것은 지역의 공동체였다. C는 참가자 중 유일하게 부잣집에서 자랐다.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유지의 2남 5녀 중 셋째 딸이었던 C였지만 이웃에는 형편이 어려워 굶는 친구들이 많았다. C는 어머니에게 밥을 얻어 친구들의 조밥과 일부러 바꿔 먹었다. 동네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그런 관계들 덕분이었다.

이웃이 밥을 못 먹으면, 밥을 해서 우리 친정 같은 경우에는 큰 가마솥에 이렇게 일부러 불을 약간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밥을 줘요. (...) 그리고 뭐 모내기나 이럴 때는 가마솥에 밥을 큰-가마솥에 두 솥씩 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다 갈라먹고 (...) 고사를 지내면 막 떡을 어마어마하게 해갖고 동네 사람 집집마다 다~~ 나눠주고 나도 어느 집 고사 지낸다 그러면 그 떡 얻어먹으려고 잠을 안 자고 그랬거든요. (...) 그리고 뭐 같이 그.. 이제 이웃에 그 뭐야 뭐 수박 서리도 가고 참외 서리도 가고, 밀서리, 뭐 이런 것들 감자 서리, 뭐 고구마 서리, 이런 거 가도 그렇게 욕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바로 구속되고 그러잖아요. (C_2차)

배곯던 A가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서리 덕분이었다.

과일 철에는 동네에 이제 무슨 과일나무가 뭐 있다 하는 걸 내가 다 안다고. 가서 이제 훔쳐 먹는 거야. 훔쳐먹는 거야. (..) 살구, 복숭아, 또 호두, 어디 어디 있다는 걸 내가 다 알거든. 밤은 뭐 천지빽가리니까, 우리 집에 밤나무 하나도 없어도 가을 되면 밤이 이만~큼, 수만짜리 있어. 그럼. 어디 가면 다 어느 밤이다. 어느 밤이 좋다. 이거 다 아니까, 감, 감도 아 어느 집 감이 좋다. 감도 이, 맛 좋은 감이 있어. (...) 배고프면 거기 올라가서 먹는 거야. (..) 소풀 베는 척하고 올라와서 따먹고 따먹어버리고, 그 집 할아버지가, 그 사람이 참 좋아. 따먹다 들키잖아. 예이~ 이놈들. 예이 이놈들. 그거뿐이 안해. (A_1차)

서리도 할 수 없는 시절에는 동네 친척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그 집 소 풀을 먹여주던 A를 아꼈다.

A: 제~일 곤욕이 뭐냐 그러면, 보리, 4, 5월달이 제일 배고플 때 그때 먹을 게 거의 없어.
연구자: 아 맞다, 보리고개였군요.
A: 그땐 먹을 게 없어. 그때 유일하게 먹을 게, 이제 그때는 자두도 잘 안 익고 살구도 잘 안익고, 과일도 한 6~7월은 되어야 익거든. 고 때가 제~일 그럴 때야.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땐 유일하게 이제 배 채우는 게 할매, 그 집에 가면 이제, 그 집에는 모내기할 때 사람 하잖아. 남의 사람 이제 해가지고 밥 해주잖아. 밥해주면 그날은 점심도 얻어먹고 저녁도 얻어먹는 거야. (...) 먹으면서 할머니는 옆에 있다가 더 먹어라 더 먹으라 그러지.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그래. 항상 머리에 있어. (...) 이놈이 그래도 우리 소 다 먹여준다 다 먹여준다 내일 또 멕여자이~멕여다이~ 당연히 멕여 줘야지. (A_1차)

철마다 열매가 맺던 자연도, “더 먹어라 더 먹으라”는 할머니의 말도 60년이 넘게 A에게 남아있다. D의 말에 따르면 이런 관계성은 D의 어린 시절, 194-50년대의 서울에도 있었다. 배를 곯는 사람은 “좀 살만한 집”에 들어가 가마솥의 남은 밥을 먹었다. “잠실, 서초동, 압구정” 등은 다 논이었던 시절이다.

그 시절의 꿈을 묻는 질문에 참여자들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 비교적 구체적인 답을 한 사람은 C였다. C는 사업을 하고 싶었으나 대학 전공은 간호학을 택했다.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 B는 어린 시절 꿈에 대해 “그때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다며, “그냥 막 주어진 삶에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그렇게 된 거 같”다고 이야기한다. D도 그랬다. 집에서는 대학 학비까지 지원해줄 형편은 안되어, D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형의 추천대로 공군으로 입대한다.

> 그거 무슨 뭐 저기 그때까지도 뭐 좋은 거, 여기 나와서 뭘 해야겠다는 그런 목표 의식 이런 게 없었어. 우선 당장 하루 먹고 사는 그게 이제.. (D_2차)

A의 목표는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

> 국민학교 내가 3학년 때부터, 그 공부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 오직 우리 가난한 집을, 그러니까 그..뭐야.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집안이 그.. 딴 사람 딴 집보다 더 못 산다는 걸 내가 체험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오직 빨리 커가지고, 그..그 돈을 벌어야 되겠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 3학년 때부터도 그냥 책가방만 집에 팽개쳐놓고 일하러 나가는 거야. (...) 왼종일 생각하는 게,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소를 어떤 걸 줘갖고 잘 소가 빨리 클까, 빨리 커가지고 새끼를 놓게. 새끼 놓는 게 최고니까. 저 빨리 그 새끼를 빨리 낳아야지 이제 새끼 한번 놓으면, 비싸잖아. 그게 꿈이랬지 그러니까 그 소도 풀도 아주 열심히 베먹이고 그랬지. (A_1차)

A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하러 상경한다. 시기는 달랐지만 시골이 고향이었던 A,B,C 모두 서울로 상경했다. B는 20대 후반이던 80년대 초반 상경해 직장을 구했다. 제일 빨리 상경한 것은 C로, C는 중학교부터 서울로 가서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집을 얻어 대학까지 공부했다.

나. 청장년기 - 생존주의의 형성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게 된 14살 C가 상경한 1965년, 길거리에는 “거지, 뭐 동냥, 매일 밥 얻으러 다니는 사람, 넝마”가 흔했다. 시골에서 굶는 사람들을 먹여살렸던 공동체 문화는, 적어도 상경한 C로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 와보니까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우리는 시골에 있을 때 그렇게 안 살았는데, 서울에 와 보니까 살벌하더라고요 살벌해. 먹고 사는 게. 우리야 뭐 시골에서 농사지었고, 아버지가 공직 생활했으니까 편안하게 살았는데, 여 올라와서 보니까 장사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 보니까 살벌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도시는 무섭다 서울은 코베가는 데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했죠. (C_2차)

중학교를 막 졸업한 17살 A가 상경한 것은 C의 상경 3년 후인 1968년이었다. 서울 와서 1년여 동안은 골동품 가게, 오토바이 헬멧 제조사, 세탁소나 서점을 전전하며 가게에 야전 침대를 놓고 잤다.

> 연구자: 서울 올라가서 [고향과 친구들이] 그립지는 않으셨어요?
> A: 아 그리워도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내가 어떻게 그걸 뭐, 그리워도 그걸 뭐, 지금 온 정신이 내가 빨리 돈 벌어가고 부자 되겠다는 게 내 목적이랬는데 뭐 그 관심 없는 거지.(A_1차)

“인생 살면서,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A가 유일하게 힘들었다 기억하는 것은 세탁소에서 일하던 때다.

> 드라이크리닝은 그때는 뭐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해, 그게 휘발유야. 휘발유야. 휘발유로, 그 때 부분을 긁어내는 거야. 그래갖고 이래 돌리는 거야 기계로. 요즘은 완전 세탁소에서 자동으로 하잖아. 휘발유로 하면 때가 잘 빠져. 그러니까 그 이거 손이 막 완전히 그냥, 휘발유에 이게 손이 뎄다고 생각해 봐. 완전 다 벗겨지지. (...) 그때 내가 참 부모를 좀 잠시 원망했어.

이야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서울 와가지고, 응? 진짜 야..그때는, 잠시 원망했지. (...) 70,60년대 그때는 보편적으로 남의 집에서 사는 식모 있잖아 그지? 그런 사람들이 손이 그래 됐어. 그때는 뭐 이 크림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식모 보면 대번 알아, 손 보면 대번 알아. 근데 내 손이 그렇고 그보다 더 심했으니까, 밖에 창피하지. (A_1차)

김보현(2006)에 따르면 1955-60년 사이 도시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5.1%였고, 서울의 경우 연평균 12%였다. 서울로 이주한 인구의 80% 이상이 농촌에서 왔고, 그중 6-70%가 생활난 때문에 고향을 떠나왔다(오유석, 1998, 김보현, 2006에서 재인용). 이농의 추세는 계속 이어져, 1960년 244만명이었던 서울 인구는 1970년에는 550만명이 되었다(박길성, 1999). 도시에서도 생계가 어렵기는 1960년대까지는 마찬가지였는데, 전후 및 원조 경제의 조건에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6-70년대(1962년에서 1979년) 박정희 정권기에 들어서서다.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960년 29.5%, 1970년 45.4%, 1980년 61.3%로 증가했다(서관모 1986, 김보현, 2006에서 재인용). 1960년대 이전 5%였던 국내 총생산의 실질 성장율은 1960년대 연평균 경제 성장율은 9.5%, 1970년대는 9.3%로 나타났다(대한민국 국가지도집).

박정희 집권기 당시 A와 B, C는 크게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B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데모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들이 박정희를 재평가하고 존경하게 된 것은 박정희 사후였다. 그러나 집권기에 2-30대를 보낸 D는 당시부터도 그를 지지했다. 변화를 체감했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려웠던 경제 상황은 전쟁 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었고, 그것은 “70년도 들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거의 같았”다.

419 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저 516 혁명이 일어난거야. (...) 여러 개 저 공약이 있는데 그거 다 할 거 없어. 우리 대한민국 반공을 국시로 하고, 둘째는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한다. 둘이~ 배고픈 시절이야. 그러니까 70년대 들어서기까지의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야 아주 가난한

나라. (...) 필리핀도 우리나라를 원조 준 거야. 에디오파도 우리 저 625에 참전한 나라야. (D_2차)

한국전에서 전사한 D의 작은형은 군번도 없었다. 당시 참전한 용사 중 상당수가 그랬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었던 시절, "비행기가 어딨나 배가 어디 있나" "공군도 없고 해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는 꿈에도 생각못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다니"(D)는 지금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은 196-70년대부터의 경제성장 덕분이었다. 196-70년대의 박정희 정권기, 국가의 전체제와 전사회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정렬되었다. 김덕영은 이러한 한국 근대화의 과정을 '환원 근대'라 칭한다. 환원 근대는 "그 대상 또는 영역의 측면에서 경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경제성장으로 환원되고 그 주체 또는 담지자의 측면에서 국가와 재벌로 환원된, 이중적 근대화 과정"(김덕영, 2014; 65)이다. 한국에서는 경제가 곧 근대였다는 것이다.

물론 5.16군사혁명의 본령이 민족국가의 중흥 창업에 있는 이상, 여기에는 정치혁명·사회혁명·문화혁명 등 각 분야에 대한 개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그중에도 본인은 경제혁명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이다.
먹여놓고, 살려놓고서야 정치가 있고, 사회가 보일 것이며, 문화에 대한 여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제 부문에 희망이 없다면 타 부문이 개혁되고 온전히 나갈 리가 없다는 것도 당연한 말이다.
중언 부사(復辭)가 되겠으나, 이 경제 재건 없이 공산당에 이길 수도 없고, 자주독립도 기약할 수 없는 일이다. (...)
이 싸움에서 이기면 살고, 지면 이젠 영영 죽는 도리밖에 없다.
5.16군사혁명이 '국민혁명'으로, '국민혁명'이 민족의 '산업혁명'으로 다시 진전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우리의 지상 과업, 이 경제 산업혁명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혁명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난맥상의 경제를 완전한 궤도에 올려놓는 일이요, 각종 국가경제를 현대화하는 것이다. (박정희, 1997: 265-66)

윗글에서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의 부문 중에 최우선되는 것은 경제고, ‘국민혁명’은 곧 ‘산업혁명’으로 풀이된다. “먹여놓고, 살려놓”는 것이 최우선 당면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전 절에서 참여자들의 어린 시절을 관통하는 단어가 자신의 집이 가난했든 부유했든 ‘가난’이었다는 발견을 공유한 바 있다. 권명아(2009)는 식민지와 전쟁기를 통한 궁핍의 경험이 한국인의 “생활세계를 식민화하는 정치적 무의식이자 집단 무의식”(권명아, 2009; 341)인 “궁핍의 파토스”를 형성했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는 모두 궁핍과 압박의 설움에 시달린 서러운 민족이었다는 애절한 수난사 이야기의 파토스를 통해 식민지 경험과 전쟁 경험을 관통하는 집단 간, 계급 간의 이질적이고 갈등적인 경험과 욕망이 효과적으로 삭제되고 통제”(같은책; 344)되었다며, 이 궁핍의 파토스가 이념이자 민족 정서이자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궁핍의 현실과 ‘궁핍의 파토스’는 한국의 성장 이데올로기 형성에 절대적인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궁핍이자 결핍이 한국사회에서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강고하던 북한이라는 적 때문이었다.

> 전쟁을 통한 적침 분쇄나 실지 회복보다 더욱 차원 높은 승리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일보 일보 통일의 기반과 실력을 개척해나가는 일이다. 그것은 적으로 하여금 감히 우리의 경제력과 군사력 앞에 도전을 꿈꾸지 못하도록 침략 의도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실력의 절대 우위를 확보하여, 민주주의 체제와 철학의 실증 앞에 굴복하고 승복하게 하자는 것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대로 조국통일운동이요, 전쟁을 막는 길이요, 북한동포를 구출하여 우리민족의 평화와 복지를 약속하는 길’이[다]...(박정희, 1968.10.1. 국군의 날 유시, 김보현, 2006: 162에서 재인용)

이러한 사고는 참여자들에게도 상식적이었다.

> 우리가 전쟁에서는 공격이 최상의 방책이다 이거지. 우리가 스스로 힘이 있고, 자체적으로 북한에게 견주고 이길 능력이 있을 때 상대방이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 친구라도 그러잖아. 싸우면서도. 내가 볼 때 내보다 키 크고

덩치 크고 할 때 우리가 못 달겨들거든. 싸움 안 걸거든. (...) 다 그렇잖아요. 큰놈한테 달려들어, 안 달겨들거든. 지보다 약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지가 싸움을 걸지. 국가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우리도 자주 국방이 되고 군사력이 강하고 감히 넘나보지 못할 정도가 돼야만이 그렇게 할 것이다. (B_2차)

남한과 북한은 체제 경쟁에서 정통성을 증명할 답을 발전에서 찾았다. 그리하여 반공의 부정성은 발전주의와의 결합을 통해 적극적인 긍정성, 즉 성장 이데올로기로 전환된다. 그리고 '궁핍의 파토스'는 성장 이데올로기의 국가적, 집단적 동원을 가능케 했다(박영균, 2010). 박정희 체제에서는 이렇게 절대성을 띠게 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전 사회 제도 체계뿐 아니라 국민 정신구조의 전환까지도 목표했다.

비생산적인 생각이나 관습을 일신하고 모든 문제의 판단기준을 생산력 증가로 귀일시키자...모든 국민의 활동이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규제된다면 ...우리나라의 발전은 얼마나 급속히 이루어지겠는가?(박정희, 세수확보에 관한 서신[1965.6.11.], 김보현, 2006에서 재인용)

여하한 사회에 있어서도 달성하는 것은 오로지 … 국민에 의하여 달성된다….물질적 부의 창출에는 사회의 가치체계와 개인의 정신구조가 선행하여 변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2](최주철, 1976, 김보현, 2006에서 재인용)

이러한 "정신구조의 전환" 등 환원 근대를 주도하는 뚜렷한 주체는 일차적으로는 당시 국가로 보인다. 김홍중(2017)은 김덕영(2014)의 환원 근대를 가능케 한 원인을 생존주의라는 집합심리와 사회제도와 통치성의 앙상블로 보았다. 그는 20세기 한국사에 있던 세 차례의 생존주의 레짐 - 제국주의 질서를 배경으로 하는 1894년 생존주의 레짐, 냉전 체제 하 1950년 냉전 생존주의 레짐,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생존주의 레짐 - 의 배경들의 구조적 힘들을 해석하고 대응하려는 과정에서 형성된 통치

2) 박정희 정권기 경제학자로서 경제개발계획 평가교수단에 참여.

의 심성의 논리, 즉 생존주의가 환원을 촉발하고 정당화한 것으로 보았다. 당시 빈곤과 분단의 상황 그리고 그에 대한 개별적인 경험들, 그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집합적으로 생성되었던 생존에의 욕망, 즉 집단적인 생존주의는 발전주의 국가 주체 탄생의 배경이자 기반이었고, 국가는 생존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결집하고 새로이 형성하였다.

참여자들의 어린 시절 전쟁・전후의 혼란과 빈곤에서 경험되고 형성된 생존 위협과 생존에의 욕망은 청소년 및 청장년 시절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특히 국가의 총동원적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자극되고 부각되며 생존주의라는 '마음의 레짐', 즉 마음[3]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배치에 부합하도록 소통되고 성찰되었다. 그리하여 생존주의는 개인 선택의 문제라거나 인간의 본성이기보다는, "그가 처한 환경과 그 환경에 대한 해석과, 그 해석의 사회적 제도화가 야기한 압력, 그리고 그런 압력 하에서 그가 행위하고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나오는 것"으로, 참여자들은 "환경의 힘에 짓눌려 그것을 넘어서고 그것에 적응해 가면서 자신을 생존추구적으로 변화시켜가는 자"(김홍중, 2017;250)로 이해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고향을 떠나 서울이라는 생존경쟁의 대도시에서 자리를 잡아왔다. "장소에 깊이 뿌리내린 삶으로부터 뿌리뽑힌 삶으로"(Relph, 2005: 35) 그 삶이 변화한 참여자들은 어떤 원칙도 논리도 눙치면 되는 생존의 장에서 개인적/사회적인 차원에서 생존주의를 체화시켜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개인적인 생존을 국가의 생존, 즉 경제성장과 합치시켜왔다.

연구 참여자들 모두는 1960년대부터의 한국 경제성장의 서사를 대본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 서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

3) 김홍중(2016)은 마음을 "사회적 실천들을 발생시키며, 실천을 통해 작동(생산, 표현, 사용, 소통)하며, 실천의 효과들을 통해 항상적으로 재구성되는, 인지적/정서적/의지적 행위능력의 원천"으로, 마음가짐(heartset)은 "그러한 마음의 작동을 규정하는, 공유된 규칙과 규범의 총체"로, 마음의 레짐을 "마음의 작동과 마음가짐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조건짓는 사회적 실정성(이념들, 습관들, 장치들, 풍경들)의 특정 배치"(2016; 611)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구로공단, 인천공단 등 경공업의 토대를 세웠고, 베트남 파병과 독일 탄광, 간호사 등 인력 파견과 대일청구권 등 온갖 방법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와 차관으로 고속도로를 닦아 물류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 제철과 조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화학 공업의 기반을 닦고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를 설립하는 등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B)를 마련했다. 이 전 사회적인 동원 체제에서 다른 존재들 - 베트남 파병, 독일로 간 광부, 간호사, 베트남으로 간 군인들, 직공들 - 의 희생은 불가피했다. 경제성장은 나라를, 즉 모두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 (미국에서 파병군인 급여를 주면) 결국은 달러,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달러 있으면 사병 월급을 100달러 다 주지는 않고 예를 들면 30달러를 주고 나머지 70달러를 국가서 한다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 그 100달러 자체는 다 우리나라로 오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가 달러가 많이 들어왔죠. 그 달러의 돈을 번 그 돈이 어디 갔느냐 대통령의 개인 축재에 쓴 게 아니고 그 경부고속도로 닦는데 돈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돈으로 닦은 거예요. (...) 군인들 피를 팔아가지고 (...) 도로를 닦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쁘게 표현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래도 참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그 도로를 닦았다고 이렇게 높이 평가가 되죠. (B_2차)

참여자들에게 베트남전쟁은 피땀 흘려 이룩한 한국 경제성장 서사의 한 축으로, 고속도로의 건설이라는 결과로서 의미화된다. 신형기(2012)는 베트남전에 대한 한국 정부와 대중의 논의와 기억이 반공과 국가 도약을 위한 명분 등 국가의 시각으로, 국가적 범위(scope)에 제한되어 다루어져 왔음을 언급한다. 정치 차원을 보면 당시 국회 야당에서는 휴전선의 불안과 전쟁의 명분 등을 들어 파병을 반대하여 “굉장히 시끄러”(B_2차) 웠으나, 파병은 1964년 시작되어 1973년까지의 10년간 이어졌다. 당시 정부에게 절실했던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투자재원과 정치자금을 마련할 기회이자 미국과의 관계를 다지기 위함이었다. 베트남전에 대한 일련의

논의 속에 베트남 사람들의 현실은 물론이고 베트남 파병군의 고통이 들어설 여지는 없었고, 그것은 국가 차원으로나 개인 차원으로나 기억되지 않았다. 독일로 파견 광부와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다.

> 내가 요즘도 그런 거 어떤 때 유튜브 (...) 보니까 내가 참 눈물 나더라고. 그때도 [독일로] 우리나라 광부 갔을 때도 그것도 인력 파견이잖아요. (...) 그 광부로 보내주고 간호사를 보내주는 그런 그게 사람의 인질에 대한, 인질은 아니지만 그 보내주면 그 나라는 그런 험한 일, 그 당시만 해도 독일이 잘 살았으니까 독일 사람들이 광부 잘 안 하려 그러지, 간호사 일이 또 좀 힘들잖아요. 안 할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그때 많이 갔다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해가지고 또 차관을 또 줬다고. 그런 돈 다 받아가지고 박통이 자기의 욕심을 사리사욕을 채운 게 아니었고 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쏟아부었다.(B_1차)

그렇게 차순위로 밀린 것 중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도 있었다. C는 박정희가 “장기 집권한 건 잘못”이었으나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는 그 “강력한 지도력” 덕분에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갈 수 있었다.

> ...근데 장기 집권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민주적으로, 음..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선출직 대통령이 됐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은 무리한 것들이 많았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우리 전 국민한테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으로 우리 보릿고개를 넘기게 됐고 우리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국적 민주주의라잖아요. 그런 거를 함으로써 오늘날이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서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어요. (...)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 그리고 그 지도력이 강력한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산업발전도 하고 국가 발전이 지금 뭐 됐지 안 그러면 1차 산업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텐데. 잘해봐야 2차 산업일 거예요. 우리 뭐 지금 이런 완전 선진국 대열에 어떻게 갔겠어요.(C_1차)

인간 삶과 사회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원리인 민주주의를 가치로서 추구하지 않고 형식적이거나 소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환원근대 내지 생존주의적 근대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김덕영, 2014; 김홍중, 2017). 이런 맥락에서는 참여자들 자신도 존재로 존재하기 힘들었다. D는 늦은 제대 후 건축 하청일을 하다가 1977년 건설기업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십여 년간 카타르,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등 해외로 파견을 나갔다. D는 70년대에는 “건설인력서부터 노동이 팔려나” 갔다며, “노동을 갖다가 팔러 갔던 사람” 이라고 자신을 지칭한다. “부존자원을 가진 게 하나도 없” 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가진 것은 “몸” 이었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노동” 이었다. D의 ‘노동 팔이’ 에는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이 중첩된다. 국가 경제성장의 집합적 열망은 D와 같이 생존을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던 각 개인, 생존주의자화된 개인들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 실제로 [태어]나서부터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진짜 살아나온 게, 좋은 때라는 게 기억이 없어. 좋은 때라는 게.. 먹고 살려고 그냥 발버둥치고 그러다가 군대 가고 뭐하고 또 나와서는 살 길, 사막 땅 그거 살 데가 아니야. 정글 속도. 그러니까, 내가 십년을 있었대는 게 무슨 소리냐. 1년 있으면 우리 집이. 내가 1년 벌면 최소한도 1,2년은 더 살잖아. 내가 10년을 사니까, 살고 왔으니까, 적어도 20년 동안은… 그러니까 우리 애들, 내가 안 갔으면 대학을 어떻게 졸업시켜. 어떻게 지들 저.. 고급옷을 입히고, 먹는 거 피자니 뭐 스파케티니, 짜장면도 못사먹어. (D_2차)

생존주의, 특히 냉전식 생존주의에서는 생존의 목표에 정향되지 않는 존재나 가치들은 차순위로 밀리는 것뿐 아니라 타자화되고 적대화되기 쉽다. 박영균(2010)은 ‘분단의 아비투스’ 가 오늘날에도 작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분단이라는 역사가 만들어내는 신체와 사물, 아비투스와 장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분단 질서’, ‘분단구조’ 의 지배체제가 상징폭력에 의해 ‘신체’ 에 아로새겨지는 성향과 믿음들의 체

계”(박영균, 2010; 378)인 분단의 아비투스에서 타자는 단순히 나와 다른 타자가 아니라 나를 위협하는, 두려운, 이해불가능한 타자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 등 국가의 생존 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아가 방해가 되는 의견이나 개인이나 세력은 타자화되고 적대화된다.

참여자들은 ‘좌파’에 대한 반감을 강도는 다르지만 공유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기 견제 역할을 하던 야당, 다른 말로 민주화세력, 진보층이 특히나 1987년 민주화 이후 활성화된 통일운동과 통일담론, 그리고 진보일각의 대북 노선 변화로 인해 ‘빨갱이’, ‘친북’, ‘종북좌파’로 인식되며 북한이라는 적으로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가족을 잃고 친척과 헤어진 D의 분노와 적개심은 북한으로, 좌파로 직결된다.

그러니까…싫지 싫어. 이 좌익…이런 거 아주..넌덜머리가 나.(D_3차)

권혁범(2000)은 한국의 반공주의가 “북한 공산주의 체제 및 정권을 절대적인 ’악’과 위협으로 규정, 그것의 철저한 제거 혹은 붕괴를 전제하며, 아울러 한국(남한) 내부의 좌파적 경향에 대한 적대적 억압을 내포”(2000: 32)하는 ‘압도하는 감각’이며, 공산·사회주의 정당 설립이 적어도 합법적인 다른 나라들의 반공주의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한국 반공주의 체제에서 “모든 비판적인 생각은 불건전 혐의->불순 혐의->좌경 혐의->용공· 친북 혐의->간첩 혐의로 이어지는 반공주의의 회로판을 타고 순식간의 연상 작용을 통하여 마지막 단계의 혐의와 동일시”(권혁범, 2000: 56)된다. 참여자들에게 ‘좌파’, 즉 진보층은 “주체사상을 신봉하”(C)며 국가의 일에 “전부 다 반대하는”(A), “잘 사는 나라를 갖다” “말아먹는”(D), 나아가 개인과 국가의 생존과 성장을 위협하는 “무서운” 세력이다. 공산주의·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반대항으로, “경쟁 의식이 떨어져서” “GNP도 낮고, 삶도 후퇴가 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없는”(C), 개인적인 주장과 의견도 피력하기 어려운 사회다.

생존주의적 근대 - 경제성장을 위한 전시적 체제, 공산주의와 좌파의 위협이 항시 존재해오던 상황 - 에서 환경은 희생의 대상으로도 기억되

지 않는다. 참여자들은 “우리나라 산업이라는 게 없었”던 참여자들의 어린 시절에는 환경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산업화가 되면서는 달랐다. 경공업이 발전하던 1960년대 후반, 아직 고향에 머물던 B는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뭐 여름 되면 뭐 아침에 한 번 갔다가 오후에 갔다가 다 목욕 다니고 했던” 동네 하천이 희한해지는 것을 목격했다.

>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요즘 말하면 폐수지. 그래 그 당시에는 폐수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알지만은 사회 문제화되고 이게 그 생활에 크게 미치는지 잘 모를 때라고. (...) 그 당시에 거기 보면 큰 이제 보세 산업이 섬유 보세가 많이 들어왔어. 일본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차 삼차 가공해가지고 완성해서 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폐수가 그대로 흘러나온 거지. 그러면 하천이 말이지 어떤 때는 막 붉은색, 어떤 때는 푸른색, 어떤 때는 막 그 하천 내려오면 막 노란색, 그 하천이 엄청 크거든. 폭이 한 폭이 한 2~30m 이렇게 되거든. 그런 하천에서 보면 그런 물이 콸콸콸 내려간다고. 그래도 그 때에는 우리가 이게 폐수에 대한 그런 게 심각성을 이걸 몰랐지. 당연히 왜, 어차피 먹고 살기 바쁘고 일본에서 가져와가지고 보세해가지고 우리는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삶이 조금 나아지잖아. 닭고기 먹을 거 돼지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을 때 소고기 한번 사 먹는, 그게 좀 생활이 좀 나아지는 거란 말이야. 농촌 생활에서. (B_3차)

B는 그래서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폐수’나 ‘환경오염’이란 말이 없던 때였다. 하천이 붉고 푸르고 노래지는 것은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 일자리가 생겨 삶이 나아진다는 것, 우리나라가 발전한다는 것, “닭고기 먹을 거 돼지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을 때 소고기 한 번 사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환경오염은 어린 B에게는 발전, 현재의 B에게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피해로 환원된다.

> (..) 지금 세대 사람들하고 우리 시대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이제 인식이 다른 게 지금 사는 사람들은 환경이라는 것이 내한테 이래서 피해를 미치면 이건 반드시 이거는 시정되고 고쳐야 되고 우리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

다는 게 이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잖아. 그 당시에는 그런 인식이 없었다니까. 피해 보면 이게 피해를 보는구나. (...)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하다면 그거 하지만은 좀 몰라도, 무심도 아니고, 그런게 몰랐다.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 발전하니까 좋다, 이런 생각을 했지. (...) 우리도 요즘 지나 보면 지난, 이게 지나보면은 우리 친구들 만나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야 우리 그때도 우리 초등 국민학교 때는 그 떡 감고 말이지 그럴 때 참 좋았다 이야기하면서, 그때 물 내려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에 대해서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는, (...) 안 하기보다도 당연한 거, 이렇게 국가가 나라가 발전하는 단계였다고 생각하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다 막막 뭐 피부병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못했지. (B_3차)

당시의 발전은, “공장이 들어오면” “산업 발전하니까 좋다”라고 생각했던 생존주의·성장주의의 논리 구조와 “피해 보면 이게 피해를 보는구나”하고 말았던 집단적 심성에서 가능했다. 1971년 8월, 경제장관회의에 공해방지법 시행령이 처음 상정되었던 때 김학렬 부총리는 “공해 문제가 중요한지는 나도 알아. 그러나 지금은 경제건설부터 먼저 할 때야. 공해방지 시설은 앞으로 공장들이 번 돈으로 하면 돼.”라고 말했다고 알려진다. 당시에는 영국의 도시에서 “낮에도 제조업체의 연기로 해를 볼 수 없을 정도다”는 사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배성호, 2021). C는 그때를 “물불을 가릴 정도의 시기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C: 그전에는 (...) 그러고 저러고 생각 없는 거 우리가~ 먹고살기 힘들면 (...)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먹을 수만 있으면 그냥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똑같은 거야. 배가 부르면 아 이거,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고 가려지게 되는데, 똑같은 거야. 그때는 우리나라 물불을 가릴 정도의 시기가 아니었어요. 사정이. 그땐 뭐 (…)
연구자: 그때는 오히려 막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막 나오는 게..
C: 나와야만! 아 저기 뭐 사업이 잘되는가 보다, 이랬지. (...) 사람들도 고용을 많이 하니까 그게 돈이 됐으니까요. 근데 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죠. (...) (C_3차)

울산 남구의 공업탑에는 1962년 당시 울산공업센터 창립을 치하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하문이 새겨져 있다. 치하문에는 “제 2차 산업의 우렁찬 건설의 수레소리가 동해를 진동하고 공업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 나가는 그날엔, 국가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렇듯 참여자들과 국가의 생존이자 경제성장의 역사에서 환경은 성장을 위한 자원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으로 제껴졌다.

다. 현재 - 생존주의의 학습

현재 7-80대가 된 참여자들의 삶은 각기 다양하다. A는 사업을 정리하고 건물 관리직으로 취업했다. 쉬는 날에는 느지막이 일어나 등산을 가거나 종묘로 바둑 두러 나가기도 하고, 날이 맞으면 종종 집회에 나간다. 은퇴한 B는 매일 운동을 하고 종종 친구들을 만난다. 간호대학을 나와 간호사 일과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던 C는 현재 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도 토요일마다 광화문 집회로 나온다. 건설업에 종사한 D는 현재도 건설기업에서 고문직을 맡아 매일 출근하며 토요일마다 광화문 집회에 나오고 있다.

참여자들은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시작된 태극기집회에 참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참여 시기와 빈도는 조금씩 다르다. B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진행되는 시점 사이 나갔다.

> B: 나는 태극기집회 어디 소속되고 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내 판단에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내가 나간 거지. (...) 집에 자그마한 태극기 없어서 그냥 집에 태극기 들고 갔다니까. (..) 그때 2016년도인가 그때 우리 집에 (...) 국경절에 꽂는 거[태극기] 있지. 그거 가지고 똘똘 말아갖고 내가 가져갔어. 나는 이런 생각했지. 아무리 전임 대통령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 잘못했다고 그러지만 (...) 그래서 최

순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나라를 뒤집어졌는데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그래도 세계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잘 사는 나라[라고 하고], (...) 민주주의도 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의 그런 나라로 가서는 안된다 난 그렇게 생각한거지.
연구자: 그게 그럼 선생님께서 심각하다고 느끼셨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B: 그렇죠.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은 있겠죠. 잘못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이제 현직 대통령이 잘못했지만 우리나라가 탄핵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런 창피를 당할 만큼 우리가 민주주의가 약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오고 그랬지. 이건 아니다 그러고 나간 거지. (B_1차)

B는 탄핵 후 대선이 치러진 이후로는 더이상 태극기집회에 나가지 않았다. “새로운 정부대로” “대한민국을 앞뒤의 발전을 위해서 나” 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A는 2016년부터 쭉 개인으로서 간헐적으로 태극기집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설을 잘하” 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집회로 나가고 있다. A는 태극기집회, 즉 우파가 결집해서 좌파에 대항하는 것이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전제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다. 북한과 대항할 때 남한은 ‘민주세력’으로 표상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북 간에 분단되어 있잖아. 북한은 공산 세력, 이쪽은 민주세력이잖아. (...) 우리는 우리는 살만큼 살았지만도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만약 김일성이 같은 독재 시대로 돌아온다든가 중국같이 전제주의가 오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 자유를 완전히 억압당하는 (...) 또 앞으로, 우리 세계에 잘 살라고 그러면 미국하고 친구가 돼야지. 중국하고 친구가 돼가지고는 나라로서 잘 살 수가 없어.(...)(A_3차)

한편 현재 중소규모 태극기집회 그룹 ‘O’에 함께 속해있는 C와 D는 2016년 10-11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태극기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2016년 탄핵사태에 가졌던 C의 의문은, 처음 태극기집회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위기의식으로 전환되었다.

> 처음에는 저도 매스컴만 듣고,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그랬을까? 참 정말 그거는 저건 한 나라 대통령으로서, 이건 아닌데. 자기가 뭐 국정을 뭐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맡겨갖고 좌지우지해갖고 (..)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고건 나도 아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 그러면 그 사람 자기가 말하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자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서울역에서 처음에, 우리도 쟤네들 좌측 애들은 무조건 저래갖고 막 밀어붙이는데, 우리도 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아 10월 22일인가 일요일인가 그쯤 보니까, 서울역 앞에서 모인다 하더라고요 언뜻언뜻 얘길 들어보니까, 그래 나갔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는 건가, 어 또 또다른 무슨 다른 내용, 상반된 게 뭐가 있나 싶어서 가보니까 과연 있잖아요. 음. 이거는 정치적인 함정에, 수렁에, 점점 국민들도 같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생겼구나. 이거 이래갖고는, 끝내는 정말 그 김정은이 손아귀에,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이건 아니다. 이래갖고 매주 나, 그때부터 한 주를 안 빠졌어요. 그때부터.(...)(C_1차)

C의 말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우파’와 ‘좌파’로 번역된다. 참여자들에게 탄핵사태는 그동안 “미친 소”를 먹으면 “한국 사람 다 죽는다고”(B_2차) 했던 광우병 시위 “선동 정치”의 연장선이자 확장판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장우영(2018)은 태극기집회의 배경을 지난 역사에서 찾았던 바 있다. 1998년 최초의 진보 정부로 등장한 김대중 정권에게 ‘정권을 빼앗긴’ 이후부터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규탄 촛불집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 이념 갈등을 통해 축적된 보수층의 위기의식이 탄핵사태에서 발산되었다는 것이다.

> (나라가) 기로에 섰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대로 이대로 갔다간, 끝내는 그

어떤 그 좌파 세력이.. 좌파 세력의 어떤 수렁 속에 온 국민이 다 빠져가지고, 정말 판단도 안 되게끔 매스컴도 한 편이었잖아요. 이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나보다는 내 자식들 세대 그 아래에 손주들 세대를 보고 나온 거예요. 그럼 나야 뭐, 이제 뭐 뭐 체 체계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상관 있겠어요. 그게.. 칠십이 뭐 넘었는데. (C_1차)

위기의식의 강도는 D도 높다. D는 탄핵 사태 당시 우연히 참가한 태극기집회에서 옛 친구・동료들을 만나며 탄핵 사태의 의미를 재인식할 수 있었다.

(...) 2016년 11월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왔어. 그런가 보다 했지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다가, 퇴근하는 길에 서울역에서 [태극기 집회하는 것을 본] 그때가 11월 며칠인데, 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타당성이 읎어.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 계단 그 원 그 자리에서 우선 저, 죽마고우도 만나고,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또 사회 친구도 만나고 또 먼저 다니던 회사 친구들도 만나구, 어떻게 된 게 그렇게 만나기도 힘든데 다 있었어. 그때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 나올 때 그게 나라가 잘못된, (..) 그거를 그때 알았어. (D_1차)

D에게도 태극기집회는 좌파, 즉 북한과 공산주의에 맞선 싸움이다. 나아가 전쟁과 빈곤으로부터 나라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가 내가 겪은 그 태어나서 전쟁 고 겪어온 그거를, 물려주고 싶질 않지. 자네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지. 그 가난함, 가장~ 저게 배고픈 설움이야. (...) [1984년에] 영국 엔지니어가 미스터 와이트가 나한테 물어본 게 느이 나라에서 무슨 차가 나오냐고 하더라고. 포니 완, 투, (…) 그래 창피했었어. 근데 지금, 지금 와서는, 94, 2004, 2014, 40년 동안에 이렇게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 그 겪은 걸 (...) 우리 세대로 끝이 나야지. 자식 세대한테는 물려주면은 안 되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지끔은,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가난한 그 한국사회에서 살았지만, 자네들은 이미 다 이런 걸 그 혜택을 다 누려봤잖아. 인제 자유를 구속을 해줘봐. 못 살아.(D_2차)

정리하면 참여자들은 탄핵 반대를 넘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태극기집회로 나섰다. 참여자들의 태극기 집회 참여 경험에서 생존주의가 계속적으로 생성되고 학습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같은 태극기 집회 그룹에 속한 C와 D의 사례에서 확인된다. C와 D의 태극기집회 초기 경험을 보면, 참여자들의 태극기집회 의미화에는 참여자들의 기존 생존주의 마음뿐 아니라 현재적 해석공동체의 영향도 컸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김진욱과 허재영(2018)은 탄핵 사태 당시 대통령 관련 의혹을 부정할 수 있을 만한 정보원의 부족으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보수층의 변화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태극기집회 참여자들은 기성 보수언론에서 보수 유튜브, 팟캐스트, 신문 등으로의 매체를 대체하고 태극기집회 주최단체 및 연사들이 제공하는 정보로 기존 가치에 부합하는 도덕적 신념을 재확신 및 강화하여 태극기집회에 참여할 동기를 성립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C에게는 태극기집회의 연사들과 집회 참가자들, D에게는 옛 친구들과 동료들이 자신의 신념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초기 해석공동체가 되었다. 그리하여 C는 매주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뜻이 맞는 이들과 O단체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O단체의 태극기집회를 주최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C는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태극기집회를 꼽았다.

C: 이거[태극기집회]죠. 나는 그냥 사업이나 하고, 내 취미생활만 하고 주부로서 그냥 그냥 보통 여자였는데, 이거로 말미암아 바깥으로 완전히 나와갖고 완전 이게 삶이 바뀌었어요. 삶이.
연구자: 그 전에는 안 그러셨어요?
C: 그전에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내가 여행을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그리고 취미생활 골프하고 여행 다니고 그리고 뭐 자식들 뭐 이렇게 잘 되는 거 이런 거나 챙겨보고, 뭐 이제 이 사업할 때는 사업하고 뭐 이렇지 뭐 이런 거에는 아예 안 했죠. (...) 진짜 탄핵으로 말미암아 확 달라졌어요.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 내가 이 어영부영 그냥 남들 살듯이 이렇게 살

았는데, 아 이거는 사상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 (...) 정치적인 이슈도 중요한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탄핵 이후 탄핵이 중심이 돼서 많이 달라졌다.
연구자: 그러니까 뭔가 활동을 해야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C: (...) 나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확 바뀐 거야 이렇게. 그전에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했죠. 나만 보면 됐지 내 가족이나 뭐 내 주변이나 이것만 봤지 이렇게 그 어떤 뭐 모든 큰 그림 속에 살지 않았죠.(...) (C_1차)

C에게 태극기집회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살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C는 집회 참여만이 아니라, 비슷한 이들을 나오게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집회 조직에도 헌신적으로 기여하게 됐다. C는 초기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를 때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 국운이 왜 이렇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그 애국가 부를 때마다 나는 엄청난 눈물을 흘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그렇게 그러지는 않지만 맨 처음에는 많이 그랬어요. 근데 어..거기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아-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괜찮겠구나 이런 안도감 그런 거에 대한 위안, 그런 거는 사실 있어요. (C_1차)

C의 위기감과 불안감은 태극기집회를 통해 일면으로는 증폭되고 일면으로는 달래졌던 것으로 보인다. 태극기집회 현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소들 - 태극기와 성조기와 연사들의 발언, 애국가, 군가, 현수막 문구, 일부 참가자들이 갖춰입은 군복 등 - 로서 국가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고 국가의 위기 또한 강조되는 한편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는 “안도감”과 “위안”이, 나아가 연대감이 형성되는 것이다. 김왕배(2017)는 태극기 집회의 집합적 의례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적 담론과 퍼포먼스를 통해, 뒤르케임이 말한 ‘집합적 열광’이 재생산된다고 보았다. “초기 단계에 개인들을 집회에 참여하게 하는 선동적인 감정(분노, 화, 공포)은 의례를 통해 점차 집단이 공유하는 연대감, 열광, 도덕성으로 진화한다”(김왕배, 2017: 13). 집합적 열광과 강렬한 감정의 동학은

일종의 학습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엘스워스(Ellsworth, 2005)는 학습을 마음과 뇌와 신체의 물질 요소의 중첩 간에 발현되는 물질적 과정으로 바라보는 변칙적 교육학(Anomalous pedagogies)을 이야기한 바 있다. 여기에서 학습은 공간, 신체와 시간의 풍경과 파노라마를 가로지르는 감각의 망들을 통해 형성되는 물질적 과정으로 이해되고, 학습자는 신체를 가진 자가 아니라 신체로 간주되고, 움직임과 감각이 학습에 핵심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C는 태극기집회의 강렬한 감각과 집합적 경험이라는 일종의 학습을 통해 “내 가족이나 내 주변”만 보던 삶에서 벗어나 “큰 그림 속에 살”게 되었다. C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중에는 집회 단체를 설립하게 된다.

C: 위기감 때문에 그래, 위기감 때문에. 이대로 그냥 어영부영했다가는 나는 뭐, 그렇지만 내 자손, 내 자손들이 앞으로의 이 모든 우리나라의 국운이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연구자: 그 위기감은 예전부터도 좀 느껴 오셨던 거지만 이번에는 진짜 결정적으로 좀 느끼셨던 거고.
C: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뭐 그래도 그렇게 생각도 않고 에이 뭐, 남들 말하듯이 에이 뭐 저런게 있어, 왜 정치를 저렇게 뭐 대통령이 왜 자꾸 대통령이 됐을까 막 이렇게만 걱정했었는데 탄핵 때, 이건 아니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탄핵 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뭐 8.15나 3.1절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우리 국민들이 그전에는 안 나왔다니까요 다. 그 사람들이 다 나랑 비슷할 거야 아마. 그 사람들은 그때 나오는 거고 나는 그 당시에도 계속 그렇게 그 사람들을 나오게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난 계속 하는 거고 그러는 거야.(C_1차)

O단체는 C와 D를 포함,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고 매주 집회 준비와 진행을 맡아하는 삼사십 명의 멤버가 주축이 되어 4년간 매주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는 광화문 등지에 작은 사무실을 빌려 본부 삼고 있다. 멤버들은 토요일마다 사무실에서 모여 점심을 같이 차려먹고 집회 준비와 진행과 마무리까지 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하루를 마무리한다. 여기

에 함께 하는 D는 집회에 나오며 “참 많이 배운다”고 이야기한다. D는 O단체 멤버들을 “가족”이고 “친동생”이라 표현한다. “어느 학교 조직도 아니고, 어느 모임의 조직도 아니고, 어디 굴레가 있어가지고 모인” 것도 아닌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공동체에서 참여자들의 냉전식 생존주의는 일종의 윤리이자 상식이다. 태극기집회는 위기로부터 후손을 구한다는 이타적 사명감을 띠게 되고, 이는 집회에 절대적 정당성을 더하게 된다.

D: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네 같은 사람들, 후손을 위해서야.
C: 우리야 뭐.. 근데 우리 후손을 위해서 해야죠
D: 난 열한 살 때서부터 그 전쟁을 겪은 사람인데 6.25에서부터 다. 내가 지금 여든두 살인데 여기 나와서 뭐 왜 내가 이래. (...) 그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후세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C_2차)

학습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학습은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이기보다는 학습자 공동체에 문화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Falk, 2005). 이는 개인이자 뇌를 문화와 인지체계의 일부로 바라보는 도날드(Donald, 2002)의 관점과 연결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인지체계는 개별적 뇌와 외부 문화망을 연결하는 메타인지 매커니즘을 통해 집합적으로 작동하여 무엇이 “현실”인지를 규정한다. 따라서 한 사람이 어떤 글을 읽고 어떤 말을 듣고 누구를 만나는가의 일상적 배치는 일종의 관계망이자 집합적 인지체계의 역할을 한다. C와 D는 태극기 집회에의 지속적인 참여와 구성원간의 유대를 통해 끊임없이 적응하며 ‘학습’해가고 있다. 다만 이때의 학습은 참여자들이 이미 체화하고 있는 생존주의 마음을 재활성화하고 재강화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피아제(Inhelder & Piaget, 1958)는 인지발달과정을 새로운 정보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해의 틀, 즉 도식(schema)에 맞추는 ‘동화’(assimilation)와 새로운 정보에 맞게 기존 이해의 틀을 변형하는 ‘조절’(accommodation)의 평형화 과정으로 설명한 바 있다. 피아제의 관점에서 참여자들의 학습은 동화 차

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주의, 성장주의와 반공주의 가치를 발화하고 상호작용하는 태극기집회가 냉전식 생존주의 마음의 레짐을 공명하고 강화하며, 새로운 사건을 생존주의 차원에서 상호적으로 해석하고 학습하는 해석공동체이자 학습공동체이자 일종의 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참여자들의 어린 시절 전쟁과 빈곤의 경험에 기반하여 청장년기 특히 국가·사회에서의 상호작용을 거쳐 형성되어 참여자들의 세계관을 틀짓게 된 생존주의는 현재에도 부단히 동화의 학습을 거쳐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2. 생존에 밀리는 기후·환경

가. 문제화되지 않는 기후변화

1) “기후변화 심각하지”

참여자들은 모두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었다. D에게 기후변화란 우선 별을 볼 수 없는 공해 현상으로, 그리고 농업 생태계의 변화로 다가왔다.

> 그건 당장 하지. 뭐냐 하면 첫째 (...) 서울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을 못 봐. 공해야. (...) 그리고 요즘에 신문지상에도 뭐 나오지만 빙하가 얼어. 그게 녹아버린다는 얘기야. 그게 상당히 위험해. 그 수위가 높아진다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선 먹는 생태계가 달라져. 지금 모든 과일이, 열대 과일이 바나나 뭐 이런거 한국에서 생산되면 안 돼. 안 되잖아. 그 사과가 본래 저, 아래 대구서 사과인데 지금 얼로 와 점점 더 기후변화로, 이쪽이 더 잘 돼. 그거 당장 느끼지. 그리고 공해가 심하니깐 매연 뭐 이런 거, (...) (D_2차)

B와 A에게는 날씨로 다가왔다.

기후변화 체감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실생활에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고 봐야지. 지금 단계에 지금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그 강추위, 또 이 엄청 무더위, (...) 우리가 크면서 80년대까지 90년대, (...) 그때는 태풍 이런 게 오는 게 여름에 오고, 기후, 그렇게 기상 변화로 의해서 크게 오고 그런 건 없었지. (B_3차)

평균 옛날에 기후가 좋을 때는 [비가] 평균적으로 쭉 내려줬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그냥 쏵 내려버리고 (..) 이게 지금 반복되거든 그게 전체적으로 기후변화라고 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남극이 얼음이 계속 녹아난다든가, 지금 그 그린란드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일 년에 몇 프로가 얼음이 녹아난다든가, (...) (A_3차)

C는 일찍이 기후변화를 체감했다. 1990년대 후반 아이슬란드에 여행을 갔다가 빙하가 녹는 것을 본 것이다.

아이슬란드에 갔을 때 빙하가 녹는 거를 봤어요. 그 북극 이제 그쪽에서~ 그거 보고 어~ 이거는 빙하가 막 산더미만한 게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바다로. 아..이게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고요. (...) 이렇게 뭐 폭우가 온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기후 변화, 막 기후가 막 유난하게 막 너무 덥다든가, 너무 춥다든가 이런 걸 느낄 때마다 아 그때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아..이러다가 빙하가 다 녹으면 끝내는 뭐 우리나라도 한 삼십 프로가 잠긴다더라구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뭐 심하면 서울까지 다 잠긴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저기 지구에서 사라지는 나라도 꽤 있을 거고.. 어.. 그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빙하가 떨어, 빙하가 녹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C_2차)

C가 당시 빙하 녹는 풍경을 기후변화이자 환경문제로 '문제화'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풍경을 해설해준 아이슬란드 가이드와 그와 심각성을 공유하던 유럽 관광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가이드가 그쪽 나라 가이드가 우리나라 가이드보다도, 우리나라 가이드도 가이드였지만은 그쪽 나라 가이드가 환경 운동가더라고요. 그래서 펭귄들도 많이 없어졌대요. 펭귄도 많이 없어지고 그 숫자가 많이 줄고. (..) [바다] 물범 거의 개네들도 개체가 많이 죽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많이 죽었죠. 예 많이 없어져 갖고 환경이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건 정말 그렇구나. 이게 뭐 어떤 데는 너무나 막 더워 가지고 난리고 막 불이 막 나고 어떤 데는 계-속 홍수가 막 터지고 다 그런 것들이 인간이 저지른 재앙이라고 봐야 돼요 그거는 (C_2차)

C만이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도 현재 세계적인 기후변화 동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묻자 참여자들은 산업화를 언급했다.

지구가 온난화된다는 거는 산업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 뭐야 매연이라든가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기후에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지. (A_3차)

산업화되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게,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많이 얻기 위해서 그.. 뭐 화력발전이니 뭐니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열을 발생하면 그러면 탄산가스 뭐.. (..) (D_3차)

대화를 하다보면 주제는 산업화를 넘어 인간으로 옮겨갔다. 참여자들은 “인류 문명이 나아지는”(B) 것을, “사람이 편해지”(A)려는 것을, “인간의 욕심”과 “이기적인 것”(C)을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의 원인으로 짚었다.

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한 거지. (...) 지금 전 세계적으로, (..) 지금 보면 고도 산업 사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고도 산업 사회란 것은 (...) 지구의 뭐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자꾸, 이 인류 문명이 나아지는 거 아니야. (...) 서서히 이렇게 몇십억 이렇게 거쳐 올 기간

을 인류가 이렇게 더 함으로써 이 변화가 더 빨라진다. 그런 것 같아요. (B_3차)

연구자: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A: 그럼! 인간의 산업화, 사람이 편하다 보니까, 응? 인간이 편하다 보니까 그냥 전기제품 많이 쓰고 전기제품 만들어다 할라 그러면 전기제품 만들어 만들고 또 그것도 버리잖아. 버리면 플라스틱이 뭐뭐뭐 한 몇 년 만에 썩는 게 아니잖아 자동적으로 자연을 갖다 파괴하잖아. (...) 인구가 늘면 늘수록 이제 그런 게 더 심화되겠지? 사람은 편해지고 싶고, 애당초에 사람은 편안하려고 난 게 아니잖아. 있는대로.. 있는 자연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사는 거랬잖아. (...)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고, 뭐 하고 살고 싶고, 패션도 해야되겠고, 뭐 화장품도 써야되겠고, 뭐도 약도 먹어야되겠고, 뭐도 먹어야되겠고 (..) (A_3차)

연구자: (..)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자면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C: 아 인간이 만든 거죠. (...) 인간 스스로 파멸을 만들어, 해서~ 그냥, 지 살 깎아 먹는, 지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자손들이 끝내는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그냥 우선 갖고 오는 그.. 뭐 돈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거 갖다가 그냥..자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 그러니까 전부 다 악순환이죠. 악순환. 악순환이 되는 줄도 모르게 그러니까 악순환이 돼 가는 거죠. 그 뭐 인간이 지금 이미 이기적인 인간들이 인간이라는 게 원래 - 다 아시잖아요. 성악설이나 성선설이나 뭐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좋은 마음 속에서도 자기만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 우선 그냥 좋으려고 자꾸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만든 재앙이라고 보는 거죠. (C_2차)

2) “근데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위기가 있어”

그러나 기후변화는 참여자들에게 주요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다. 더 중요한 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 글쎄요. (...) 매일 걱정만 하고, 이거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되지 뭐, 이렇게 보강해야지 뭐 이렇게만, 나만 그러고 살 뿐이지. (...) 아 이거보다 더 내가 막 절실했던 것들이, 사회주의로 가면 안 되는데, 내 자손들이, 아니면 막 내 가족들이 막,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다 보니까 절실한 게 그게 더 절실하잖아요. (C_2차)

C에게 있어 가장 큰 위기는 탄핵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완전히 좌측으로 쏠려가”는 나라의 추세였다.

> 이제 중국식의 어떤 사회주의식의 (...) 정치화가 돼서 국민들도 (...) 우리 스스로 자기네들도 모르게 서서히 바뀌지는 줄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뭐.. 개구리가 가마솥에 맨 처음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뜨거워서 그냥 팔짝 팔짝 뛸 뿐인데 죽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그 불에 그냥 그 열기에 죽듯이 우리가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 속에 스미는 줄 모르게 사회주의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럴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죠. (C_2차)

‘뜨거운 물 속 개구리’는 앨고어 미국 전 부통령이 기후변화를 다룬 영화 <불편한 진실> 등 기후변화 관련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친숙한 비유다. 지구가 서서히 뜨거워지는 위기에 경각심이 없는 사람들이 가열되는 물에 그대로 머물러있는 개구리와 같다는 것이다. C의 ‘뜨거운 물’은 지구가 아니라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였다. 기후변화는 C에게 심각한 문제였지만, 삶의 주요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다. 이는 다른 참여자들도 같았다. 특히 D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동의한 대부분 참여자들과 달리, 기후변화를 “위기”라고까지는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구자: 기후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다 위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D: 근데 그것까지는, 일반인들은 안 느껴. 당장 기후가 이렇다 이렇다 이거 지금 당장 매연이 있으니깐 기침을 한다든가 뭐 안 좋다는 거, 그건 느껴. 근데 그 이상은.. 깊이 있게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빙하가 지금 녹아내린다, 뭐 한다, (...)
연구자: 그렇죠. 그러면 요새 막 산불 나고 태풍이 더 많아지고 이런 거
D: 산불 나고 태풍 나는 거는, 나는 인재가 많다 그래. 태풍은 모르겠는데 산불은 인재가 많아. 그리고 요즘에도 뭐 불났다는 건 난 그 인재로 봐. (D_2차)

D에게 당장 현실적인 위협은 전쟁이고, 그것은 열한 살 전쟁을 겪은 후로 쭉 그래왔다. 전쟁의 가능성이 D에게, 또 전쟁을 겪지 않은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일상적이라는 것은 다른 주제로 가진 대화의 단편에서도 드러난다.

지금 다 한강 다리가 지금 몇 개야. (...) 근 40갠가 돼. 그러니깐, 저 다리가 없었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하나, 지금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난다. 지금 전쟁이 났다 이거야. 요 서울 인구가 빠져서 그 강으로 나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D_3차)

만약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영등포에 하나[미사일이] 떨어졌다면, 여기에 수천 명이 죽을 거 아니야. (B_2차)

참여자들이 목도하는 위기는 전쟁뿐이 아니다. 한국은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

지금은 북한이 영원히 지금, 대치하고 우린, 지금 전쟁 중에 휴전이야~ 전쟁이 안 끝났어. 휴전 상태라고.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는거야. 지금은, 플러스, 우리나라는 그게 거기다 플러스 세계 경제, 여러 나라고 경제적인 싸움을 해야 되니까, 적대시하는 무력에 대한 거는 이북이야. 경제적인 건 세

계 전체야. (...)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지 다른 나라하고 달라가지고. 나하고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도! 싸워야 돼가지고 저놈이 날 먹으려고 드니까 안 먹히려니까 싸워야되고, 나라를, 그러다 보면 나라가 부흥해야 되고. (D_4차)

한국은 일차적으로는 북한과, 이차적으로는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 “저놈이 날 먹으려고 드니까 안 먹히려니까 싸워야되”는, 그러기 위해 “나라가 부흥해야(D) 하는 이중적인 생존경쟁의 장에 있는 것이다. 한국에게 있어 이 생존경쟁의 장은 한국전쟁에서부터, 더 올라가자면 “고대 역사상”에서부터 “대륙 뭐 여기 싸움 틈바구니”(D)에 낀 약소국의 운명상 피할 수 없어왔던 것으로 이야기된다.

김홍중(2016)은 한국 생존주의의 구체적 기원을 19세기 후반에 두었던 바 있다. “구한말 선각자들은 제국주의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힘이 곧 정의’라는 시각, ’세계는 약육강식의 정글’이라는 논리, 그리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처방으로 구성된 ’우승열패’의 신화를 통해 민족 위기를 타개하고자 고투를 벌였다.” (김홍중, 2016: 286) 약하면 먹힌다는, 먹히지 않기 위해서 강해져야 한다는 인식은 한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근대성의 저변을 규정하는 현실 논리였다(김홍중, 2017). 그리고 그 생존경쟁의 장은 제국주의 시대와 냉전 시대와 IMF 이후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시대를 중첩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3) “성장은 계속해야 되는거야”

연구자: 지금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래도 경제성장을 계속해야 된다고 보세요?
D: 계속해, 영원히 가야지! 상대방이 경쟁 상대자가 없으면 몰라도, 뒤쳐진다는 얘기야. 나라대 나라의 경쟁이야 그때는. 지금 나라대 나라의 경쟁이야. (D_4차)

생존경쟁의 세계에서 성장은 정언명령이다. 제국주의 시대,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어졌던 발전과 성장이라는 방향은 한국이 국민소득 1만불을 넘어 3만 5천불을 넘어선 현재에도 굳건했다.

> 지금은 우리가 북한하고 경쟁 체제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 정치적으로 경쟁 관계였고 사회적으로 경쟁하고,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가 더 잘 사느냐, 민주주의 체제가 더 잘 사느냐였고, 지금은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이제 드러났잖아. 북한하고는 우리가 경쟁 그런 건 아니다. (...) 지금 경쟁 체제는 벌써 떠났어.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그래 생각할걸. 우리가 북한보다 뭐 지금보다, 뭐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지금 글로벌, 세계, 세계와 경쟁하고 있잖아. (B_3차)

북한과의 경쟁, 세계와의 경쟁의 이중적인 생존경쟁을 의식하던 D와는 달리 B는 북한과의 “경쟁 체제는 벌써 떠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초점은 글로벌 세계로 옮겨진 것이다. 어쨌든 경쟁은 계속된다. 끊임없이 달려가는 글로벌 세계에서 땅도 작고 자원도 없어 기술로 먹고 사는 한국은 멈추면 “금방 도태”된다.

> (...) 지금 글로벌화 돼있잖아. (...) 경제가 과학과 기술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은, 글로벌화에서 금방 쳐지죠. (...) 더-발전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더 멈춰 있으면은, 세계 경제는 달려가고 있잖아. 금방 도태되지. 이 기술이 지금은 우리가 최첨단 기술이지만은 2023년도는 이 기술이, 어떤 기술 되나, 뒤처진 기술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더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도태되지.(B_3차)

참여자들의 말에서는 조금이라도 뒤떨어지면 안된다는 긴급성과 강박이 비친다. 한국의 생존주의적 근대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길이 갈린다”는 ‘긴급의식(spirit of urgency)’이 지배해왔다(신형기, 2012).

후진의 낙인 속에 가난에 시달리고 설움을 겪으면서 끝없이 방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침체된 현실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유와 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할 것인가, 실로 긴장된 기로에 지금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박정희, 8.15 제19주년 경축사, 1964.8.15. 김종태, 2014: 181에서 재인용)

위 언술에서도 확인되듯, 당시 서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의 역사적 지체, “후진의 낙인”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반공 발전이라는 혁신과 혁명으로 제시됐다. “후진성 극복을 목표로 모더니티의 속도를 따라잡으려는 혁명은 하나의 ’과속過速’현상”이었고, “혁명이 주술이 된 가운데 국민으로 묶인 대중은 강제가 계속되는 과속의 시간을 벗어날 수 없었다.” (신형기, 2012: 287-288)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뒤떨어지면 “도태”된다는 긴급의식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어지는 선형적인 시간의식, 즉 사회진화론의 시간에 기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박찬승(1996)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말까지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서구 사회이론으로, 한국의 자본주의 근대화론의 타당성을 뒷받침한 사회진화론을 지목한다. 19세기 중후반, 실증주의적 논의가 유행하던 유럽에서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이것이 생존경쟁을 통해 ‘진화’해나간다고 주장한 것이 사회진화론의 시작이다.

사회진화론은 구한말 조선의 일부 유학자들에 의해 수용되어 20세기 초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 회복을 주장한 ‘자강운동’ 등으로 구현된다. 이 사실은 “생존경쟁을 알지 못하면 개인은 노예의 수치를 면할 수 없으며, 국가는 판의 색이 변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박찬승, 1996에서 재인용)는 자강운동 이론가 윤효정의 말에서도 확인된다. 사회진화론은 서구에서의 퇴색에 따라 1920년대 이후 조선에서도 낡은 이론으로 여겨지다가 해방 이후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과 친일세력 주도로 자본주의 근대화론으로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사회진화론은 19세기 중반 산업혁명 직후의 유럽에서처럼 절대적인 힘을 발휘” (박찬승, 1996: 353)한다. 한국 근대의 사회적 풍경은 “생존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진화론적 상상력 위에 건설” (김홍중, 2016: 289)되어 있었다.

사회진화, 곧 경제성장의 선형적 시간대에는 종료점이 없고 생존경쟁의 장은 끊임없이 돌아간다. 그리하여 참여자들은 여전히 계속 달려야 한다. 참여자들에게 ‘과속의 시간’은, ‘긴급의식’은 현재진행형이고, 성장은 정언명령이고, ‘공업 국가’는 한국의 불변하는 정체성이다.

우리나라는~ 실제 기후에 대해서 세계에 앞장서서 얘기할 건덕지가 못돼. 응? 우리나라같이 지금 그 오염 배출을 공업 국가니까 많이 내는데, 무슨 그걸 앞장서서 말이야. 응?(A_4차)

“수출 경제로 해서”(B_3차) 먹고 사는 수출국이자 공업국인 한국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것은 필연이다. 그리고 선형적인 사회진화론의 시간대에서 성장과 발전의 강도와 규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높아지고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수요를 낮춘다는 아이디어에 B는 의아해했다.

B: 에너지 수요를 낮춘다는 것은 에너지를 덜 쓴다는 얘기인가?
연구자: 그쵸. 전반적으로 쓰고 있는 에너지 자체를 좀 줄여나가는 것도..
B: 에너지 쓰는 사람이 에너지를 좀 줄인다? 아니지.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전기라는 것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이 쓰지. 줄어들지는 않을걸. 왜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 수록 전기 없이는 우리가 하나도 못 살잖아. (B_2차)

이 달리기를 멈출 수는 없다. 참여자들에 있어 성장의 계속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과 욕구에 부합하는 일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생활의 욕구라는 것이, 좀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경제적으로 뭐, 모든 게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생활이잖아요. 그러고 이게 그런 욕망 욕구가 그게 멈출 수 있겠어요? (B_3차)

그런 참여자들에게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진화론에서

의 후퇴를 의미했다. 단선적 역사관에서 후퇴는 즉 가난했던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쌀밥 먹을거 보리밥 먹게 되”(B)는, “60년대 농경사회”(A)로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 우리나라 경제는 더 이상 발전이 없으면 어떻게 돼, 당장, 밥 먹을 거, 쌀밥 먹을거 보리밥 먹게 되겠죠. 그건 너무 비약적인 논리겠지만 그렇게 뒤처진다 이 말이야. (B_3차)

> 연구자: [기후・환경문제 대응에 있어] 우리는 뭔가를 해볼 수 없을까요?
> A: 그리고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는 또 이제 앞으로도 뭐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공업국가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가 농경 국가로 갈 수 있어? (...)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60년대 농경사회로 가려면 지금 현재 북한하고 같이 살면 돼 북한하고.(A_3차)

후퇴란 과거로의 회귀이자, 우성에서 열성으로의, 즉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의 퇴보이기도 하다. 참여자들은 세계를 국가 단위로 인식하는데, 환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국가 경제 수준이 낮아질수록 국가 환경은 악화된다. 가난하면 당장의 생존을 위해 환경을 황폐화하거나 부유한 나라들로부터 오염과 위험을 이전해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 1차 산업은 사실은 환경이 나빠지는 게 없어요. 근데 2차 산업, 3차 산업, 2차 산업이 제~일 환경이 나빠지죠 2차 산업이. 그다음에 3차 산업도 약간 나빠져요. 미국이나 선진국들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환경 나빠지는 일들은 우리가 안 하고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잖아요. (...) GNP가 높으면 굳이 환경이 나빠지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C_3차)

한국은 과거에 그런 “환경이 나빠지는 일”들을 도맡았다. C는 1960년대 원진레이온 사태를 기억한다. 일본에서 쓰다가 들여온 노후화된 인견 제조 설비에서 발생한 이황화탄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직원 중 8명이 사망하고 637명이 장애판정을 받게 된 산업재해 사건이었다.

예를 들어서 원진레이온 같은 거, 레이온 섬유. 많은 사람들이 직업병으로 죽고 병도 많이 앓고 주변 환경까지도 되게 안 좋아졌던 거예요. (..) 그게 원래 일본에 있던게 우리나라로 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중국, 중국에서 베트남 갔다가 베트남도 그런 건 이제 안 해갖고 스리랑카 이런 쪽으로 간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GNP가 높아지면 그런 걸, 국민들한테 바로 지장이 있는 거 그런 거 안 하죠.(C_3차)

D는 예전에는 한국도 쓰레기를 수입해 재처리해 이득을 봤다고 기억한다. 지금도 그렇게 이익을 보는 다른 나라들이 있는 것은, '선진국'들이 오염을 '후진국'들에게 이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먹이사슬"의 현실로 이해된다.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 그걸 사겠다는 나라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럼 우리도 득이잖아. 그럼 그 나라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환경이 그만큼 좋아졌지. (...) [그 나라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또 그 발전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먹이 사슬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D_4차)

진화론적인 역사관이자 국가적 위계관에서, 성장은 후퇴하거나 추락하지 않기 위한 끊임없는 생존수영이다. 한 발이라도 쉬면 먹힌다는 긴급의식이 그 성장국가이자 공업국가라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한국에서 기후대응까지 신경 쓸 수는 없다. 그래서 A는 한국과 같은 "공업 국가"는 "기후에 대해서 세계에 앞장서서 얘기할 건덕지가 못"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정된 걱정의 장(finite pool of worry)"(Weber, 2006)은 개인적·사회적인 걱정의 장이 한정되어있어 다른 걱정이 주요하게 대두할 때 기후·환경에 대한 우려는 사라진다는 가설이다. 생존이 항상 중심이었던 한국 사회 걱정의 장에서 기후변화·환경은 문제화되지 않았고, 산업화 및 근대화 과정 동안 "자연, 생태, 환경은 단 한 번도 한국 사회의 주요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이재영, 2019: 427).

나. 주변화·타자화되는 환경

1) “환경은 사소한 거야”

생존에 비할 때 환경은 차순위 저편으로 밀려 결국 사소한 것으로 취급된다. 세계적으로 위급하게 대두된 기후변화는 다른 환경 이슈보다는 부각되어 인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른 환경 이슈들과 비슷한 지평에 위치하게 된다.

> 지금 현재는 국가적인 과제는 뭐냐, 물론 사람 이것저것 기후도 중요하고 공기도 중요하지. (..) 그러니까 기후 담당하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있지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국가가. 국가는 뭐나 전체적인 그걸, 에너지라든가 뭘 갖다가 원전을 할 건가 뭐 풍력를 할 건가, (..) 끌고 나가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한 부분을 갖다가 (…)그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 맞지 않는거지.(A_1차)

그간 사회적인 화제가 되었던 환경 이슈를 이야기하다 보면 참여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장단점이 있었지만 장점이 더 컸다는 것이다. B는 홍수 조절과 가뭄을 대비한 물 저장을 4대강 사업의 장점으로, 강의 흐름 차단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단점으로 봤다. “환경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단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피해”에 해당하며,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장점이 많으니 4대강사업은 잘 된 사업으로 평가된다. C도 비슷한 입장이다.

> 아 4대강은~ 이제 강이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강둑이 돌로만 해갖고 세멘를 만들어놓으면 이게 정화가 안 돼요 잘. 생태계가 죽게 돼요. 근데 돌에 보면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뭐 물풀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정화를 하는 거거든. 근데 4대강을 내가 보기에는 그거를 전부 다 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막 제방 뭐 뚝을 만들고 막,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또 장단점이 다 있다고 보는 거야. 뭐..장점은 뭐, 홍수 조절 능력을 가진다던가 아니면 아주 쾌적하고 아주 아름답게 강둑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 뭐 준설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담수 같은 능력을 좋게끔 한다든가 (..) 이제 뭔가 침수되고 장마철에 홍수 때문에 피해 입는 뭐 농작물이나 뭐 농가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겠죠. (…) 잃는 거와 장단점을 볼 때 장점이 많으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어떤 거라도 장단점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점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잘 된 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일단. 주변이 정리가 잘 돼 있고 깔끔하고 이쁘고 멋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그 대신 환경적인 면은 그닥 좋은 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환경적인 면은.(C_3차)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 참여자들은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면 해야한다”는 공리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반대측을 ‘환경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공리주의에서 모든 행위와 결정은 그것들이 다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유용한가 아닌가로 평가된다.

김석수(2002)는 공리주의적 가치관이 근대의 정치·경제 논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공리주의에 깔린 전제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이는 행복의 증대이며 고통의 감소이기에, 이것이 곧 선이며, 그렇기에 전체 사회에 바람직한 것은 사람들 전체의 행복이며, 행위의 옳고 그름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리주의 관점에서 환경은 인간의 행복을 만족시키는 정도, 사회적 후생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 공리주의의 ‘다수’로 집계되는 것은 인간, 국민,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제한된다. 미래 세대,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동식물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Des Jardins, 2012).

자크(Jacques, 2006)은 비인간 자연에 절대적인 중요성이 아니라 도구적 차원에서의 상대적 중요성만을 부여하는 ‘깊은 인간중심주의’가 환경 회의론의 토대를 구성한다고 말한 바 있다. 참여자들의 공리주의는 이 깊은 인간중심주의와 국가주의의 위계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다. 국가의 ‘생존’을 위한 발전의 역사는 이러한 공리주의적 기반과 그 한계

를 모두 노정해왔다.

참여자들은 2000년대 초중반의 천성산 터널 공사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인한 공사 중단 사태를 기억하고, 때론 분노했다. 2003년, 고속철도공사로 경남 천성산을 그대로 뚫고 가는 터널 공사에 대해 한 스님이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터널 공사가 천성산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는 사유였고, 소송 당사자에는 스님과 동료들, 도룡뇽이 포함되었다. 스님의 단식투쟁으로 공사는 3년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는데, 2006년 대법원이 공사가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도룡뇽의 법적 지위를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연물로 규정하는 판결을 냈기 때문이다.

> 도룡뇽이 무슨 뭐 우리나라 대단하다고 그게. (…..) 도룡뇽, 그 도룡뇽 하, 도룡뇽이 뭔데. 그거 참~ 그 아주, 그거 때문에 4년인가 몇 년을 갖다가 스톱해가지고 (…) 그걸 막말로 무시하고 그냥 했어야 돼. 거기에 소모된 돈이 얼마나.. 그거는, 일면만 봐. 아주아주 요만한거. 지금 뭐 세계적으로 다 변하고 동물이고 뭐 저 먹거리도 변해가는 게 많아. 그걸 일일이 그거 가지고 환경을 따지고 있을거야?(D_3차)

참여자들은 중대한 국가 정책이 저해되었다는 것, 그리고 막대한 국가 비용이 손실되었다는 점 때문에 해당 사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도룡뇽과 생태계는 전체적으로, 즉 국가적으로 볼 때 “아주아주 요만한” “일면”이 된다. 그래서 C에게는 이 소송이 이해가 안된다.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해석된다.

C: 그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지. 그 도룡뇽이 뭐 꼭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룡뇽 때문에 그건 핑계지. 그럼으로써 몇 천억을, 몇 천 억, 내가 얼만지는 기억을 못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숫자더라고요. (..) 그런 국가적인 큰 손실을 일으키면서까지 그래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을 뿐이지, 그거는 환경 문제를 진정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모든 면에 득실이 다 있어요. (..) 더 손해보다 이익이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 뭐 물론 뭐 개구리 뭐 두꺼비나 뭐 도룡뇽이나 뭐 다

중요한 것도 있고 다 했지만 그거는 반대를 위[해] 그 사람이 명분을 가지고 했을 뿐이에요. 그냥 내가 보기는.
연구자: 그러면 무슨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봐야한다]
C: 그렇죠! 고 하나만 봐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말하면 안 되죠. 응? (..) 사패산 터널도 (..) 그거 터널을 뚫어 갖고 뭐 이러네 저러네 해갖고 몇 년을 가가지고 거기도 돈 손해를 엄청나게 봤더라고 국가적인 손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C_3차)

비용편익 접근 역시 환경문제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 방식 중 하나다. 비용편인 접근에서는 환경의 가치가 인간 중심의 위계,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되며, 환경의 다양한 가치들이 평가될 수 없다(최병두, 2005). 인간, 혹은 국가의 국민만이 유효하게 고려되는 공리주의적 기반 위의 평가에서 포기되는 쪽은 '사소한' 비인간과 자연환경일 수밖에 없다. 국가 및 성장과 저울질할 때, 환경은 항상 가벼운 쪽이었다.

화이트헤드 외(Whitehead et al., 2007)는 '국가-자연'(state-nature)을 이야기한다. '국가-자연'이란 근대 국가에 의해 자연이 본래 갖고 있었던 물질적 특성 또는 생태적 맥락이 제거되어 추상화된 자연이다. 화이트헤드는 브뤼노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 개념을 빌려 국가가 하나의 '사회생태학적 네트워크(socio-ecological network)' 또는 '틀짓기 장치(framing device)'로서 끊임없이 자연에 대한 집중화와 영역화 등의 전략을 펼치고, 그 과정에서 '국가-자연'이 담론적·물질적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김준수, 2018; 황진태와 박배균, 2013). 이때 '국가-자연'은 그 사회적 의미나 가치는 박탈된 순수한 객체로서 과학적 조사 및 착취의 대상으로 발명된다.

한국의 생존 지향적 발전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자연'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으로 축소 환원되어왔다. 생존을 위한 성장과 개발에서 '국가-자연'으로 축소된 환경은 항상 주변화된다. 참여자들에게 환경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직접적인 '생존'과 연관될 때뿐인 것으로 보였다. 참여자들은 "서울 오면은 공기부터 나빠가지고 막 목이 가래가" 낄 때나 "환경 오염 안 된" 비싼 유기농 농산물을 선택해야 할 때(B),

환경 오염이 되어 “오염되지 않는 물, 지하수는 먹기가 힘” 든 때(C) 환경 오염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 그러니까 GNP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하면 공해에서 벗어나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쾌적하게 살 수 있나 이거 연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공부, 학생도 그거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C_3차)

환경은 인간이 “쾌적하게 살 수 있” 는 배경 또는 도구로 협소화되는 것이다. C에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그런 쾌적한 환경, “잘 다듬어” 진 환경, 그러면서도 인간이 많이 건드리지 않은 환경이다.

> 일본의 후쿠오카 있어요. 저-기 그 북해도. 거기는 가본 중에 제일 그래도 잘-돼 있는, 참 잘 자연이 잘 다듬어지고, 자연이 있는 그대로, 인간이 많이 욕심을 안 부리는 곳은 일본과 후쿠오카-홋카이도, 후쿠오카가 아니라 홋카이도. 어 거기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아 참 일본 여기는 참 괜찮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어요.(C_2차)

환경의 ‘국가-자연’ 으로의 축소는 의미나 가치 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식 범위의 축소로 연결된다. 원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참여자들은 원전의 위험이 그 효용에 비하면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탈원전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 우는 격(C)이라고 봤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원전의 위험에서 “우린 안전하다” 고 주장했다. 한국의 원전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 체르노빌 한 거는 원자력 발전소가 소련 애들 엉성하게 해가지고 그런거고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은 (..) 그거는 바다 해일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 소련(..)하고 일본하고 비교하면 안 돼.(A_4차)

“우린 안전하다” 는 근거에는 지질 지형도 포함된다. C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달라서 지질학적으로 단단한 나라” 로, “불의 고리 선상”

에 있지 않기에 안전하다고 말한다. 이때 위험은 국가 단위로 가동된다.

>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하고 경계선상에 해협에 큰~ 방어벽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지진은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 홋카이도 제일 거기는 백두산하고 연결이 좀 돼 있어 가지고 백두산 쪽에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 백두산은 지진이 일어나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 우리 백두산이 터져도, 여기는 영향이 크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연기가~ 뭐야 뭐예요. 화산재도. 저기 뭐야 일본 쪽으로 많이 간다고, 편서풍이 불어가지고. 우리는 큰 영향이 없다니까. (C_3차)

참여자들의 '국가-자연' 관이자 환경관에서 원전 사고의 영향은 국가 단위로 깨끗이 갈라지고, 폐기물 보관의 위험성은 국가와 전문가가 해결해줄 것으로 믿어진다. 국가 단위 위험 인식과 국가 역할에 대한 신뢰는 참여자들이 흔들림 없이 원전을 지지하는 기반이 된다. 이 기반 덕분에 기후변화 대응은 단지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차원으로 협소화될 수 있고, 원전은 그 협소화된 차원에서 기후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라는 수사를 획득할 수 있다.

2) "환경은 좌파야"

환경은 주변화되고 협소화되는 것을 넘어 타자화되고 나아가 적대화되기도 한다. 환경은 대부분의 경우 성장과 개발의 반대항으로 제시되어왔다. 환경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참여자들이 "인식을 하고 눈을 뜨기 시작"(B)한 것은 "먹고 살만"(C)해진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였다. B는 환경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데 있어서 환경단체와 언론이 주요하게 역할했다고 진술했다.

> 옛날은 다 거의 굴뚝 산업이라고 보면 되거든. 2차 산업. (...) 옛날에는 거의 까만 연기가 올라왔다고. 그때도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서 심각성을 별로

못 느꼈지. 그러나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사람이 이제 환경으로 의해서 사람이 아픈 거 우리 직접적으로 보고 이래서 이제 환경단체에서도 이야기하고 많이 하는 걸 함으로써 또 언론에 많이 타고 하면서 그때 이제 국민들이 많이 느끼기 시작했지 않았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B_3차)

이에 대해 구도완(1996)은 환경 위기는 우발적 사고를 통해 대중들에게 인식되며, 이러한 사고의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입은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위기의식을 갖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산업공해에 대응하는 공해지역 중심의 환경운동은 1960년대부터 있어왔으나 경제성장과 억압적 국가주의에 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한국 환경운동의 시작점은 보통 한국공해문제연구소(1982), 반공해운동협의회(1984),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1985) 등 환경 운동 조직들이 세워진 1980년대로 이야기된다. 초기 환경운동은 반공해운동으로 이루어졌으며, 1983년 온산화학공단 인근 주민들의 환경병, 원진레이온 공장의 이황화탄소 중독증(1988), 두산전자 낙동강 페놀 유출(1991) 등을 다루었다. 참여자들이 '환경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도 그즈음이었다.

당시 폐쇄적인 정치 체제 때문에 초기 지식인 중심의 환경 운동 조직들은 민족 민주 운동과 동맹하여 급진적 변혁 전략을 택하게 되는데, 구도완(1996)은 이를 '좌파 환경주의' 담론으로 분류한 바 있다. 환경 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국가주의이며 이들을 극복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담론은 1980년대 말 민주화로 정치 체제가 비교적 개방되는 한편 현실 사회주의권이 해체되면서 약화되고, 이후 환경운동에서는 다양한 이념과 담론이 모색된다. 이 중 1990년대 이후부터 한국 환경담론의 주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지속가능발전 담론으로, 이는 정부, 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협력하는 환경운동 조직들에게서도 많이 관찰된다.

C는 환경단체를 "좌파"로 인식했다. 다른 참여자들도 비슷했다.

연구자: 그럼 환경단체 하면은 조금 인식이 어떠세요?

C: 다~그런 애들이 다 그런 좌파 애들이야. (..) 왜 그런가 하면 환경단체 이

런 애들은 네거티브 애들이, 예?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 애들이 많아요. 네거티브 애들이 거의 좌파 성격이야. 다. 네거티브는 우파는 포지티브고 좌파는 네거티브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우리는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깃발을 드는 사람들은 거의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가 많거든. (C_3차)

환경운동 초기 역사를 돌아보면 참여자들이 환경 운동을 좌파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상당수 환경운동조직들이 참여자들의 기본방향인 경제성장과 일치하는 지속가능발전 담론을 택하게 되었음에도 '환경=좌파'의 인식이 불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구도완과 홍덕화(2013)는 1993-2011년 사이 환경단체들의 주력 분야는 생활과 직결한 환경 문제, 대규모 국책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핵문제와 생태보전 등이었다고 분석한다. 환경단체들의 정부와의 협력은 2000년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 등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 가장 활발했다. 환경운동단체의 위상이 강화된 것도, 개발세력과 비등하게 겨루어 대규모 개발을 철회 또는 일시 중단시킨 사례들도 동강댐, 새만금사업, 천성산 터널 등 이 시기에 집중되어있다. 환경운동과 정부와의 협력은 참여정부 후반부터 약화되기 시작하고,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로 환경운동은 정책과정에서 배제된다.

'환경단체=좌파'라는 참여자들의 인상은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시기의 기억을 중심으로 재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인상은 "한국 환경운동의 잘못된 진화"라는 부제의 2012년 월간조선 기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고에서는 환경운동이 진보 정권하에서 정치권력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천성산 터널, 새만금 간척사업, 사패산 터널 등 국책사업 공사가 환경단체 반대로 중단되며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5조 3천억원으로 추정했다. 한국 보수 개신교 연합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4대강 사업 반대 세력을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좌파와 동일시했다(김신영과 윤순진, 2013). 이는 "좌파는 네거티브"라는 C의 말과, 또한 D와의 4차 인터뷰 중 D를 찾아온 D의 친구가 연구자에게 전한 당부의 말의 맥락과 일치한다.

근간에 (…)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너무 좌파 세력이 많았다고. 그런 데서 과연 진정하게 우리 저 뭐야. 환경을 염려하고, 하러 왔는지, 아니면 자기네들 주사파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이 이념 때문에, 그쪽을 유도하기 위해서 참여했었는지, (...) 그 좌파 세력에 의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국력 낭비를 너무 많이 한 거야.(..) 그 사람들이 협조적으로 좋게 유도하고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반대하지 않고 그 비용을 그쪽으로 투여했으면은, 더 발전할 수 있을 건데.

참여자들에게 있어 환경단체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해세력이다. 따라서 환경단체는 냉전식 생존주의의 논리상 “반공주의의 회로판” (권혁범, 2000)을 타고 좌파, 공산주의와 연계되며, 이 논리는 환경운동의 일부 역사적 사실들로 뒷받침된다.

또 하나 참여자들이 환경단체와 좌파의 공통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특징은 이상적이고 이념적이라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모두의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가 “이상은 좋” 지만(D), “현실에서는 괴리가 상당한” “허울만 좋은 거” (C)라고 말했다. 현실에서는 “계급이 없을 수가 없” (B)기 때문이다. 좌파도 비슷하다. “말을 도덕적으로 하” (A)면서 “잘 사는 나라를 갖다 지금 (...) 말아먹는” (D) 세력이다. 그러니 “국가의 (..) 미래” (A)를 생각하지 않고 국책사업 반대를 밀어붙이고, 국가 성장의 말 그대로 핵이 되는 원전을 “상식적으로 생각 안하고” “너~무 그 이념적인 정책으로” (A) 폐기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환경단체=좌파의 인식 상 참여자들은 환경운동의 진실성을 신뢰하지 못한다. 참여자들 중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크게 받아들이던 C가 기후・환경운동에의 참여를 주저하게 되는 이유도 “정치적으로 이용”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알아요. 환경은 중요하고 우리가 인류에게 물려줄 재산이라는 걸 알아요. (..) 그치만은 알지만 걔네들은 그거를 역이용해가지고, 걔네들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뭐

라고 그러는 거지. 환경 보존해야 되고 환경 그거는 누구나 다 알죠. 초등학생도 아는 일이지. 근데 걔네들은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C_3차)

C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순수하게” 한다면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연구자: 이게 환경도 그렇고 사실 기후 변화도 그렇고 다들 이제 심각하다는 인식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진짜 뭐 좌우할 것 없이 좀 나서야된다 이렇게 되면 할 수 있을까요?
C: 좌우……할 것 없이. 진짜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순수하게 해야 한다면 할 수 있겠죠. 걔네들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정치적인 걸 빼고! 좌우를 빼고! 정말로 이걸 필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죠 당연히. (C_3차)

다. 생존주의의 환경담론: ‘생존’ 할 수 없는 생존주의

지금까지 참여자들의 생존주의의 마음, 진화론적 역사관과 인간과 국가 중심의 위계관에서 기후변화와 환경이 문제화되지 않고 주변화되고 협소화되며 나아가 타자화되고 있는 상황을 기술했다. 참여자들에게 기후·환경 문제는 중심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뤄야 할 문제 중 하나로는 인식되어있다. 본 절에서는 참여자들의 기후·환경 문제에의 접근 관점을 환경담론으로서 분석한다. 분석의 주요 토대로 삼는 것은 드라이젝의 환경 담론 분류다.

드라이젝(Dryzek, 1997)은 “세계를 이해하는 공동의 방식“으로 담론을 정의하며 환경담론을 분류한 바 있다. <표 2>에서와 같이 환경담론은 산업주의로부터 탈피가 근본적인가 혹은 개혁적인가, 답습적인가 혹은 창조적인가의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 - 생존주의*, 문제해결, 지속가능성, 녹색근본주의 - 로,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주의, 행정적 합리주의, 민주적 실용주의, 경제적 합리주의, 생태적 근대화, 녹색낭만주의와 녹색합리주의 등의 9가지로 다시 세분화된다. 생존주의*[4]는 지구와 자원과 생태계 수용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산업주의로부터의 전면 탈피를 요구하는 담론이며 산업주의 기반 위에서 답습적으로 움직인다. 녹색근본주의는 산업주의로부터 근본적이고 창조적으로 탈피하려는 담론이다. 문제해결 담론은 환경문제를 정부나 시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통해 풀고자 하며, 지속가능성 담론은 환경과 경제 사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세부 담론은 주요 4개 담론에 속하는데, 단 프로메테우스주의는 생존주의* 담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반대항으로서, 기존 산업 경제 지지자들로서 제시된다.

---

4) 이론적 배경 절에서 언급한 대로, 드라이젝의 환경 차원에서의 생존주의를 김홍중의 생존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생존주의*로 표기한다.

표 3. 드라이젝의 환경담론 분류

<table>
<tr><td>산업주의 탈피</td><td colspan="3">개혁적</td><td colspan="2">근본적</td><td></td></tr>
<tr><td rowspan="2">답습적</td><td colspan="3">문제해결</td><td colspan="2" rowspan="2">생존주의</td><td rowspan="2">프로메테우스주의</td></tr>
<tr><td>행정적 합리주의</td><td>민주적 실용주의</td><td>경제적 합리주의</td></tr>
<tr><td rowspan="2">창조적</td><td colspan="3">지속가능성</td><td colspan="2">녹색근본주의</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지속가능성</td><td>생태적 근대화</td><td>녹색 낭만주의</td><td>녹색 합리주의</td></tr>
</table>

*출처: 드라이젝(Dryzek, 1997) 재구성

구도완(2006)은 드라이젝의 담론 분류의 두 기준 모두 산업주의로부터의 탈피와 관련되어 있으며 답습적/창조적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여 분류가 모호한 지점들이 있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그는 드라이젝의 담론을 참고하며 변형해 산업주의의 개량/변형, 낭만주의/합리주의의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산업주의를 유지하며 개량하느냐 혹은 변형(transform)하느냐, 합리성과 이성에 근거하는가 반이성과 탈근대에 근거하는가에 따라 환경담론은 생태권위주의, 지속가능발전론, 녹색 낭만주의, 녹색합리주의로 나눈다. 생태권위주의는 산업자본주의의 변화 없이 권위주의적 정치 동원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담론이다. 지속가능발전론 역시 산업주의·자본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과학기술을 이용해 환경 문제와 빈곤을 해결하려는 담론이며, 여기에서 중요한 주체는 민주적 국가다. 녹색낭만주의는 내면의 변화를 통해, 녹색합리주의는 합리성과 과학기술을 통해 산업주의와 자본주의를 변형하고자 한다.

구도완(2006)의 도식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드라이젝의 분류가 환경 담론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세분화해 놓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담론 분석에 유용한 지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드라이젝(Dryzek, 1997)의

분류를 기본하고 구도완(2006)의 분류를 참고하기로 한다.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산업주의와 경제성장을 자연시하고 있으며, 기후・환경문제에의 실질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문제해결 담론, 특히 행정적 합리주의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세계관 및 역사 인식에는 생존주의*(A, C, D) 혹은 프로메테우스주의(B)의 양상이 드러난다.

1)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 담론: “뭘 하긴 해야돼”

참여자들의 일상적 행동 중에는 최근 친환경적, 탄소중립 행동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것들이 많다. 기후・환경 문제를 많이 인식하고 있던 C는 항상 개인컵과 장바구니를 들고 다녔다.

나는 병원에서 지금 출근해도요. 컵 같은 거 직원들 그거 쓰지 말아라 그래. 자기 자기 컵 스댕컵 하나씩 아니면 유리컵, 자기 컵 뚜껑 있는 거 그거 준비했다가 (..) 마시고 버리고 왜 그런 짓 왜 하냐 이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식기 세척기 (..) 쓸 필요 없이 (..) <장바구니 꺼내며> 이런 이런 거 꼭 갖고 다니면서 비닐 같은 거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렇게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환경 땜에 전부 다 이거 조그만 것부터 내가 준비를 해서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C_3차)

C는 “정치적으로 이용만 안한다면” 기후・환경 관련 서명이나 집회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B는 기후・환경에 있어서 “몸으로 뛰지 않았지만 생각이 많이 가있다”고 말한다. 재활용 제도나 일회용 봉투 또는 빨대 등 일회용품 금지 제도에 “적극 호응”을 한다는 것이다. 모든 참여자들은 최근의 기후・환경 행동 장려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예전부터 꾸준히 소위 친환경 행동으로 분류되는 실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등산을 자주 다니는 A는 산에 쓰레기가 있으면 줍고, 넝쿨을 정리했다. 물과 전기를 절약하고 물건을 오래 쓰는 등의 ‘근검절약’은 대부분 참여자들이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져온 습관이다.

우리 때는 못 먹고 못 하니까 절약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웃기는 얘기지만, 밥을 먹을 때 밥 한 숟갈, 두 숟갈을 쌀을 덜어 놔. (..) 그걸 학교를 가지고 와. 그걸 못 먹는 사람들.. 한 숟가락 덜 먹으면은, 열 사람이 한 숟가락을 덜 먹으믄, 열 숟가락이 되지. 한 사람이 먹게 되지. 그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잖아. 그런 거야. 근검절약이라는 건 모든 걸 아껴가지고 덜 쓴 만큼의 여유분이 남은 그걸, 나눠 쓰는 거라구. 그러니까, 열 사람이 열 사람이 있어야 한 숟가락 가지고 나가지고 한 사람이 더 먹으면 한 사람 살릴 수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 죽어. (D_4차)

모든 게 부족한 시절 함께 살기 위해 아껴야했던 '근검절약'의 행동은 최근의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적 실천 행동들과 겹치는 지점이 많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이러한 개인적 행동들은 환경 문제 대응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된다고 봤다. 가장 중요한 주체로는 정부가 꼽혔다. 이는 대부분의 한국인들과 유사하다. 입소스(Ipsos)의 2022년 설문조사에서, 한국 응답자들은 탄소배출을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를 감소시킬 책임이 있는 주체 1순위로 정부(90%)를 꼽았는데, 이 응답율은 31개국 평균치(77%)를 상당히 큰 차이로 웃돌았다. 그다음으로 기업(89%/평균76%), 그리고 개인(81%/평균74%)이 뒤따랐다. D는 "파괴하는 건 개인이 할 수 있지만 복구는 개인이 못"한다고 말했다. C도 그랬다.

내가 나부터 해야 되지만 나부터 한다고 그래도, 대다수 사람들이 인식을 못한다든가 안 하면 그거는 뭐 정말 요원한 거죠. 생각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C_2차)

A는 "인구밀도가 높고" "공업 국가"인 한국은 불가피하게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지만, 감소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노력은 "민주주의"로서가 아니라 "전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는 환경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에서" "방

만하게” 이루어지는 개발에 있다고 본다.

> 자유롭게 개발하고 뭐하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에서 뭐 그렇게 이동 인구도 별로 없는데 도로를 그런 식으로 (..) 방만하게 도로를 닦아가지고 (..) 그것도 농지 훼손이고 자연 훼손 아니야. (..) 산을 뚫어봐 자동적으로 거기에 물을 흐르던 물이 안 되는 거야. 모든 자연은 자연적으로 흘러야 되는데, 산을 뚫고 산을 중허리를 갖다가 터널 뚫어버리면은 물 그게 틀리잖아. (..)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첫째, 나는 우리나라는 이런 민주주의 국가는 안돼, 민주국가는 안 돼. 안 되고 조금 우리나라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전제적인 국가가 좀 돼야 돼. (A_2차)

여기에서 관찰할 점은 천성산 터널 공사에 있어서는 개발을 지지하던 A가 산을 뚫는 공사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방만한 개발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A에게 국책사업, 즉 ‘나랏일’은 절대적이지만, 무분별한 “국민 욕구”에 기반한 민간사업들은 어느 정도 통제와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 통제의 주체는 역시 정부다.

> 그게 [지역 도로 공사] 이제 할 때는 뭐 정치인들이 이놈들이 공약한단 말이야. 응? 쉽게 말해서 곧 닦겠습니다. 듣기 좋잖아. 그럼 또 거기에 협잡한 놈이 누구야 건설회사란 말이야 공사를 해야 먹고 사니까 정치인하고 협잡해가지고 막 닦는 거야. 근데 국가적으로 뭐냐, 그거 도로 (..) 관리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돈이 들어. (..) 돈도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 국민 세금이 나온다고. (..) 그것도 자연 파괴 행위 아니야. (...) 일본 국가 한번 가봐. (..) 필요한 데만 도로 닦아 놨다고. 한국 같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안해놨어. 이게 전부 다 민주정부라는 소위 말해서 민주 정부라는 놈들이 국민이 좋다 그러면 그냥 다 하는 정책에서 나온 거야. (A_3차)

A가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 것은 모든 ‘한국인들’이 다 믿을만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상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한국인의 “국민성”은 “선진국 국민”이 되지 않았다. 이런 한국에서

문제 대응의 주요 행위자는 역시 정부이며, 정부는 위계적으로 국민들/사업들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C와 D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A, C, D는 무분별한 도시팽창을 막고 녹지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1971년에 도입된 그린벨트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 지금 그린벨트가 거의 많이 줄어들었지만, (..) 세계에서요. 제~일 잘했던 게 그린벨트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린벨트를 다 망가뜨려갖고 집을 짓고 다 했으니까. (C_2차)

D는 그린벨트를 언급하며 박정희를 "환경의 제일 일인자"로 칭하기도 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의견은 "산업주의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권위주의적인 정치 동원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136-137)한다는 점에서 구도완(2006)이 제시한 생태권위주의의 전형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최우선목표는 어디까지나 생존경쟁의 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제성장이므로, 환경정책을 최우선시하는 생태권위주의와는 그 초점이 달라, 어디까지나 문제해결 담론의 영역에 머문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하여 참여자들이 제안할 수 있는 환경정책들은 개발의 주변부를 관리하는 정도에 머문다. A는 대국민 환경교육을 언급했다.

> 우리나라는 지금 그 기후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할 그게 없다고. 단 할라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한테, 이 쓰레기 함부로 못 버리는 거 이거 그, 그런 운동을 해야 돼. (..) 또 뭐 쉽게 말해 일회용품 사용을 좀 자제한다든가, 그 컵 같은 거 한 번 쓰고 버려버리고, (…) 그런 거를 (..) 교육을 시켜야 돼. (...) 교육 과정에 넣어야 된다고. (A_4차)

한편 B는 특히 전문가들의 역할을 중시했다. B는 천성산 터널 공사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사가 진행된 것을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각 연구기관에 이제 의뢰를 하지. 각 교수들, 주로 교수들한테 많이 하겠지. (...) 공신력이 있는 그런 연구기관에 한두 군데 아니고 여러 군데 해가지고 장기간 검토해가지고 결론을 내렸겠지. (..) 그러니까 쭉 해가 결론 내려가 여기 기관 a b c d 기관 다 맡겨가지고 공통 결론을 내려가지고 아, 영향이 없다 이랬기 때문에 국가에서 오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 (...) 학자들이 또 그런 양심을 또 안 팔잖아. 학자들이. 자기가 결론 잘못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연구기관에서는 어떻게 책임이 따라야지. (B_3차)

B의 의견은 행정적 합리주의 담론의 특징을 보여준다. 행정적 합리주의는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 중 하나로 위치시키며, 국가의 권위보다는 기술적 합리성과 전문성을 더 중시한다. 그린벨트를 높이 평가하던 C는 개발사업에 있어 환경영향평가가 실질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모든 사업은 다 검토를 하고, (…) 문화 무슨 개발하려면 문화재청, 환경청, 여기저기 전~부 다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 우리가 조그만 땅을 개발을 해도 (...) 환경심사도 받고 다 하거든요. 평가를 받고~ 그,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실익을 따져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다 살펴보고 다시. (C_3차)

비용편익 분석과 위험 분석 기법은 행정적 합리주의 담론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이기도 하다. 비용편익 분석의 암묵적인 전제는 공공 정책 결정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문제이며, 일반 대중이나 비전문가는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적 합리주의 담론에서 자연은 인간의 문제 해결에 종속된다. 인간은 국가에 종속되고, 국가 위계는 전문지식으로 정당화되며 그 속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전문가와 관리자다.

환경 문제 대응의 기본 행위 주체가 되는 국가로서의 모범 사례는 선진국이다. A는 노르웨이와 일본, 프랑스 등의 선진국을 언급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 자원이 풍부하고 국민들이 땅덩어리 넓고, 그거

도 공장 안 세워. (…) 그리고 또 이런 것[플라스틱 물통]도 많이 쓰지 않아. 그게 선진국이라고. (A_4차)

C는 “GNP가 환경에 비례한다”고 말한다.

GNP가요 곧 환경하고 같이 간다니까요. 이북 같은 경우는 완전 민둥산이에요. 걔네들은 엉망이야 엉망, 환경이-왜냐하면 GNP가 그렇게 (..)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무에다가 불때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GNP도 환경하고 같이 비례하는 것 같아요. (C_2차)

이전 절(연구결과의 2-가-3))에서 봤듯이, GNP가 높은 “미국이나 선진국들”, 그리고 현재의 한국은 “환경 나빠지는 일들은 우리가 안 하고 다른 나라로 보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살수록 나는 공해에 가까운 것들은 만지지를 않고, (..) 다른 나라의 손을 빌려갖고 (...) 그러니까 GNP가 높을수록 모든 공해적인 거 내 몸에 그 기후위기나 뭐 이 모든 게 나빠질 거는 안 한다는 거죠. (C_3차)

A와 C의 선진국에 대한 언술에서는 ‘약한 생태적 근대화’ 담론의 특징이 발견된다. 생태적 근대화는 자본주의 정치경제를 환경적으로 보다 건전하게 재구성하여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크리스토프(Christoff, 1996)는 이 중에서도 약한 생태적 근대화와 강한 생태적 근대화를 나누어 논한 바 있다. 사회경제체제의 광범위한 생태적 재구조화를 고려하는 강한 근대화와 달리 약한 생태적 근대화는 국가 단위 위주의 경제중심주의로 환경문제의 기술적 해결에 중점을 둔다. 드라이젝은 생태적 근대화 담론을 지속가능발전 담론 하위에 위치시켰지만, 약한 생태적 근대화 담론만 놓고 보면 이는 문제해결 담론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약한 생태적 근대화 담론에서의 의사결정은 과학・경제・정치 엘리트들이 독점하는 기술조합주의적 스타

일의 정책 결정이라는 점에서, 문제해결 담론 중 행정합리주의와 통한다. 약한 생태적 근대화 담론은 생태적 근대성으로의 단선적인 발전 경로를 상정하는데, 즉 모든 나라는 산업과 기술 발전을 통해 생태적 근대화를 달성하는 진화론적 도식 위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약한 생태적 근대화 담론을 행정합리주의 담론에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보완하는 차원의 담론으로 볼 수 있다.

중간 정리하면,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성장과 산업주의・자본주의 체제를 당연 전제하고, 환경 위기는 하나의 해결할 문제로 보며, 해결의 주요 행위자를 국가 내지 국가의 엘리트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의견은 드라이젝의 문제해결 담론, 특히 그중에서도 행정적 합리주의 담론, 그리고 그와 맥을 같이 하는 약한 생태적 근대화 담론의 지평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가 차원을 넘어서면, 참여자들의 '문제해결'은 한계에 부딪치는 것으로 보인다.

2) 국가 차원 문제 해결의 한계: "중국을 봐" / "이 쬐끄만 나라에서 뭘하겠어"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 한 국가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주체성이 요구된다는 지점에 다다를 때, 한국의 책임성은 순식간에 희석됐다.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한 책임성 희석의 수사는 "중국을 봐"와 "이 쬐끄만 나라에서 뭘하겠어"였다.

D: 해결을 하나하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 개인이나, 소그룹 가지고는 안 돼. 다 같이 참여를 해야돼. (...) 파괴하는 건 개인이 할 수 있지만 복구는 개인이 못해.
연구자: 그럼 전체라면 그러니까 정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D: (…) 크게 보면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돼. (…)
연구자: 그러면은 그걸 정부랑 국제사회랑 기업이랑 있다면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주체가..
D: 원래 파괴자는 요만큼인데, 이걸 복구하려니까 그러니까 요거보다도 좀

큰 규모의 조직체가 있어야 되고 고거보다도 더 큰 조직체, 아주 끝에 가서는 국제, 그러니까 환경 보호를 위해서 국제, 그린피스 같은 게 국제적인 거 아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파괴하는 건 중국 놈들이 제일 많이 파괴하고 있잖아 지금. (D_4차)

습..그거는 내가 보면.. 우리나라만 해서도 안 되고, 세계가 전부 다 같이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함으로써 국가는 국가대로 따라가고, 국가에서 지침을 내리면 개인도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뭐 개인이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국가가.. 뭐 우리나라만 해서도 안되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세계가 다 같이, 그거에 대한 연맹이 돼가지고 서로 목소리를 하나로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해서도 될 일이 아니거든 이건 우리나라는 쬐그만데 뭐.(C_2차)

노가드(Norgaard, 2006)는 노르웨이 한 지역사회의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는데 방해되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평범화 또는 최소화하는 부정(denial)의 인지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참여자들은 탄소배출 영향이 큰 미국 이야기를 꺼내들거나(“미국이 중요해(America as a tension point)”), 나라 인구가 적다는 것을 강조한다거나(“노르웨이는 작은 나라야(Norway is a little land)”) 하며 노르웨이의 배출 책임을 최소화했다. 이러한 인지 전략이 연구 참여자들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우리가 가까이 중국을 보자고. 이 중국에는 십억이나 넘는 나라에 있어, 저기에서 나오는 (..) 자연재해, 폐해, 오폐수 이런 거는 참,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규모지.] (B_3차)

우리나라가 한다고 그래도 땅 덩어리가 조그마한 데다가 한계가 있잖아. (A_3차)

“중국을 봐” 와 “이 쬐끄만 나라에서 뭘 하겠어” 수사는 Lamb 등(2020)이 정리한 기후지체담론 중 ‘책임 전가 담론’ 상의 ‘그쪽이야

말로주의(Whataboutism)’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담론에서는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니 더 큰 책임이 있고 자신의 배출 책임은 적다는 것을 강조하며, 다른 이들이 먼저 행동해야 함을 주장한다. A와 C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 어차피 뭐~든 간에 미국이 앞서 나와야 돼. 미국이 안 나와가지고는 일이 될 수가 없어. (A_3.5차)

> 사실은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한다면, 우리 세계를 다 이끌어가는 데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 달러를 자기네가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또 나라고-뭐 미국은 모든 경제 성장도 모든 군사력도 모든 거를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인데] 미국이 그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보면 뭐 끝이 누가 되든 간에 끝까지 그리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선진국들은 그래~ 좀 더 늦추자 늦춰보자 좀, 그렇게 릴렉스하게 가자 그러지만 말로만 그러지, 사실은 그거를 이행하는 나라는 없다고 봐요 사실은. (C_2차)

이는 참여자들의 세계관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다. 참여자들은 환경보다 인간이 위에 있으며, 인간들 사이에도 불평등이 자연시되는 위계적인 세계에 존재한다. 국가간에 선진국-후진국의 위계가 있으며, 선진국 중 1순위는 미국이다. 기후변화 대응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미국의 리드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세계적인 합의가 된다면 합의 사항의 실행은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합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긍정적이었다.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 묻자 참여자들은 모두 긍정했다.

> 그거는 내가 보면 잘 사는 나라는 당연히 있어야죠. 자네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모른다 모른다 하고 있으면 안 되죠. (..) 아 지네가 잘 살기 위해서만 내뿜는 탄소세를 세계에 아무 죄 없는 나라가 그걸 함께 영향을 받아선 안 되잖아요. (C_3차)

탄소 저감 줄이는 거 그런 거는 필요하다. 왜, 어차피 그거는 기업에서 부담이 가더라도, (..) 기후 변화로 생기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인간들이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된다. (B_3차)

A는 이 밖에도 “선진국이 선도해가지고”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세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끊임없이 생존수영을 하는 약소국인 한국이 할 수 있는 바는 미약하고,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미약하니 참여자들은 기후문제의 해결 양상을 선진국이 주도하기를 바라보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그에 대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의 전망은 비관적이었다.

연구자: [국제 단위 공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D: 어렵지. 여기 선을 그어놓고, 니 나라 내 나라야. 근데 제3국에서 지랄한다고 되겠어. (D_4차)

우리보다 더 선진국들이, 이걸 늦춰주면서 우리 그 후진국 사람들도 좀 도와가면서,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데- (..) 뭐 말은 해도~ 후진국 도와주기는 도와주겠지만 그것도 뭐 한계도 있을 것 같고.. 자기네들이 좀 더 더 잘 살라고 예를 들어서 뭐 록펠러나 뭐, 네? 아주 쉽게 말해서 클린턴 같은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 아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해야하는데 그런 사람이 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기대, 말로만 할 뿐이지 사실 실질적인 큰 기대는~ 하는 거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왜 자기네가 안 하는데 뭘, 우리가 뭐 되겠어요 그게? (C_2차)

그거는, 그거는, 인간이 있는 한은, 생각은 그런데 그게 실천이 되겠냐고. 당연히 그래야지 그지? 그렇지만 그게 실천이 되겠냐고. (..) 세계 각국이 하겠다. 할 수 있겠냐고, 그게 안 되지. 특히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나아갈 길이 있을 것이고 또 후진국은 후진국 나름대로 아니 너네들 하면 우리는 못하냐 또 그게 있을 것이고 그게 합의가 안 되잖아. (A_3차)

이러한 전망은 비관적 역사인식으로 연결된다. 역사인식에 대한 이야

기에서, 참여자들은 또다른 환경 담론을 드러낸다.

3) 생존주의* 또는 프로메테우스주의: “이러다간 다 죽어” / “발전은 영원할거야”

전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는, A, C와 D가 보기에는 잘 해결되기가 힘들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가 기후대응을 위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욕망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 인간의 욕망은 항상 내가 현재보다 더 이제, 더, 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잖아 그지? 한이 없으니까 그거는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참 지구 기후 문제를 갖다가 인간이, 좀 그 원시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원시적으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잖아, 그지? 조금 더 뭐 내일보다 더 잘 살고 싶고 그런 욕망이 있잖아. 그건 참 굉장히 힘들고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A_3차)

> (..) 인간 스스로 파멸을 만들어, 해서~ 그냥, 지 살 깎아 먹는 지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자손들이 끝내는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그냥 우선 갖고 오는 그.. 그 뭐 돈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거 갖다가 그냥.. 자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 인간이 지금 이미 이기적인 인간들이 인간이라는 게.. 원래 다 아시잖아요. 성악설이나 성선설이나 뭐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좋은 마음 속에서도 자기만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 우선 그냥 좋을라고 자꾸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C_2차)

“이기적인” 인간의 “한이 없”는 욕심으로 만들어지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하여 장기적인 미래 전망은 밝을 수가 없다. A는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로 향후에는 “멸망될 확률”이 있다고 본다.

> 앞으로 인간이 점점 더 편해지기를 원한단 말이야. 응? 뭐 하자면 하여튼 앉아있으면 편해지기를 원한단 말이야. 편해지기를 원할수록, 자꾸 그 기후

와 자원은 고갈되는 거야. 고갈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그게 참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 같아. 그리고 앞으로 수 년 후면 인간이 내가 볼 때는 멸망될 확률도 있다고 봐. 인간이 멸망될, 왜냐면 뭐 남극 없어지고 북극 없어지고 뭐 없어지고 뭐 없어지고 해버리면 (...) (A_3차)

이 인간의 욕심이란 것은 생존경쟁의 세계관에서 '본능'이라는 이름으로, 또 생존을 위한 필요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된다. D는 영원히 계속되는 이념경쟁의 장에서 인간의 욕심, 즉 "나만 살고자 하는" 생존을 위한 욕망은 계속될 것이고, 그로 인해 지구는 결국 파괴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D: 언젠가는 [지구가] 없어지고 그렇게 돼. 지금 첫째는 그 크게 보면 원자력, 원자력..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이거까진 좋았는데 폭탄을 만들어. 그 살생이야. (..) 그러니까 더불어 살 생각을 안 하고, 나만 살고자 하는. (..)
연구자: 그러면 이게 선생님은 나중에 언젠가 다 망한다는 그 생각을 그럼 하시는 거예요?
D: 그러니까 지끔, 자유진영하고 공산주의고 싸우잖아. (..) 그 이념 전쟁. 이게 영원히 없어진다고 보질 않아.(..)
연구자: 그러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이념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끝날 수가 없고.
D: 영원히 끝나지 않아 난 끝난다고 보지 않아.
연구자: 그럼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 좀 파괴될 거다.
D: 파괴된다. 지구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이걸 부르짖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 환경 환경 그래가지고 그린피스 뭐 다 그렇게 해도, 그래도 여기까지 오잖아. 지금도 파괴가, 더 많지. 재생을 할 수 있는 것보다 파괴가 더 많아. 계속 미루어지지 복귀가 안 되잖아. 복구하자고 애를 쓰지만 부르짖으는 그 열 개 파괴하면 두세 개 정도 이제 복구가 되는 그 정도야. (D_4차)

GNP와 환경개선이 비례한다고 했던 C는, "GNP하고 정서적인 메말라감은 비례하는 것 같"다고도 말한다. 이기적인 마음이 "정서적으로 내

몸에 본능적으로 딱 박혀 있는” 인간들은 “끝내는” 다 망가질 것이다.

> 우리 GNP하고 그런 정서적인 메말라감은 비례하는 것 같아요. (..) 그런 것들은 그래서 삶의 질을 위해서 그걸 좀 늦추자는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게 되겠느냐고요. 사람들은 이기적인, 그 본능적인 그런 것들이 더 잘 살려 그러고 더 가지려고 하고 이기적인 게 내 정서적으로 내 몸에 본능적으로 딱 박혀 있는데 그게 되겠느냐고요 그게. 힘들죠 그게.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건데 인간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다 망가질 거야 끝내는. 끝내는 그게 끝내는 망가지고 말 거예요. 뭐 몇십 년 몇 백 년 후가 몇천 년 후가 되는지 몰라도 끝내는 망가질 거라고 보죠. 지구는 없어질 거라고 보는 거야 저는. 끝내. (C_2차)

참여자들의 이러한 의견은 드라이젝의 환경담론 분류 중 생존주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존주의* 담론에서 생태계는 한계를 가진 자원으로 이해되며, 이 생태계가 자유롭게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 파괴되는 ‘공유지의 비극’을 기본 메타포로 삼는다. 여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자원 보존을 위한 상호 강제가 필요하고, 그 행위 주체는 엘리트들이 된다. 위계를 자연시하는 생존주의* 담론에서 대중은 자기 통제의 미덕이 없으며, 엘리트 집단에 의해 관리조정되어야 한다.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드라이젝의 생존주의*의 생존, 즉 지구적 한계로부터의 생존보다는 냉전식 생존주의의 생존, 즉 이념경쟁과 빈곤으로부터의 생존을 우선시해왔기에 전형적인 생존주의*로 분류될 수는 없다. 지구적 한계로부터의 장기적인 생존은 일단 이념경쟁과 빈곤으로부터의 지금 당장의 생존을 선취하고 난 뒤에야 고려할 수 있는 것, 지금으로서는 신경쓸 여지가 없는 것이었기에 참여자들은 생존주의*를 강력히 표방하지 않고, 당장의 기후·환경 문제 대응에 있어서 현실적인 방책으로 문제해결 담론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지구적 한계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으로 언급하지 않는 문제해결 담론의 기본 입장과는 달리, 참여자들은 깊이에서는 생존주의*의 세계관을 담지하고 있다. 생존주의* 차원의 해

법을 주장하지 않을 뿐이다. 장기적 생존이 당장의 생존에 밀리기도 하지만, 장기적 생존의 해법에 있어 참여자들에게는 어떤 주도권도 없기 때문이다. 마땅히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엘리트 집단, 즉 전지구적 차원에서는 선진국들이고 미국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기대를 걸 수도 없는 것이,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끝없는 욕망을 가진 이기적인 인간상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B는 참여자들 중 유일하게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기후변화로 인한 우울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언급하던 중 B는 말했다.

B: (..) 모든 국가를 이끄는 것은 소수가 뭐 옛날에는 2프로인데 요즘은 한 5프로라고 하더라만은 그런 소수의 5프로가 전체를 끌고 간다는 식으로, 이 어린이들도 그래서 그 중에서 2,3%라든지 이런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애들이 더,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들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을 보는 사람, 보는 애들은 그것도 맞아. 그러나 또 그렇지 않고 또 이거를 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그렇게 밝은 면을 또 보고 나가는 어린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가 자꾸 발전하는 거지. 발전, 진보, 발전, 과학이 발전하는거지.
연구자: 발전을 계속해 나간다면 어떤 사회가 될까요?
B: 그러게 어떻게 발전할지 상상을 못하지 우리는. 우리가 지금 pc라든지 이거 pc라는 pc가 이렇게 컴퓨터가 뭐 몇 세대 컴퓨터 뭐뭐 지금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했겠어요? 메타버스라는게 전부 보니까 나는 안 봤는데, 이게 쓰면은 내가 생산하는 거, 뭐 사회가, 뭐 다 그대로 다 움직인다며, 그런 생각도 못하는 전개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발전이란게 어떻게 발전될지 상상할 수가 없지. 지금 크는 애들, 자라는 세대 애들이 또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지.
연구자: 발전이라 그러면 과학기술 발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B: 그렇지. 과학이 앞서야만이 과학이 앞서야만이, 또 경제가 따라가겠지. 따라가겠지. 먹는 것도 엄청 비약적으로 발전했잖아요. 먹는 거도. 먹는 것도~ 뭐 요즘 뭐 티비도 음식 만드는거 보니께 별 것 다 있더만. 마찬가지로, 삶이 여유로워지고 나아지면은 또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나아지면 그 다른게 또 발전 또 한다고, 어떤 발전이 생길지 모르지만은 상상을 못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B_3차)

B는 과학의 발전을 필두로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대응에 있어서나 사회가 조금씩 발전해나갈 것이라 믿었다. 이러한 B의 생각은 드라이젝의 프로메테우스주의 담론을 떠올리게 한다. 인간의 위대함을 강조한 영화 '인터스텔라'의 포스터 문구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 늘 그래왔듯이"로 대표될 수 있는 프로메테우스주의는 인간과 과학기술의 힘에 대한 무한한 확신을 기반으로 한다. 이 담론에서는 진보와 경제성장을 선으로 바라본다. 이 존재론의 세계관에서는 자연자원/생태계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자원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오염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담론에서는 인간이 인간 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위계 구조, 그리고 인간 간의 경쟁이 자연스러운 관계로 인식된다. 엘리트들만을 행위 주체로 보았던 생존주의 담론에서와는 달리 프로메테우스주의에서는 대중들 하나하나를 잠재적인 문제해결자로 인식한다. B는 다른 참여자들과는 달리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생활의 욕구라는 것이, 좀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경제적으로 뭐, 모든 게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생활이잖아요. 그러고 이게 그런 욕망 욕구가 그게 멈출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멈출 수는 없지만 (..) 탄소 배출을 좀 적게 함으로써 그게 그렇게 우리가 자연 재해가 좀 적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이지. (..)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다. 나아가야 된다. (B_3차)

B는 인류도 "자꾸 발전해"왔다고, "네안데르탈인 뭐 크로마뇽인 쭉쭉 진화"하며 "올라왔"다고 인식한다. 이제껏 그래왔듯이 진보는 계속된다. 이 진보와 진화의 여정에서 인간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기후변화도 종국에는 해결할 것이다.

>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분야에 가능한,

공해를 덜 생산하려고 그러고, 그런 자제를 엄청 하고 국가적으로 각 수반들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유엔이 있고 해가 자꾸 그렇게 줄여 나가자고 협의하잖아요. 협의해도 잘 안되지만은 그래도 만나, 안 되지만은 또 만나고 또 또 회의해 보고 또 회의해 보고 하는 가운데 좀 나아진다. 또 시민단체도 자꾸 고발고발고발함으로써 개선이 금방 단박에 안 돼도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어진다. (B_3차)

B는 과학기술에 특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인류의 미래는 “오폐수”나 “공장” “꿀뚝”의 매연을 “완전 정화시키는 기술”이나 전기자동차 등의 기술 발전, 아니면 결국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달나라로 이주를 해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왜 달나라를 우리 왜 갔냐 그러면. (...) 그렇게 해가지고 언젠가 우리 과학자들이 지구는 변한다, 멸망할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우리 후손을, 인류는 항상 이렇게 또 딱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달나라 간다든지 화성을 간다든지 이런 거는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다 죽고 난 뒤에 앞으로 몇십 년 몇 백 년 후에는 또 달나라 가가지고 지금 인간들이 정착을 하면서, 또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물론 공기가 있느냐 없느냔데 그 가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면은, 또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또 만들겠지. 그죠? (B_3차)

선형적인 진화론적 역사관과 위계관에 기반한 생존주의 마음의 도식에서 국민, 혹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언제나 상승이자 끊임없는 발전이다. 그로 인해 인류는 종국에는 파멸에 이르거나, 혹은 파멸한 지구를 두고 새로운 둥지를 찾아 떠날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 내지 상상의 도식에서 인류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다. 체념적 생존주의

A, C와 D는 지구적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 한계를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B도 기본적으로는 지구적 한계를, 인류가 발전할수록 “지구의 모든 자원은 고갈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 이 지구라는 것은 요 하나의 딱 정해진 덩어리잖아요. 여기에서 인류가 살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인류란 것은 몸뚱이 하나밖에 없이 태어났잖아. (..) 이게 지구 안에 있는 거를 다 이용해서 쓰는 거잖아. (..) 결국 지구에 있는 거를 갖다가 결국 꺼내쓰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 지구에 대한 모든 지하자원 이런 거 다 꺼내쓰다보니까 지구가 아프다고 소리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지구가 병들고, 기후 변화가 생기고, (..) 지구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 없어. 인류가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하고 뭐하면 할수록 지구는, 내 생각이야 지구의 모든 자원은 고갈이 된다. 그러면서 고갈되는 만큼 그에 대한 환경 모든 게 아무리 우리가 폐수를 갖다가 정화시키고 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폐수는 폐수거든 이게 폐수가 뭐 어디 뭐 달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B_3차)

B를 포함한 참여자들은 현대의 발전을 이루는 기반이 결국은 지구환경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는 참여자들이 어린 시절 시골에서, 혹은 대부분 논밭이던 서울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관계적 인식이다. 서울이 고향인 D도 논에서 피를 뽑고 도랑에서 미꾸라지를 잡던 때를 기억한다.

> D: 우리 때는 (..) 사람이 저 피라고 뽑는 게 뭐냐면 풀이야. 그 풀을 뽑아줘야 그 영양분이 덜 뺏기니까 벼 이삭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논 옆에 이렇게 보면 요렇-게 도랑이 있어. 거기에 보면 우렁이라는 게 있어. 미꾸라지가 그런 데서 사는 거야. 그걸 잡아서 해가지고 먹어. 그러니까 자연이야. 지금 우리 추어탕 하는데 그건 양식이야.
> 연구자: 그게 어디에요? 그거 하셨던 데가 어디예요?

D: 맨~ 대한민국의 전체 논이 그랬었어.
연구자: 서울에.
D: 서울뿐만 아니라 다 그랬어. (..) 그런데 지금은 뭐 비료 주고..비료래는 건 성장을 잘하기 위해서 약품을 주는 거 아니야. 청정이 아니잖아. 제초할 때 풀을 죽이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리잖아. 그 풀을 강제로 죽이는 거라고. 그 약품이 얼마나 세겠어. (D_3차)

참여자들의 이러한 자연 경험과 인식, “풀을 강제로 죽이는” 제초제의 위력을 인지할 수 있는 감수성은 2021년 기준 인구의 91.8%가 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는 현대 한국의 환경교육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체득하도록 하려는 주요목표 중 하나다(남미리 외, 2019). 이는 60대 이상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세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요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60대 84.7% / 평균 73%, KEI, 2021). A도 비료 등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인공적인 방식이 인간에게 결국에 해가 된다고,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A: (...) 시금치 성장하기 위해서 비료를 주잖아 그치? 인공비료를 주잖아~(...)
연구자: 그러면 사실 생산력을 높인다 이런다는게 결국은..
A: 결과적으로 그거는 인체에는 안 좋은거야. 안 좋은건데 지금은 할 수 없잖아. 산업사회가 되고 국민들 이제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나마 그런거라도 많이 먹어야되는거야. (...)
연구자: 근데 앞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계속 더더 막 할텐데..
A: 할 수밖에 없지. 할 수밖에 없지.
연구자: 이제는 그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A: 왜냐하면은! 사람이 먹고 살아야되니까. 먹고 살아야되니까. 먹고 살아야되니까.
연구자: 이제는 먹고 살지 않아요?
A: 먹고 사는게 하루 먹고! 그게 아니잖냐. 지속적으로 먹고 살아야되잖아. (*목소리를 올리며) 지속적으로 먹고 살아야되는거 아니야. 그러면 잘먹은 사람은 더 잘먹어야돼. 인간은. (A_4차)

참여자들의 관계적인 인식 및 생태 감수성은, 그러나 당장의 생존에 밀려 배경으로 남는다. 어린 시절의 풍부한 자연은 참여자들에게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노스탤지어로 남게 되었다.

> 육십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고향에 냇물이 졸졸졸졸 흘른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앞에 가면 메기도 잡고 뭐도 잡고 했단 말이야. 피래미도 잡고, 지금 그런게 없잖아, 응? 그게 이제 서서히 [변]하니까 못 느끼는 거지. 그지? 지금 이제 내가 60년대를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10살 때는 (..) 그냥 고기 먹고 싶으면, 그냥 고기는 없으니까 물고기 잡아먹는 거야. 이 천방해놔, 천방이란게 뭔지 알아? 강물에 돌덩이, 돌덩어리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러면 고기가 고 안에 몰려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며칠 후에 가보면 고기가 소복히 들어 있는 거야. (..) 우리 큰애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고 냇물에 가서 가면 골뱅이하고 (..) 그 뭐야 미꾸라지 잡았단 말이야. (..) [옛날] 우리 집 앞에. 지금 거 없단 말이야. (A_3차)

자랑스럽게 여겼던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잃게 된 것은 자연뿐이 아니었다. C는 한국은 위상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선진국이지만, “국민의식도 선진국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B도 그랬다.

> 국민의식을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선진.. 외국 사람…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상당히 남을 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남 배려를 많이 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게, 아직도 갑자기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 성장의 어떤 시간이 너무 빨리 속도가 나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왜, 내가 보면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내 자식, 뭐 뭐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B_2차)

C가 말한 선진국의 “배려”와 이타성은 예전에는 한국에도 있었다. 굶는 이웃들에게 밥을 나누던 그의 어린 시절을 지나며, 발전 경로에서

차차 잃게 된 것이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들” “살벌”(C)해졌다. D도 “중간[을] 뛰어넘어서 발전이 확확확확”되는 급속한 발전 속에서 공동체 의식이, 서로 돕는 문화가 점점 사라졌다고 진술한다.

D: 발전을 해가지고 모든 게 좀, 빨리 왔어. 다른 나라에서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빨리 온 거야.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보다도 엄청나게 빨리, 단시간에 이렇게 왔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공백이 있는 거야. 그게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없어. 한국 사람.
연구자: 그 전에는 있었는데..
D: 전에는 그냥 그 의식 자체를 모르고 그렇게 산거야 더불어. 마을, 우리 마을이면 우리 마을끼리 이렇게 좀 나눠먹고 이렇게 서로 이런 그 저.. 그니까 니꺼 내 거 따지는 게 좀 덜했지. 있기야 뭐 내 물건 내 집, 그러니깐 그런, 빗자루질을 해도 옆집도 이렇게 해 이렇게 해주고 길이 이렇게 쭉 하면 그 저 비가 눈이 많이 오면 같이 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점점점 없어진거야. (..) 그게 공동체라고 그러지. 그게 옛날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공동체라는 개념 없이 서로 이렇게 도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아파트가 발전하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 내 생각만 하는 거지. 남 생각 안해.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 너무 많지. (D_3차)

급속한 성장과 개발 속에서 참여자들의 자연과 공동체와 고향은 사라져갔다. 서울이 고향인 D는 지금도 어릴 적 살던 동네에 지금도 살고 있지만,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어릴 적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친구들과 뛰어놀던 골목은 없어졌다. D는 “고향이 없”다고 표현했다.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태어난 놈이, 내가 찾아갈 그…고향이 없는 거야. 서울이 다 내 고향이 아니잖아. 그럼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사는 삶에 있던 그 자리가, (..) 그게 없잖아. (..) 여기 경복궁하고 아현동인데 그게 아파트로다, 들어서고 나니깐, 지끔도 우리 고향 친구들 셋하고 같이 식사하고 소주 한 잔 먹고 하는데, 없잖아 없어. 갈 데가. (..) 향수가 없어. (..) 외국은, 하다못해 일본만 해도, 근본적인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빼놓고

개발을 해. 우리는 그게 (..) 개발하면 끝 아니야. (D_4차)

A, B와 C는 십대 혹은 이십대에 상경하여 정착하게 된, 소위 말해 '개천의 용' 들이다. 모두들 자연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C는 한때는 수도권에 별장을 두고 오가다가 지금은 관리가 힘들어 정리했다. A는 향후 언젠가 고향 동네에 가서 사는 것이 소망이다.

농촌에 가가지고 그냥 닭이나 몇마리 키우고, 거 뭐 그거나 키우고, 꽃이나 내 좋아하는 꽃이나 쫙-심어놓고, 사시사철, (…) 촌에 가면 조금 사람이 이렇게, (..) 공기 좋고 (..) 좀 여유가 있어. 사람 마음이 조금 이렇게 순화돼. 자연 보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쉽게 말해서 지금도 아직 그거는 변함이 없어. 조금 이따 내 그 되면은,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고향 주변에 고향 주변에 살아서 내가 살았던, 그 놀았던 그 지역을 꾸준히 답사하면서 살고 싶어. 소 먹였던데, 뭐 이렇게 고래 했던데 뭐 이런 걸 쭉 이제 돌아보고, 살고 싶어. 그런 게 있지. 있는데 여건에 지금 이제 그게 좀 그렇잖아. (A_3차)

"마음이야 꿀뚝같지" 만, 현실적인 여건상 지금의 도시를 떠날 수 없는 것은 B도 마찬가지다. B도 A도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애청하며 동경했다.

[예전에는] 참 청정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살고, 살면서 사람도 어차피 도시에 살면 자식하고 살아야 되고 다- 이 환경을 떠날 수 없으니까 살고 있는데, 도심을 떠나가지고 그 좋은 데 살고 싶은 마음이야 꿀뚝같지. 그래서 지금 우리 TV 보면 자연인 이래쌌잖아. 자연인 그래 나오지. 그때는 지금 아버지 세대 이런 사람은, 야 저래 살아야, 저래 살아야 되는데 공감을 많이 느낀다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 될 뿐이고 못 살고, (...) 지금은 어차피 뭐 우리 이쟈 생활 젖어 있으니까 그, 저리 살아야 된다는 생각 느끼면서, 외토리로 살아서 안 된다, 다 같이 저래 살면 괜찮은데, 저거는 막,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B_3차)

참여자들이 생존을 위한 전국가적인 레이스에서 평생을 뛰는 동안, 1980년대 1,000불을 목표했던 국민소득은 2021년 3만 5천불을 넘어섰고, 이제는 5만불이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그동안 동네에 넘쳐나던 “살구, 복숭아, 또 호두”, “천지빽가리”던 밤, “어느 산에 가도” 다 있던 도롱뇽들(A)은, “맹꽁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천연기념물이” “허다했”던 자연(B)은, “이웃이 밥을 못 먹으면” 여유 있는 집에서 “큰 가마솥에 일부러 불을 약간 따뜻하게 해서 밥을” 나누던 마을은, “한강에 얼음이 어는 게 삼십센치 오십센치”(D)이던 겨울은 닿을 수 없게 사라져갔다. 참여자들은 사라져가는 것을 눈으로 쫓고 있으나, 달리기를 멈출 수는 없다.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지구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당장의 생존을 우선해야 하는 참여자들의 생존주의를 이 연구에서는 ‘체념적 생존주의’라고 이름한다.

> 사람은 뭐든지..절박감이 있어야 되는거야..(…) 인간은 절박할 때 뭔가 나오는거야. 절박해야돼. 나는 어릴 때부터 빨리 내가 커서~ 우리집을 빨리 부자시켜야겠다, 그것뿐이랬어 국민학교 3학년때부터랬어. 하-뭐 집에 가서 공부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그냥 뭐 공부는 뭐 그 대충 하면 되는거고 공부해가지고 돈 버는 거도 아이고. (…) 4학년 때 내하고 굉장히 좋은 선생님 만났어. 심상택이라고 있어. 심상택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 양반 그랬어, ㅇㅇ야-니는 앞으로,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머리도 좋고 하니까 훌륭한 사람이 될거야,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 응. 그랬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오냐고! (..) 지금 당장 우리 집안이 가난한데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지. 집에 가서 나는 그랬어 그때만 해도, 집에 가서 내가 열심히 해서 아버지 도와가지고 농사 짓고, 소 키우고 뭐하고 하면 자동적으로 부자 되지 않겠나 난 그렇게 생각했어~ (…) 내가 앞으로 무조건 커가지고 빨리 우리집을, 부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했어~ 절박함이 있었던 거지. 그게 내 성격 형성을, 지금까지 형성한거지. 부자만 되면 자동적으로 난 모든 게 다아~ 풀릴 줄 알았어. 그게 아니잖아! 아니잖아..(A_4차)

김홍중(2015b)은 한국의 20세기 성장을 주도해나간 주체들을 파우스트

에 빗댄 바 있다. 파우스트는 “언제나 열망하며 노력하는 자”로서, “오로지 갈망하고 그것을 이룩하였고, 또 다시 소망을 품고서는 그다지도 기운차게 일생을 돌진해왔다”(괴테, 김홍중(2015b)에서 재인용). 생존에의 열망을 동력 삼아 달려와 “국민의식”은 “좀 부족”(C)한 선진국이 된 한국 사회는, 이제는 그 달리기가 배태한 새로운 생존 위기 - 산업발전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위험사회로부터의 생존 - 를 맞닥뜨리고 있다.

Ⅴ. 결 론

1. 연구의 요약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대응은 약한 한국인들의 기후 태도를 기후회의론의 일종인 대응회의론으로 바라보고, 이 대응회의론이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에서 형성되는 과정의 한 축에 생존주의에 기반한 국가·성장주의가 주요하게 역할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위태로운 분단 상황과 세계 속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단히 발전해야 한다는 생존주의에 기반한 성장주의 세계관은 국가 단위의 세계관, 인간 중심의 자연관, 사회진화론의 선형적 역사관에 기반한다. 여기에서 기후변화는 문제화되지 않고, 환경은 주변화되고 타자화된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60대 이상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다. 이들은 일차적으로 국가중심의 문제해결 담론으로 기후·환경 문제에 접근한다. 그러나 국가 중심의 문제해결은 국가가 풀 수 없는 기후변화 범주에서 결국 한계에 부딪친다. 동시에 참여자들은 이를 정당화하는 수사(“이 쬐끄만 나라에서 뭘하겠어“, “중국을 봐”)를 공통적으로 활용한다. 사실 대부분 참여자의 미래인식에서 드러나는 환경담론은 지구적 한계로부터의 생존을 위한 규제를 주장하는 드라이젝(Dryzek, 1997)의 생존주의*다. 다만 참여자들은 생존주의* 차원의 해법을 주장하지 않는데, 우선 장기적 생존이 당장의 경제적 생존에 밀리며, 해법에 있어 참여자들에겐 주도권이 없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의 위계적 세계관에서 세계적 차원의 행위 주체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이다. 그러나 대부분 참여자들은 선진국들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 믿지 못하고, 따라서 지구는 언젠가 멸망할 것이라 본다. 이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지구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당장의 생존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참여자들의 생존주의를 ‘체념적 생존주의’라 이름한다.

참여자들의 생존주의 가치관은 삶의 경험에서, 국가의 생존지향적 발

전주의 제도화의 압력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었다. 이 생존주의 가치관은 참여자들과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태극기 집회, 보수 유튜브 등의 해석 ·학습공동체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탈원전 등의 새로운 사건들을 해석하며 재생성되고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참여자들은 새로운 사건들을 기존의 해석 도식에 맞추는 '동화' 차원에서 학습을 지속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시사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향후 기후·환경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기후·환경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은 한국 사회·집단·개인의 다양한 요철 - 특히 대응회의론과 생존주의 - 을 고려하여 계획될 필요가 있다. '알면 행동할 것'이라는 계몽적 교육은 유효할 확률이 낮다. 또한 기후회의론자 및 보수층에의 기후·환경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모색한 선행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혼지와 필딩(Hornsey & Fielding, 2020)은 기후회의론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사람들의 심층 동기에 호소하지 않는 정보 중심의 논쟁보다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심층 동기를 가려내고 그에 알맞은 논거를 제시하는 '주짓수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볼스코(Wolsko, 2017)는 환경적 메시지가 진보층이 중시하는 돌봄과 공정·정의의 가치에 편향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면서, 보수층이 중시하는 집단에의 충성, 권위 존중, 신성함 등의 가치로 환경 담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둘째, 기후·환경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은 국가뿐 아니라 동네, 지역, 세계 등의 중층적 지역 범위와 주체를 다양하게 포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에 의해 틀지어진(framed) 환경인 '국가-자연'(Whitehead et al., 2007)이라는 개념을 빌려 참여자들에게 '국가-자연', 즉 환경이 협소화되고 주변화되어왔음을 발견하였다. 참여자들은

기후변화 등 지구 차원의 환경문제들을 국가 단위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 단위의 환경 인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화이트헤드 외(Whitehead et al., 2007)는 기후변화가 '국가-자연' 틀짓기 수용력 너머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체제는 여전히 기후대응을 담당하는 핵심 주체로 남아있다는 역설을 언급한다. 또한 환경정책 실행에 있어 주요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과 지구 단위에서도 '국가-자연'에서 발생했던 자연의 단순화 및 추상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언급한다. 환경은 국가 단위를 버림으로써가 아니라 지역과 지구 등 다양한 규모의 단위들을 국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포괄함으로써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 단위의 중층화는, 국경이 바다와 휴전선에 면해있어 환경 인식이 국가 단위에 매몰되기 쉬운 한국에서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후·환경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과정은 현 사회에 대한 성찰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의 자연 경험으로 체득한 자연과의 관계성, 그리고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사고방식, 절약하는 생활습관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 시민으로서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는 참여자들 세대의 보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특성일 수 있으며, 다른 세대가 배울 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이 중 어린 시절 자연 체험은 다수 연구에서 환경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의 가치와 태도와 행동에 핵심 영향을 준 의미있는 삶의 경험(Significant Life Experience: SLE)으로 꼽힌 바 있으며(Tseng & Wang, 2020), 현재 환경교육의 역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참여자들의 주요 가치관을 틀 짓는 것은 생존주의와 진화론적이고 위계적인 세계관의 상시적인 중력이다. 진화론과 위계론 종횡의 직선적 세계관과 생존주의의 중력 아래서 기후위기는 환경의 전철을 밟아 다시금 협소화되고 주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회의 중력을 인정하고 분명히 목도하는 것으로부터 기후·환경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안전하게 소통하고 갈등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론장을 특히 지역 단위에서 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인과 집단의 메타 인지 메커니즘, 즉 관계망이자 집합 인지체계를 풍부화하여 동화가 아니라 수용의 학습 가능성을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공론장의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성찰과 심의를 바탕으로 하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그간의 논의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임동균과 나윤영, 2021; 차성수와 민은주, 2006).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고 세계는 무한 생존경쟁의 장이라는 세계관과 선형적인 역사관과 위계관에 기반한 생존주의의 균일한 토양에서 파국의 미래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파국이 아닌 미래를 상정할 수 있는 다른 세계관 및 존재론의 가능성은 이질적인 생각들이 서로 소통하고 마찰하는 장에서 발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인간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 외 세계'와의 소통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성을 시도할 수 있다는 드라이젝(Dryzek, 2005)의 제안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3. 향후 연구과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정치적으로나 세대적으로 극단에 있다고 여겨지만, 이들의 기후·환경 인식과 내러티브는 이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곳곳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 한국전쟁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흐려지고 있으나, 분단의 체제와 생존주의의 작동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박정희 정권의 '발전국가'의 '근대화'는 문민 정부의 '세계화'로,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로 이어졌다(김종태, 2014). 1970년대의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목표는 문민 정부의 1만불 목표로, 참여 정부의 2만 불 목표로, 박근혜 정부의 474(잠재성장률 4%, 고용율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불)로 이어져왔다. 20대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연설에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한 "도약과 빠른 성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미선·박복자(2021)은 초중등 교과

서를 분석하여 자유와 경쟁은 발전의 원천으로 제시되며, 자연은 경제적 이윤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화' 차원에서 성장주의의 학습을 지속하는 것이 비단 참여자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교육의 모습은 아닌지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들과 같은 세대이면서 기후대응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연유와 동기로 행동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혹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다른 세대들은 기후·환경에 대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다른 집단, 다른 세대에서는 어떻게 대응회의가 형성되며 어떤 논리로 뒷받침되는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추후에도 대응회의와 생존주의의 다양한 결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이 연구는 그 연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의 일부 참여자들은 기후대응 등 환경 문제 해결에 개인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검절약 등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을 지속해나가고 있었다. 이는 기후·환경 대응의 관점에서는 믿지 않으면서도 행동하는 독특한 사례다. 참여자들의 친환경적인 생활은 참여자들의 어린 시절 자연 체험과 빈곤의 경험에서 틀지어져 습관과 경제적 동기 등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추론된다. 향후 참여자들 세대의 환경 인식과 습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또한 기후 행동에 대한 믿음이 개인의 친환경적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믿음 외 다른 영향요인을 밝히는 연구를 통해 환경교육 및 커뮤니케이션에의 흥미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논문 및 단행본>

(국내)

강원택. (2005).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 · 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2), 193-217.

강유진 & 한경해. (2002). 한국여성노인의 생애사 분석에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인생전환점, 삶의 맥락, 적용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99-126.

구도완 & 홍덕화. (2013). 한국 환경운동의 성장과 분화: 제도화 논의를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17(1), 79-120.

구도완. (1993).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와 특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83-91.

권명아. (2009). 식민지 이후를 사유하다, 책세상

권혁범. (2000).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 한국 반공주의의 의미 체계와 정치 사회적 기능. 조한혜정・이우영 엮음, [탈분단 시대를 열며: 남과 북, 문화 공존을 위한 모색], 서울: 삼인.

김남수. (2013). 기후 변화 회의론에 대한 고찰과 기후 변화 교육의 함의. 환경교육, 26(1), 62-78.

김덕영. (2014). 환원 근대: 한국 근대화 와 근대성 의 사회학적 보편사를 위하여. 도서출판 길

김병곤. (2011).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특징: 근대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8-35.

김보현. (2006). 박정희 정권기 경제 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Vol. 9). 갈무리.

김서용 & 김선희. (2016). 기후변화 의식과 대응행동 결정요인 분석. 행정논총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4.

김석수. (2002). 공리주의, 합리성 그리고 한국 사회. 사회와 철학, (3), 117-144.

김신영 & 윤순진. (2013). 4 대강사업을 둘러싼 개신교 내부의 입장 차이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보수 개신교계의 침묵과 동조를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17(2), 175-225.

김연주. (2018). “대한민국 탈(脫)원전 정책의 결정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순 외. (2018). 질적 연구의 즐거움, 창지사

김영천, 이현철 편저. (2017). 질적연구 : 열다섯 가지 접근, 아카데미프레스

김영천, 정정훈. (2021). 사회과학을 위한 질적연구 핸드북, 아카데미 프레스

김왕배. (2017). 언어, 감정, 집합행동: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7-59.

김원. (2008). 미래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박정희 시기 근대화 속에서 잊혀진 이야기들. 역사비평, 228-258.

김종태. (2014). 한국 발전주의의 담론 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교. 경제와사회, 103, 166-195.

김준수. (2018). 한국의 생산: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와국가-자연의 조정.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54-171.

김진욱, 허재영 (2018). 인정을 위한 저항. 한국정치학회보, 52(2), 53-80

김홍중. (2015a). 성찰적 노스탤지어: 생존주의적 근대성과 중민의 꿈. 사회와이론, 33-76.

김홍중. (2015b). 파우스트 콤플렉스, 사회사상과 문화, 18, 237-285.

김홍중. (2016). 사회학적 파상력, ㈜ 문학동네.

김홍중. (2017). 생존주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죽음의 문제. 사회사상과 문화, 20(4), 237-273.

김희경. (2012). 생태시민성 관점에서 본 에코맘과 교육적 함의. 시민교육연구, 44(4), 55-75.

남미리, 류미, & 주은정. (2019). 도시 생태교육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생태적 정체성 형성 과정: 인공새집 모니터링 사례를 중심으로. 환

경교육, 32(4), 498-513.
노진철. (2008). 환경문제의 역사: 산업공해, 환경훼손 그리고 환경위험.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47-68.
노환희, 송정민, & 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 효과: 1997 년부터 2012 년까지의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2(1), 113-140.
문성훈 (2018). 태극기 군중의 탄생에 대한 사회 병리학적 탐구. 사회와 철학(36), 1-30
문화체육관광부. (2020), 기후변화 및 저탄소생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박명호. (2009). 2008 총선에서 나타난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에 관한 분석: 386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8(1), 65-86.
박선영. (2020).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의 조우와 내적 갈등: 한국 이주노동자의 구술생애사를 통하여. HOMO MIGRANS, 22, 229-256.
박영균. (2010). 분단의 아비투스에 관한 철학적 성찰. 시대와 철학, 21(3), 369-411.
박재홍. (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사회, 10-34.
박정희. (1997). 국가와 혁명과 나, 지구촌
박찬승. (1996). 기획 2: 사회진화론 수용의 비교사적 검토 한말 일제시기 사회진화론의 성격과 영향. 역사비평, 339-354.
박해남. (2019). 한국 발전국가의 습속개조와 사회정치 1961~ 1988. 경제와사회, 344-380.
박희제 & 허주영. (2012). 누가 기후변화회의론자인가?: 정보획득노력, 과학신뢰도, 정치성향이 기후변화인식에 미치는 영향. 환경사회학연구 ECO, 16(1), 71-100.
신형기. (2012). 베트남 파병과 월남 이야기. 동방학지, (157), 79-112.
신형기. (2012). 혁신담론과 대중의 위치. 현대문학의 연구, 47, 263-295.
양웅석, 황선영, 강성식, & 강원택. (2018). '태극기 집회', 박정희와 한국 보수주의. 한국과 국제정치, 34(3), 1-31.

오세제. (2016).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윤순진. (2009).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환경사회학연구 ECO, 13(1), 219-266.
윤순진. (2016). 한국 언론기자의 기후변화 인식과 보도 태도.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 7-61.
윤택림. (2013).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이동성 & 김영천. (2014). 생애사 (life history) 연구에서의 일곱 가지 글쓰기 전략. 초등교육연구, 27(4), 77-103.
이승한. (2014). 기후변화의 인식유형 : Q방법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정석, 강택구, 조일현. (2018). 자기 및 집단 효능감을 통한 환경 친화적 행동 촉진에 대한 연구. 입법과 정책, 10(2), 401-428.
임동균 & 나윤영. (2021). 숙의민주주의의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방법론적 개선 방향. 사회과학연구, 32(2), 221-244.
장우영. (2018). 정치참여와 사회통합: 태극기집회 참가자 조사에 의거해서. [KOCEI] 선거연구, (9), 0-0.
전상진. (2018), 세대 게임 - 세대 프레임을 넘어서, 문학과세계사
정성호. (1999). 한국전쟁과 인구사회학적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조명래. (2006). 개발정치와녹색진보. 환경과생명.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차성수 & 민은주. (2006). 방폐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민주주의. 환경사회학연구 ECO, 10(1), 43-70.
채장수 (2018). 한국 보수진영의 위기와 보수주의의 특성. 정치정보연구, 21(2), 37-61
최병두. (2005). 자유주의적 환경론과 환경정의. 대한지리학회지, 40(6), 671-693.
최샛별. (2018),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 연대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최종숙. (2017). 촛불,태극기, 그리고 5070 세대 공감. 민주주의 이슈와 전망 (Online), 11, 1-21.

최현숙. (2017). 모든 밀려난 존재들의 악다구니는 아름답다. 문학동네, 24, 1-16.

한경혜. (2004).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노년학, 24(4), 87-106.

허석재. (2014). 정치적 세대와 집합기억. 한국학 (구 정신문화연구), 37(1), 257-290.

환경부. (2008/2018).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보고서

황선영. (2018). 정치 시위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 - 태극기 집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황진태 & 박배균. (2013). 한국의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연구를 위한 시론. 대한지리학회지, 48(3), 348-365.

KEI. (2020). 국민환경의식조사

(국외)

Adams, M. (2013). Inaction and environmental crisis: Narrative, defence mechanisms and the social organisation of denial. Psychoanalysis, Culture & Society, 19(1), 52-71.

Beck, U., Lash, S., & Wynne, B.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Vol. 17). sage. <국역> 울리히 벡 저, 홍성태 역. (1997). 위험사회 -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새물결

Blake, J., (1999). Overcoming the 'Value-Action Gap' in Environmental Policy: tensionsbetween national policy and localexperience

Brenan, M., & Saad, L. (2018). Global warming concern steady despite some partisan shifts.

Burgess, J., Harrison, C. M., & Filius, P. (1998). Environmental communication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environmental

citizenship. Environment and planning A, 30(8), 1445-1460.

Capstick, S. B., & Pidgeon, N. F. (2014). What is climate change scepticism? Examination of the concept using a mixed methods study of the UK public.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4, 389-401.

Carrus, G., Panno, A., & Leone, L. (2018). The moderating role of interest in politics on the relations between conservative political orientation and denial of climate change. Society & natural resources, 31(10), 1103-1117.

Christoff, P. (1996). Ecological modernisation, ecological modernities. Environmental politics, 5(3), 476-500.

Corner, A. et al. (2011). Nuclear power, climate change and energy security: Exploring British public attitudes, Energy Policy 39 (2011) 4823?4833

Des Jardins, J.R. (2012). Environmental ethics, Cengage Learning, <국역> 조제프 R. 데자르댕 저, 김명식, 김완구 역. (2020). 환경윤리, 연암서가

Doan, M. D. (2016). Responsibility for collective inaction and the knowledge condition. Social Epistemology, 30(5-6), 532-554.

Donald, M. (2001). A mind so rare: The evolution of human consciousness. WW Norton & Company.

Ellsworth, E. (2005). Places of learning: Media, architecture, pedagogy. Routledge.

Falk, J. H. (2005). Free?choice environmental learning: framing the discussion.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11(3), 265-280.

Gifford, R. (2011). The dragons of inaction: psychological barriers that limit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American psychologist, 66(4), 290.

Haltinner, K., & Sarathchandra, D. (2021). The nature and nuance of

climate change skepticism in the United States. Rural Sociology, 86(4), 673-702.

Hines, J. M., Hungerford, H. R., & Tomera, A. N. (1987). Analysis and synthesis of research on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A meta-analysis.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18(2), 1-8.

Hodenberg, C., (2005). Generationen. Zur Relevanz eines wissenschaftlichen Grundbegriffs.(Jureit, U., & Wildt, M., Ed.) Hamburg: Hamburger Edition, <국역> 호덴베르크 (율리케 유라이트, 미하엘 빌트 공편), 한독젠더문화연구회 역. (2014). "세대"란 무엇인가? - 카를 만하임 이후 세대담론의 주제들, 한울아카데미

Hornsey, M. J., & Fielding, K. S. (2020). Understanding (and reducing) inaction on climate change.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14(1), 3-35.

Hornsey, M. J., Harris, E. A., Bain, P. G., & Fielding, K. S. (2016). Meta-analyses of the determinants and outcomes of belief in climate change. Nature climate change, 6(6), 622-626.

Hungerford, H. R., & Volk, T. L. (1990). Changing learner behavior through environmental education.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1(3), 8-21.

Ickes, W., Patterson, M. L., Rajecki, D. W., & Tanford, S. (1982). Behavioral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reciprocal versus compensatory responses to preinteraction expectancies. Social Cognition, 1(2), 160.

Inhelder, B., & Piaget, J. (1958). The growth of logical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New York: Basic Books.

Jacques, P. (2006). The rearguard of modernity: Environmental skepticism as a struggle of citizenship.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JS Dryzek. (1997). The politics of the earth, Oxford University Press <국역> 존 S. 드라이젝 저, 정승진 역. (2005). 지구환경정치학담론, 에코리브르, 서울

Kenis, A., & Mathijs, E. (2012). Beyond individual behaviour change: The role of power, knowledge and strategy in tackling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18(1), 45-65.

Kyburz-Graber, R. (2019). 50 years of environmental research from a European perspective.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50(4-6), 378-385.

Kyburz-Graber, R. (2019). 50 years of environmental research from a European perspective.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50(4-6), 378-385.

Lamb, W. F., Mattioli, G., Levi, S., Roberts, J. T., Capstick, S., Creutzig, F., & Steinberger, J. K. (2020). Discourses of climate delay. Global Sustainability, 3.

Lee, K., Gjersoe, N., O'Neill, S., & Barnett, J. (2020). Youth perceptions of climate change: A narrative synthesis.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limate Change, 11(3), e641.

Lejano, R. P. (2019). Ideology and the narrative of climate skepticism. Bulletin of the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100(12), ES415-ES421.

Lejano, R. P., & Nero, S. J. (2020). The power of narrative: Climate skepticism and the deconstruction of science. Oxford University Press, USA.

Mannheim, K. (1929). Das problem der generationen. Duncker & Humblot.<국역> 카를 만하임(1928/1929), 이남석 역(2020), 세대문제, 책세상

Marshall. (2015). Don't even think about it: Why our brains are wired

to ignore climate change. Bloomsbury Publishing USA <국역> 조지 마셜 지음, 이은경 옮김(2018), 기후변화의 심리학, 갈마바람, 서울

Norgaard, K. M. (2006). "We don't really want to know" environmental justice and socially organized denial of global warming in Norway. Organization & Environment, 19(3), 347-370.

Rahmstorf, S. (2004). The climate sceptics. Weather catastrophes and climate change, 76-83.

Rajecki (1982), Kollmuss, A., & Agyeman, J. (2002). Mind the gap: why do people act environmentally and what are the barriers to pro-environmental behavior?.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8(3), 239-260.

Ramsey, C. E., & Rickson, R. E. (1976). Environmental knowledge and attitudes.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8(1), 10-18.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ndon <국역> 에드워드 랠프 저, 김덕현, 김현주, & 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서울

Schmitt, M. T., Neufeld, S. D., Mackay, C. M., & Dys?Steenbergen, O. (2020). The perils of explaining climate inaction in terms of psychological barriers. Journal of Social Issues, 76(1), 123-135.

Signori, S., & Forno, F. (2016). Closing the attitude-behaviour gap: The case of Solidarity Purchase Groups.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science procedia, 8, 475-481.

Tseng, Y. C., & Wang, S. M. (2020). Understanding Taiwanese adolescents' connections with nature: rethinking conventional definitions and scales for environmental education.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26(1), 115-129.

WBGU. (2011). World in Transition: A Social Contract for Sustainability.

German Advisory Council on Global Change.
Weber, E. U. (2006). Experience-based and description-based perceptions of long-term risk: Why global warming does not scare us (yet). Climatic change, 77(1), 103-120.
Wolf, J., & Moser, S. C. (2011). Individual understandings, perceptions, and engagement with climate change: insights from in-depth studies across the world.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limate Change, 2(4), 547-569.
Wolsko, C. (2017). Expanding the range of environmental values: Political orientation, moral foundations, and the common ingroup.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51, 284?294.
Wouter Poortinga(2011) Uncertain climate: An investigation into public scepticism about anthropogenic climate chang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1(2011) 1015-1024p.
Zhou, M. (2015). Public environmental skepticism: A cross-national and multilevel analysis. International Sociology, 30(1), 61-85.

<기사, 웹사이트 및 기타>

“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 현황“,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0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358.php
대한민국 정부, 100대 국정과제, 2020년 9월
박재광. (2012). 한국 환경운동의 잘못된 진화 “김대중・노무현 때 국책사업 공사 중단으로 5조원 손실”. 월간조선.
사용후핵연료, 사실은요? 진실문답,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SNEPC) 원자력 위키, https://atomic.snu.ac.kr/index.php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과 재처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yeskrmc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reeId=010801&tabId=01&levelId=hm_150_0010
윤지로, ‘먹고사니즘’에 밀려… ‘불타는 지구’ 여전히 미래세대 몫으로 [심층기획-기후도 票가 되나요?], 세계일보, 2022.05.23.
이동훈, 2019.07.04., 네 갈래 태극기 집회… 총선전략은 “독자출마“ “보수통합“ 두 목소리, 조선일보
이오성, 최초의 ‘기후정치 세력’, 핵심 유권자 집단 될까, 시사인, 2022.1.24
정승임 외, 벌써 2년… 끈질기다 ‘태극기 집회’, 한국일보, 2019.1.18
정우식. (2019). [전문가칼럼] 태양광 가짜뉴스를 넘어. Electric Power, 13(1), 75-7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관북공업지역,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4857

Abstract

‘Survival’ before Climate and Environment

- A qualitative research on Perceptions and Beliefs on Climate and Environment of Participants in the Taegeukgi Rally -

HyeJung Shin

The Graduate School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public opinions on climate change, which are highly aware of the seriousness but weak in response and practice could be seemed response skepticism, a sort of climate skepticism. A topical life history qualitative interview data from four participants in the Taegeukgi rally indicates how response skepticism is formed and maintained. This study looks at the participants of the Taegeukgi rally as a political generation unit that shares strong growth ideology, nationalism, and anti-communism, having the 1970s during the Park Chung-hee regime as their ‘hometown of time’ which means critical period of life.

This study finds that nationalism and growth ideology based on survivalism is embedded at the core of response skepticism. The world view of growth ideology, absolutised by the precarious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and survivalism that it must develop constantly to survive competition in the world, is based on a linear historical view of

social evolution and state-centered, human-centered hierarchical ontology. Here, climate change is not a real problem, and the environmental issues are marginalized and otherized.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approach climate and environmental issues primarily through state-centered problem-solving discourses. However when this eventually faces limitations in climate change that the state cannot solve, the participants use the rhetorics("What can we do in this small country" and "Look at China") that justify it. They are pessimistic about the future of the planet. They recognize long-term global limitations but have no choice but to prioritize immediate economic survival. This study calls this survivalism of participants as 'survavalism with resignation'.

It can be inferred that the survivalist values of the participants were formed from the life experience of chaos and poverty before and after war, and embedding the survial oriented development ideology of the state and society. This survivalist value is being regenerated and reinforced through learning communities such as Taegeukgi rallies and conservative YouTube channels, which share similar values with the participants.

Climate and environmental communication and education in the future needs to be planned in consideration of such survivalist characterics of Korean society, groups, and individuals. The enlightening education with premise of "They will act once they get to know" is unlikely to work. Memories of the Korean War are gradually fading over time, but the division of Korea and the survivalism are still valid in Korean society. We can ask whether it is not just the participants but also the Korean society and education who continues survivalism and growth oriented assimilation learning.

The participants' perceptions and narratives of response skepticism

on climate and environment are not unique to the participants, but are quite universally observed throughout Korean society. Further studies on various spectrum of response skepticism and survivalism are required to answer the question of how response skepticism are formed and supported in other groups and other generations.

keywords : response skepticism, climate skepticism, survivalism, growth ideology, Taegukgi rally